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 KINU 정책연구시리즈 24-01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김진하·조한범·정성윤·오경섭·박형중·한기범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연구책임자 : 김진하(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경섭(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한기범(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연구지원 : 용혜민(통일연구원 연구원)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KINU 정책연구시리즈 24-01


발행일	2024년 3월 25일
저자	김진하, 조한범, 정성윤, 오경섭, 박형중, 한기범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 (02-2275-6894)
인쇄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ISBN	979-11-6589-171-8 93340
가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2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례

요약	9
I. 서론	15
II.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분석	21
1. 대남전략 전환의 주요 내용과 전략적 의도	23
2. 김정은 대남전략의 군사화 및 국제화 분석	48
III. 대남전략 전환의 배경과 대북통일정책 방향	69
1. 대남노선 변동에 대한 통시적 진단과 통일·대북정책 방향	71
2. 북한 대남전략 변동 및 도발 양상과 한국의 대책	98
IV. 한국의 전략적 대응	135
1. 북한의 핵 무력 정책과 대남전략 변화	137
2. 북한 민주화 및 평화통일을 위한 전략적 대응	163

V. 전략적 고려사항	181
참고문헌	199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5

표 차례

〈표 III-1〉 두 개의 상반된 전략개념과 그 구성 요소	87
〈표 III-2〉 김정은의 ‘대남사업 전환’ 관련 공개 지침	105
〈표 III-3〉 북한의 대남도발 유형	119
〈표 IV-1〉 주요 연구 질문	137
〈표 IV-2〉 주요 연구 질문 국제정치의 변화와 북한의 전략 전환	140
〈표 IV-3〉 북한의 2022년 핵무력정책법 주요 내용	145
〈표 IV-4〉 강압전략의 강도별 분류	147
〈표 IV-5〉 북한의 전략 선호와 북한의 전략 환경 유불리	150

〈그림 IV-1〉 향후 한반도 정세 전개 방향 149

이 과제보고서는 2023년 말 감행된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들과 전략적 시사점을 논의한 6인 저자 각자의 분석과 제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남북관계 전시(戰時)화 선언〉 최근 북한은 대남전략 전면 전환을 선포했다.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하고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고한다. ‘남조선혁명’과 ‘통일전선’ 구축, 그리고 ‘협상을 통한 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식의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철폐하고 핵 무력 등 군사력에 의존하는 ‘명토완정’을 대남전략의 주목표로 전면 에 내세웠다.

급기야 북한은 공세적 대남전략 전환을 헌법 조문화하겠다고 나선다.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헌법개정으로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표현들을 삭제하는 대신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 영역’으로서 ‘주권행사영역’, 즉 영토 규정을 삽입할 것과 전쟁 시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하는 문제도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대남전략 대외전략화 및 군사화〉 심지어 김정은은 최근의 갈등적 국제정세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한반도 문제에 접목한다. ‘국제적 정의’ 실현과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주장하며 ‘미국의 대결정책과 대한민국과 같은 노북국가들의 자멸적 망동’의 분쇄를 위한 ‘전쟁 준비 완성’과 ‘핵전쟁 억제력’ 확보, 선제공격권 등 공세적 핵사용을 암시하는 소위 핵 무력 ‘제2의 사명’을 강조한다. 확장된 핵 능력을 배경에 두고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적 갈등 전개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동요 조짐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현상질서 타파에 나서
는 모양새다. 한반도 현상변경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국제정세가 전개
되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며 이에 발맞추어 한국을 현상 유지 진영의
'취약 고리'이자 공략의 대상으로 특정하는 모습이다.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김정은 정권이 강행해온 '새로운 길',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전면에 부각된 전략 전환이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기실
그리 새롭지 않다. 북한은 세 번에 걸쳐 대남전략의 전면 수정을 감행
했다. 먼저 김일성은 1948년 정권 수립 후 정강 첫째 항에 '국토완정'
을 주창하더니 결국 남침을 감행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양대
방법론으로 '평화적 통일'과 무력을 동원한 '비평화적 통일'을 양날의
칼로 활용해왔다. 이번 선언을 통해 김정은은 속내를 드러내며 소위
평화적 민족통일 목표를 폐기하고 과거로 회귀하여 군사적으로 '령토
완정'에 나서겠다고 공세적이며 모험적인 대남전략을 들고나왔다.

〈핵 강압 강화 의도〉 북한은 한반도 현상변경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남 핵 강압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번 대남전략 전환 선언은 대미
핵 강압 외교 강화 의지를 드러낸 '목시적 선전포고' 성격을 띤다. 핵무
장을 활용한 북한의 향후 대남전략 시나리오는 ▲핵 강압을 통한 대남
제압, ▲핵 능력을 활용한 무력 통일,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한 안보
자주성 확보 등 세 가지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냉전기 핵 균형에
도달한 상황에서도 미·소 양국 모두 핵 강압 전략을 구사한 역사적
사례가 다수라는 점, 그리고 과거 확인한 핵 열세 상황에서도 대북한
적대시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핵 강압 전략을 빈번히 구사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판단해 볼 때, 북한이 핵 강압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핵 강압 전략에 대항하는 '역(逆)강
압 전략'이 요구된다. 힘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북한의 의지와 행동,

정책을 거부하고 억제하는 전략이다.

역강압 전략은 다음의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외교적 차원에서는 첫째, 북한의 핵 무력을 동원한 한반도 무력 통일이 인류 전체에 대한 핵전쟁 위협이라는 명분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가장 불리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동북아 정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와 중·러·북 3국 연대 약화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역내 영향력을 단기간 높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롭다. 셋째, 중국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One Korea 정책을 반대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이를 역으로 활용해야 한다. 안보 차원에서는 북한의 '묵시적 선전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 강화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의 신속한 제도화를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복합도발〉 북한은 핵전쟁 위협을 비롯해 국지 도발과 한국 사회 혼란 조성을 위한 사이버 공작을 병행하는 복합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단발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걸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도 영향을 미치며, ▲도발 귀책 사유를 한·미에 전가할 수 있거나 도발 주체가 모호한 회색지대 도발을 꾀할 것이다.

2026년 1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성과 거양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은 단발성보다는 효과를 보아가면서 강도를 점차 확대해 가는 점증형 도발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쟁위

기 조성과 항시화를 목적으로 고강도, 복합도발, 책임 전가형, 점증 성격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NLL·MDL 충돌이나 천안함 폭침 유사 도발을 시작으로 2013년 3월의 전방위적 전쟁 위협, 2015년 8월의 준전시상태 선포, 2017년의 핵미사일 도발이 함께 어우러지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 도발 공조 및 ‘핵 확산’ 협박 게임〉도 가능하다. 신냉전 대립 구도가 서서히 진영의 모습을 띠면서 중·러·북 삼국의 군사적 연동이나 도발 공조가 가시화될 수 있다. 2023년의 러·북 밀착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중·러와의 군사 공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공산이 크다. 심지어 사전 교감을 주고받은 군사적인 양동 작전 수행 등 적극적인 중·러·북 삼국 도발 공조도 가능성도 도외시할 수만은 없다. 북한은 국제 도발 공조로 진영결집 외교를 거세게 전개하며, 중·러를 자신들의 한반도 현상 변경 프로젝트에 끌어들여 평양의 이해 관철에 활용하는 동맹 연루 전략을 구사하려 들 것이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던 과거 도발 행태를 고려한다면 북한이 위기 상승의 위험 순간에 강압 효과 배기를 노리고 확산 위험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위험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한국의 도발 응징에 대해 더 큰 도발을 단계별로 응수하여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공포의 (위기 고조) 사다리’ 게임, ‘벼랑 끝 치킨게임’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신들이 설정한 위기 상승의 일정 단계에서 드디어 ‘전술핵 선제사용’ 협박을 선명한 가시적 형태로 제기할 수도 있다.

〈대내 통치전략〉 대남전략 전환의 대내 통치 전략적 목적도 간과할 수는 없다. 첫째, 주민의 남한 동경 차단을 위한 대남적개심 고취 의도

요 약

를 엿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 및 비사풍조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중으로, 한국의 자유로운 시민 정신과 자본주의 기풍이 은연중 전파되며 북한의 폐쇄적·독재적·수구적 질서에 대한 모멸과 비판 의식이 간접적으로 함양되는 파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주적으로 단정’하고 한반도 위기를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강력한 체제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둘째, 핵무력 건설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국가 자원이 핵무력 건설에 집중되면서 악화되는 경제난에 대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핵무력 건설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내부 요인이다. 김정은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의 시정 연설에서 미국이 “인민들의 불만을 유발해서 당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붕괴시키려한다”고 진단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핵정책을 지지·성원한다며 적들이 오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제 내부적으로도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김정은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남노선 전환을 통해 한국을 불변의 적대국으로 규정하여 핵무력 건설을 정당화하여 체제 엘리트와 인민들의 반대를 제압,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대내 통치용 전략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북한 민주화 및 자유 평화통일 기회의 창〉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전략 선언은 도전이자 기회다. 김정은의 위협은 위협한 도전이 목전에 닥쳤음을 예고하는 사태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북한이 반민족·반역사·반통일적 체제의 민낯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와 정통성을 계승하는 한반도 유일의 적통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민족사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요 약

독재정권, 반민족적 독재정권으로 전락했다.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적이 된 셈이다. 북한을 민주화·정상국가화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결의를 다져나갈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민족 정통성을 담지한 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할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2국가론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평화적 수단을 통한 1국가론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2국가론이 명분 없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체제 유지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통일 공세를 취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은 물론 전세계 한민족과 연대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내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민주 헌법 정신에 대한 확신과 결의, 그리고 의연하고 현명한 위기 대처로 닥쳐올 한반도 위기 상황을 오히려 통일을 향한 전기로 활용하는 지혜와 결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핵심어: 김정은, 대남전략 전면 전환, 교전국관계, 영토 평정, 반민족 반통일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features two large, overlapping circles. The upper circle is filled with a dense grid of small dots, while the lower circle is solid gray. Multiple thin, curved lines flow from the top left towards the bottom right, passing behind the circles.

I. 서론

저자 일동

북한은 대남전략의 전면적인 노선 전환을 감행했다. 2023년 12월 30일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관계’로¹⁾ 규정하면서 ‘근본적 방향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전면적인 ‘대남노선의 전환’을 공표하였다.²⁾ 이에 더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³⁾ 박차를 가하겠다고 남북관계 전시(戰時)화를 선언한다. 대남사업을 군사화하여 ‘남반부를 평정하려는 군대의 보조로 준비’하겠다고 공언한다.⁴⁾ 공격 의지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북한은 1월 5~7일 사흘간 해안포를 동원하여 백령도·연평도를 위협하는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1월 8~9일 군수공장 현지 지도 중에도 김정은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기회가 온다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한다.⁵⁾

급기야 북한은 대남전략 노선 변경을 헌법 조문화하겠다고 나선다.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가관계’임을 재차 강조하며, 헌법개정으로 새로운 대남노선과 입장은 물론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표현들을 삭제하는 대신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영역’으로서 ‘주권행사령역’, 즉 영토 규정을 삽입하고, 전쟁 시에는

-
- 1)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2체제-2국가론을 주창하였다고 해석한다. 북한의 현상 도전적 의도를 현상 유지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할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다. 북한의 목적이 영구분단 지속이나 공존으로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강조점은 민족 관계로부터 ‘한국을 분리’하여 ‘전쟁 중인’ ‘적대 국가’로 한국을 재규정하는 것이다.
 - 2)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12.31.
 - 3) *Ibid.*
 - 4)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4.1.16.
 - 5)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4.1.10.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하는 문제도 반영할 것을 지시한다.⁶⁾ ‘민족과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과거 시대 잔여물 처리’, ‘꼴불견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 개념 완전 제거를 지시했다.’⁷⁾ 남한과 완전한 단절과 적대로 북한판 ‘쇄국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정은은 갈등적 국제정세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한반도 문제에 접목한다. ‘국제적 정의’ 실현과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대결정책과 대한민국과 같은 노북국가들의 자멸적 망동’의 분쇄를 위한 ‘전쟁 준비 완성’과 ‘핵전쟁 억제력’ 확보, 선제 공격권 등 공세적 핵사용을 암시하는 소위 핵 무력 ‘제2의 사명’을 강조한다.⁸⁾ 국제정치와 동북아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자신들의 핵 능력의 변화, 그리고 기존 전략의 실패 등의 이유로 과감한 전략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북한의 전략적 선택은 새로운 냉전적 질서와 다극적 질서 부상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대외·대남 차원의 현상타파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전이자 기회이다. 물론 이번 북한의 대남전략의 공세적 전환은 우리로서는 위험한 도전이 목전에 닥쳤음을 예고하는 사태이다. 하지만 동시에 김정은 정권이 반민족 반통일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대한 우리의 오랜 노력에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패배의 시인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한반도 2국가론(Two Koreas)과 명백한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 인식을 드러냈다. 그가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공개적으로 포고한 것은 사실상 체제경쟁의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며, 북한이 주도하는 고려연방제와 통일전선 전략이 실현

6)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7) *Ibid.*

8) *Ibid.*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즉, 한국은 민족 정통성을 담지한 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할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김정은의 반통일 선언으로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와 정통성을 계승하는 한반도 유일의 적통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민족사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독재 정권, 반민족적 독재정권으로 전락했다. 김정은 정권은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적이 된 셈이다.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 인식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물론 전세계 한민족과 연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보고서가 작성된 근본 취지다.

본 보고서는 다음의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북한 대남전략 전면 전환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 의도를 평가한다. 둘째, 전략적 도발과 강압 강화 등 대남전략 전환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향후 행보를 예상한다. 셋째,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통일을 향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판독하기 위해 대남전략의 전면 전환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북한 대남전략 변동 배경과 파급 효과를 통시적으로 진단하고, 대남전략 변동이 시사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제Ⅳ장은 한국의 거시적인 전략적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핵 억제와 반(反)강압 전략에 대해 검토한 후, 이번 대남전략 전환이 열어 준 기회의 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민주화 및 정상화를 진전하고, 중국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논의한다. 제Ⅴ장은 결론에 같음하여

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각 연구자가 제시한 전략적 고려사항들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multiple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from the top left to the bottom right. Two large, grey, circular shapes are integrated into the design: one on the left side, partially overlapping the top curve, and another on the bottom right, partially overlapping the bottom curve. Both circles have a grid-like pattern of small dots on their right-hand side.

II.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분석

오경섭 (통일연구원)

김진하 (통일연구원)

1. 대남전략 전환의 주요 내용과 전략적 의도⁹⁾

오경섭(통일연구원)

가. 김정은의 선포 내용

김정은은 2023년 12월 31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결론을 통해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 노선을 제시했다.¹⁰⁾ 전원회의의 후속 조치인 대남·통일 노선 전환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은 2024년 1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나왔다.¹¹⁾ 새로운 대남·통일 노선의 핵심 요지는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고,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관계이고, 통일방안은 연방제통일을 폐기하고 전쟁 발발 시 핵무력을 사용한 무력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대남·통일 노선 전환은 남북한의 국력 격차와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상황을 인정하고, 간부들과 주민들 속에서 남한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할 현실적 요구에서 비롯됐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과 한국 주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에게 가장 중대한 체제 위협 요인이기 때문이다. 대남·통일 노선 전환의 핵심 내용은 남북관계 평가, 통일전략, 제도 정비(헌법 개정과 대남부문 조직 개편 등)로 구성된다.

(1) 남북관계 평가

김정은은 지난 80년의 남북관계를 실패로 단정했다. 김정은은

9) 이 글은 통일연구원에서 발행된 온라인시리즈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 노선 전환 의도와 대응”을 대폭 수정 보완했음을 밝힌다. 오경섭,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 노선 전환 의도와 대응,”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24-01, 2024.

10) 『조선중앙통신』, 2023.12.31., *op. cit.*

11)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사의 최종결론은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속에서 동족의 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¹²⁾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중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 한 기초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했다고 밝혔다.¹³⁾ 남북관계가 악화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반공화국 대결 정책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고, 9·19 남북군사합의 마저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결론에서는 윤석열피뢰정권이 들어앉은이래 줄곧 악화일로로 달음쳐온 북남관계가 최근에 와서 더 한껏 추악해진 역도의 반공화국대결망동으로 하여 불신과 적대를 덧쌓고 형식상으로나마 무력충돌방지라는 미약한 사명을 늘던 9·19북남군사분야합의의 파기라는결과까지 몰아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¹⁴⁾

그러나 남북관계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면서 악화했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무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까지 4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 실험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66차례 진행됐다.¹⁵⁾ 김정은은 한국 정부

12) *Ibid.*

13) *Ibid.*

14) 『조선중앙통신』, 2023.12.31., *op. cit.*

15) NTI, The CNS North Korea Missile Test Database, <nti.org/analysis/articles/cns-north-korea-missile-test-database/> (Accessed January 29, 2

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유엔안보리는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채택해서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까지 진행된 대북 제재 내용은 외화수입 차단조치, WMD 및 재래식 무기 금수, 북한 해외노동자 제한, 해상 검색·차단, 북한 섬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산업기계·운송수단·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조업권 거래 금지 명문화,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 확대 등이었다.

북한은 2018년 들어 북핵 협상을 통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해제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목적으로 대미·대남 접근을 시도했다. 북한은 미국에 접근해서 미·북 협상을 개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남 접근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남·대미 접근을 시작했다. 북한의 대미 접근은 성공적이었다. 2019년 2월까지 미·북정상회담이 2차례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의 대화 전략은 실패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 해제와 핵보유국 승인을 요구하면서 미·북 대화를 거부했으며,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미·북 대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9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 관계를 단절시켰다. 2019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 경제와 평화 체제 구축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삶은 소대거리가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특등머저리’, ‘태생적인 바보’, ‘저능한 사고방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난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군은 2020년 9월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표류 중이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면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안도 거부했다. 남북관계가 악화한 책임은 핵개발을 지속하는 김정은 정권에게 있다.

(2) 통일전략: 두 국가관계와 무력 통일 노선

통일전략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관계로 제도화하고, 연방제통일을 포기하고 핵무력을 사용한 무력 통일 노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한 체제의 성격은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다.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줄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이고, “사회전반이 양키문화에 혼탁되었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속국”이라고 지적했다.¹⁶⁾ 김정은은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의 대남 인식을 재차 강조했다.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므로 대등한 대화와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무력으로 평정해야 할 해방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¹⁷⁾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외세의 특등주구집단인 대한민국이 극악하고도 자멸적인 대결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이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면사포를 벗겨 놓은 조선반도의 실상”이라고 단정했다.¹⁸⁾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광증과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16) 『조선중앙통신』, 2023.12.31., *op. cit.*

17) 『조선중앙통신』, 2023.1.16., *op. cit.*

18) *Ibid.*

하여 통제불능의 위기 상황이고, 남북한의 무력이 대치된 군사분계선 지역은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반하는 김정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한국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배치되는 김정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남북 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제법상 개별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며,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초로 통일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헌법의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이 남한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임을 명시하려는 것이었다.¹⁹⁾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정통성과 법통성을 갖는 유일한 국가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휴전선 이북 지역은 반국가단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으로 규정한다.²⁰⁾

김정은의 두 국가관계는 1991년 12월 13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관계를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

19) 유진오, 『헌법해의』 (서울: 명세당, 1949), p. 50, 재인용: 김병기, “통일 관련 헌법 개정 사항 연구: 통일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2018, p. 24.

20) 오경섭 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 102; 김병기, “통일 관련 헌법 개정 사항 연구: 통일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p. 92; 제성호,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을 둘러싼 주요 쟁점: 법적 논리와 개정문제를 중심으로,” 법제처 연구보고서, 2008, p. 92.

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대화를 통한 연방제통일을 포기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사용한 무력 통일 추진을 선언했다. 그동안 북한의 통일전략은 2가지로 진행됐다. 하나는 연방제통일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무력 통일 노선이다. 연방제통일 노선은 남한 지하당 주도로 민중봉기나 선거 투쟁을 통해 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북 정권을 수립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에 성공하고, 북한 주도로 남한을 병합해서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수십 년간의 연방제통일 노력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 연방제통일(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을 포기했다. 남한은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니고, 그 연제가 되어도 통일을 성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한과 통일을 논하는 것은 자신들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자신들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²¹⁾

반면 김정은은 무력 통일 노선을 고수했다. 김정은은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사용해서 남조선 영토를 평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끄적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고, 미국에는 상상하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²²⁾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기정사실화하고, 남한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인민군의 강력한 군사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21) 『조선중앙통신』, 2023.12.31., *op. cit.*

22)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전쟁중인 교전국관계로 설정한 만큼 고강도 대남 군사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것이다. 대적·대외사업부문에는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대적·대외사업부문은 무력통일을 준비하는 인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남공작과 정보수집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3) 제도 정비(대남기구 폐쇄와 헌법 개정)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고, 대남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대남사업부문 기구들은 곧바로 정리됐다. 최선희 외무상은 2024년 1월 1일 리선권 통일전선부장 등 대남관계 부문 간부들과 협의회를 개최해서 대남 대적부문의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는 대책을 세웠다. 1월 12일 개최된 대적부문 일군들의 쉼기모임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설립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한다고 결정했다.²³⁾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경협과 교류협력과 관련한 기구들도 폐지했다.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은 과거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유지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를 단절한 상황에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했

23)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대남정책전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적 부문 일군들의 쉼기모임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4.1.13.

고,²⁴⁾ 남파간첩에게 지령을 보내던 평양방송을 비롯한 대남·대외 선전 매체들도 중단했다.

그러나 군사적 수단을 활용해서 대남공작을 수행하는 대적·대외사업부문은 대폭 강화할 것이다. 대남 투쟁원칙과 방향이 핵무력을 사용한 무력통일 노선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대적·대외사업부문의 임무는 남조선 영토 평정을 위한 조선인민군의 군사행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남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한 지하당 건설과 대남공작, 사회 불안정 조성 등이다. 대남공작은 2009년 초에 창설한 정찰총국에서 수행할 것이다.

북한은 대남 투쟁원칙과 방향 전환을 통해 핵무력을 통해 영토 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고강도 군사도발을 통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대남·대적부문의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더라도 한국 내 친북 성향 단체와 인사들을 관리하는 기구와 기능을 보존할 것이다. 1월 24일 윤미향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는 ‘통일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²⁵⁾ 북한은 한국 내에서 자신들의 무력 통일노선을 지지·지원하는 인사들을 관리·활용할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법적·제도적 조치를 제시했다.²⁶⁾ 김정은은 대남·통일 노선 전환에 조용하도록 헌법 정을 지시했다. 첫째, 대한민국은 타국이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는 내용을 신설하거나 추가할 것이다. 헌법에서는 서문(조국통일 관련 조항)이나 제1장 정치, 제4장 국방 관련 조항에

24)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25) “평화 위해서라면 北 전쟁관도 수용,” 『조선일보』, 2024.1.31.

26) 이하 5가지 헌법 개정 내용은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지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서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내용을 명시할 것이다.

둘째, 영토·영해·영공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하는 주권행사영역 규정하는 국가주권 행사 영역에 관한 내용이 신설될 것이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대책을 세울필요가 있다”²⁷⁾고 밝혔다. 영토 조항은 북한이 선포한 서해 해상경계선을 남쪽국경선으로 규정하고,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헌법에서는 제1장 정치 제3조나 제4조로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이다.

셋째, 전쟁 발발 시, 핵무력을 이용한 무력 통일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될 것이다. 김정은은 조선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의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헌법에서는 서문(조국통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제4장 국방에서 무력 통일을 수정해서 전쟁 발발 시, 핵무력을 이용한 무력 통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시할 것이다.

넷째, 민족 관련 용어는 삭제되고,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교육사상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김정은은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영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남북한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사상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해당 조문에 명기하라고 지시했다.²⁸⁾ 헌법에서는 제3장

27)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28) *Ibid.*

문화 제41조, 제44조, 제45조 등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것이고 제2장 경제 ‘민족경제’, 제3장 문화 ‘민족문화유산’, ‘민족간부양성사업’, ‘민족적형식’, ‘민족어’ 등의 용어를 삭제할 것이다.

다섯째, 통일 관련 표현은 삭제될 것이다. 김정은은 헌법에서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제1장 정치 제9조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삭제될 것이다.

김정은은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 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 상징으로 비칠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은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는 것을 비롯해서 접경지역의 모든 남북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는 대책을 실행해서 북한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²⁹⁾

나. 대남노선 전환 배경과 전략적 의도

(1) 주민의 남한 동경 차단 위해 대남적개심 고취

김정은 정권은 민족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이러한 대남노선 전환의 원인은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간부들에게서도 확산하는 남한에 대한 동경심과 친남한화를 방지하면 남한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지배층의 두려움과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 대한 자신감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서 친남한화가 축적되면, 일순간에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한 반대운동을 폭발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내부의 남한 동경과 친남한화를 가장 심각한

29) *Ibid.*

정권 위협 요인으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정권은 대남적개심을 고취해 북한 내부의 한류를 탄압하고, 남한을 동경하거나 추종하는 친남한화를 뿌리뽑기 위해서 대남노선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롭고 부강한 한국의 존재는 북한 체제의 중대한 위협 요인이다. 남북한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남한은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정치적 자유도 지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자유로운 국가’이고, 북한은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부자유한 국가’이다. 특히 북한 정권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이다.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하다. 2022년 기준 남한의 명목 GNI는 북한의 59.8배이고, 남한의 1인당 GNI는 북한의 29.7배이고, 남한의 무역총액은 북한의 892.1배에 달한다.³⁰⁾ 북한 주민들이 같은 민족인 남한을 동경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한다.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행을 꿈꿀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친남한화는 한류가 유입되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서는 2016~2020년 북한에서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탈북자들이 83.3%로 나타났다.³¹⁾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외부 세계를 동경했다.³²⁾ 북한 주민들은 CD, 메모리, 휴대전화 칩을 이용해서 한국의 영화·드라마·녹화물을 시청한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 사회를 한국 사회와 비교했고, 의사 표현, 외모 치장 등 자유로운

30)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비교”,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0>> (검색일: 2023.12.10.).

31)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p. 23., <https://unikorea.go.kr/nk_realities/ebook/index.html#page=68> (검색일: 2024.2.27.).

3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 196.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고민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한 탈북자는 한국 드라마가 북한 사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았으나 자본주의를 배우고, 바깥세상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³³⁾ 태영호 의원의 부인 오혜선은 자서전에서 “북한에서 사는 동안 한국 드라마는 나에게 자유를 향한 할 줄기 빛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동안은 북한의 암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고 언젠가 누리게 될 자유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³⁴⁾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남한을 선망했다. 한류는 간부들과 인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켰고 친남한화를 촉진했다. 간부들과 인민들은 남한을 동경하거나 추종하면서 남한이 적이라는 생각도 무뎠던 것으로 보인다. 한류의 확산은 북한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친남한화는 북한 체제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과 반대운동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체제 위협에 직면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은 현저한 국력 격차와 체제 경쟁의 패배로 인해서 심화하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친남한화를 근절할 대책을 실행했다. 코로나19 봉쇄를 명분으로 한 국경 통제는 탈북자들을 막고 한류 유입을 통제하려는 의도였다. 북한 정권은 2020년 8월 완충지대를 설치했고, 허가 없이 출입하는 자는 ‘무조건 총살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중북 국경의 철조망과 감시초소도 대폭 늘었다. 2022년 4월 회령시 인근 국경지대 7.4km 구간의 감시초소는 5개였으나 169개를 더 설치했다.³⁵⁾ 이는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 발생, 중북 주민 접촉, 외부 정보 유입 등을 통제하려는 조치였다. 중북 국경 경비가 강화된

33) *Ibid.*, p. 186.

34) 오혜선,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서울: 더미라클, 2023), p. 206.

35) “北, 코로나19 이후 북중국경지대 철조망·감시초소 대폭 늘려,” 『연합뉴스』, 2022.11.17.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다.³⁶⁾

북한 정권은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 각종 법안을 제정했다. 한류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은 청년 교양보장법(2021),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국가비밀보호법(2023) 등이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편집물·도서를 유입·유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법적 처벌만으로는 이미 간부들과 주민들 깊숙이 파고든 대남 동경과 친남한화를 근절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보인다. 변화된 대남·통일 노선은 한류를 접촉하거나 남한을 추종·동경하는 주민들을 반체제 이적행위로 간주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사상적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간부들과 주민들의 남한 동경과 친남한화를 이적행위로 몰아 처벌하고, 사상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 정권은 남한 영화와 드라마, 노래를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10대 학생 2명을 공개재판에 세웠다. 이 학생들은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³⁷⁾ 한류를 접촉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정권은 간부들과 인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추종을 근절하고, 체제 위협 요인인 한류를 강력하게 통제·탄압할 목적으로 민족을 부정했고,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관계

36)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op. cit.*, p. 32.

37) “‘한국 드라마 돌려본 죄, 12년 노동형’…북한 청소년 공개재판 영상 입수,” 『KBS』, 2024.1.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0823>> (검색일: 2024.2.4.).

로 규정했다. 그러나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은 김정은이나 김정은 정권이 정치적 이익과 필요에 따라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민족은 5천 년 역사를 거쳐 형성됐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공통의 혈통과 문화·정체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남북한을 다른 민족으로 규정하는 반민족적 노선을 채택하더라도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 핵무력 건설의 정당화와 내부 결속 강화

북한은 핵무력 건설의 정당성을 부각해서 핵보유 정책에 대한 내부의 반대와 비판을 제압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핵무력 건설로 인해 악화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대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로 인해 심화된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은 핵무력 건설의 정당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북한 정권은 간부와 인민들의 반대를 제압하고, 핵무력 건설을 정당화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한을 강력한 외부의 적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남한을 북한 체제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외부의 강력한 적으로 설정했고, 전쟁 중인 교전국이자 강력한 체제 위협 요인으로 규정됐다.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로 규정됐다. 김정은은 한반도는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고, 국가의 안전환경은 날로 악화일로를 기록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태한 전쟁 발발 위험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북한의 정권종말을 언급하고, 공화국 주변지역에 상시 주둔하다시피 하는 방대한 핵전략자산,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역대 최대규모로 전쟁연습을 벌이며, 한·미·일 군사적 결탁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과 노북국가인 남한의 자멸적망동은 자신들에게 군사력 강화의 정당한 명분과 압도적인 핵전쟁억제력 강화의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³⁸⁾ 북한은 전쟁시 핵무력으로 대

한민국을 점령·평정·수복한다고 주장하면서 핵무력 건설을 정당화했다.

경제난과 식량난은 핵무력 건설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코로나19 국경봉쇄,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화했다. 김정은은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 이후 수차례에 걸쳐 경제 정책 실패와 경제위기를 언급했다. 2020년 8월 당 전원회의에서는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³⁹⁾ 2020년 10월 당창건 75돐 열병식에서는 “이 행성에서 제재, 방역, 재해 등으로 엄청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말했다.⁴⁰⁾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는 최악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이라고 밝혔다.⁴¹⁾ 2021년 4월 당세포비서 대회에서는 “인민들의 고생을 덜기 위해 당조직들, 당세포비서들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언급했다.⁴²⁾ 2022년 6월 당 전원회의에서는 “인민들의 식량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식량 부족을 토로했다.⁴³⁾ 2024년 1월 당 정치국회의에서는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 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밝혔다.⁴⁴⁾

38)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3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의 결정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노동신문』, 2020.8.20.

40)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노동신문』, 2020.10.10.

41)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노동신문』, 2021.1.6.

42)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폐회사,” 『노동신문』, 2021.4.9.

4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2.6.11.

4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4.1.25.

식량난과 경제위기가 심화할수록 핵무력 건설 노선에 대한 경제관료, 무역회사와 무역일꾼들, 시장 참여자, 인민들의 불만도 커진다. 김정은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인민들의 불만을 유발해서 당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붕괴시키려한다”고 진단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핵정책을 지지·성원한다”, “적들이 오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 내부에 경제난과 식량난을 대가로 추진되는 핵무력 건설 노선에 대한 이상기류가 흐른다는 것을 시사한다.⁴⁵⁾

김정은은 2022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정비보강전략을 기본적으로 끝내자”고 하면서 경제간부들의 자립사상에 대한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가리켜 “낡은 사상이 잠재해 있다”고 비판했다.⁴⁶⁾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는 자립경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외부 세계와 적극적인 경제협력과 선진기술 도움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리킨다. 즉,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는 핵무력 건설을 포기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해서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여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⁴⁷⁾ 김정은이 경제일꾼들의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비판한 것을 볼 때, 경제일꾼들 사이에는 핵무력 건설 노선으로 인해 촉발된 경제난과 식량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3) 미국의 북한 핵 군축 주장 수용 유도

김정은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을 일으켜 정세가 불안해

45) 한기범,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서울: 선인, 2023), p. 475.

4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3.1.1.

47) 한기범,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p. 476.

질수록,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군축론을 수용하거나 핵비확산론을 꺼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미국과 한국의 북핵 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김정은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관계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전쟁 준비를 지시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괴멸시키고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평정·수복해서 북한에 편입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 전략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장기적·체계적으로 실행된다. 북한은 전술핵·전략핵무기를 대량생산·실전 배치해서 핵보유국으로 행동한다. 또한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외국 정부와 고위 관료들, 군사전문가들에게 확산한다. 북한의 핵포기 불가론은 핵무기보유국법, 핵무기 정책법, 헌법 등으로 뒷받침된다. 마지막 관문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핵군축론이나 핵비확산론을 올리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이 핵군축론과 핵비확산론을 꺼내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승인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 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교전국관계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 올린다고 예고했다. 북한은 대남노선 전환을 선언한 후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다. 북한군은 2024년 1월 5~7일 서해상에서 3일 연속 포사격을 진행했다. 북한군은 1월 5일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 1월 6일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 포탄 60여 발, 1월 7일 오후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진행했다. 북한은 2024년 2월 2일까지 올해 들어 4차례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은 서해 NLL 일대를 분쟁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을 포함

한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⁴⁸⁾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서해 NLL 수역을 사실상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분쟁지역으로 만들 것이다.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의 북핵 협상론자들이 한반도 전쟁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대화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로버트 칼린(Robert L. Carlin)과 지그프리트 헤커(Siegfried S. Hecker)는 한반도 정세가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협하다고 진단하고, 김정은이 김일성과 같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⁴⁹⁾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는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지도부가 한국이 북한의 정치적·영토적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하고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⁵⁰⁾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미국 내 전문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핵 군축 주장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종 군사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북한은 총격·포격, 지뢰 매설 등 접경지역과 비무장 지대 인근 도발,

48)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49) Robert L. Carlin, Siegfried S. Hecker,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January 11, 2024, <38north.org/2024/01/is-kim-jon-g-un-preparing-for-war/> (Accessed February 2, 2024).

50) Robert Gallucci, “Is Diplomacy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Possible in 2024?” *National Interest*, January 11, 2024, <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diplomacy-between-us-and-north-korea-possible-2024-208528> (Accessed February 2, 2024).

북한 공군 핵공격 훈련, 무인기 침투 등 공중 도발, 사이버 공격, 서해 NLL 수역 도발, 추가 핵실험, 각종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대남 군사도발을 더 빈번하게 감행할 것이다.

(4) 핵무력에 기초한 무력통일노선 추진

무력통일노선은 북한 정권을 정당화하는 핵심 목표다. 북한 정권은 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전 한반도의 공산화 실현을 목표로 군사력과 핵무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국통일 방식은 군사력을 활용한 무력통일과 대화를 통한 연방제통일로 구분할 수 있다.⁵¹⁾ 김정은은 대화를 통한 연방제통일을 폐기했다. 남은 통일방식은 무력통일이다. 핵·미사일 전력은 무력통일을 추진하는 핵심 전력이다. 북한 군사력의 핵심은 핵·미사일이다. 김정은 정권은 무력통일의 핵심 수단인 핵 미사일 개발을 진행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초대형핵탄두 생산, 1만 5천km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트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과업을 제시했다.⁵²⁾ 2018년 신년사에서 핵무기 대량생산·실전배치를 주문했다. 핵 무력 보유와 운용은 헌법에 명시됐고, 핵보유국법(2013)과 핵무력정책법(2022)을 통해 제도화됐다.

김정은 정권은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과정에서 무력통일 노선을 확인했다. 조선로동당 규약(2021)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을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고 명시했다.⁵³⁾ 김정은 정권

51)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서울: 기파랑, 2013), p. 74.

52)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1.1.9.

53) “조선로동당 규약,” 2021.1.9., 통일연구원 내부자료.

은 당 규약 개정 과정에서 무력통일노선을 재확인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에서는 강력한 국방력을 활용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당 규약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서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하고,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고 밝혔다.

또한 무력통일노선은 김정은의 해군절 연설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확인됐다. 2023년 8월 29일 해군절 기념 축하연설에서는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혁명전쟁준비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요구했다.⁵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무력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핵무력을 사용한 무력통일노선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무력통일노선은 전쟁 수행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군사전략에 기초한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에도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4대 군사노선을 기초로 군사력 건설과 준비를 진행했다.⁵⁵⁾ 북한의 전쟁 수행 개념은 전선 정면에서 주공 방향을 선택하여 전격전 방식으로 단시간 내에 돌파하고, 동시에 후방 침투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동시 전장화하고, 속전속결로 한국지역을 수중에 넣는 것이다. 북한

54)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해군절을 기념하여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노동신문』, 2023.8.29.

55) 오경섭, “제2장 정치·군사분야 실태,” 이무철 외, 『북한 분야별 실태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15-01, pp. 56~57. 4대군사노선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하고, 1992년 북한 헌법 제60조에 명문화하고, 1998년 헌법에서 전인민적·전국가적 방위체계를 기본으로 한 4대군사노선을 국가적 수행과제로 명문화했다.

의 3대 군사전략은 선제공습전략, 속전속결전략, 정규정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이다.⁵⁶⁾

김정은 정권은 ‘준전시사업세칙’과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군사전략을 변화시켰다. ‘준전시사업세칙’은 최고준엄 모독, 한미 양국이 전선과 해상에서 군사도발, 최고 이익을 침해하는 도발 감행의 경우에 선포한다. 전쟁에 대비해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문건인 ‘전시사업세칙’은 전시상태 선포·해제 권한과 선포 시기를 규정했다. 전쟁 선포 시기는 3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기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 침공했을 때이다. 둘째,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이다. 셋째,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이다.⁵⁷⁾ 김정은 정권은 4대 전략적 노선으로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3대 군사과업으로 정치사상사업의 강화, 싸움준비의 완성, 군기 확립을 제시했다.⁵⁸⁾

김정은은 전쟁 준비 태세와 군사적 대응능력 구비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2023년 8월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침공 격퇴,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데 총적목표를 둔 작전계획전투문건들을 요해했다. 김정은은 유사시 전선 및 전략예비포병 이용계획, 적후전선 형성계획, 해외무력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을 검토했다. 작전초기에는 적의 전쟁잠재력과 적군이 전쟁지휘

56) 유용원·신범철·김진아,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pp. 37~40;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황금알, 2004), pp. 61~67.

57) “北 전시사업세칙 개정, “남한 내 중북세력 요청 있을 때 전쟁 선포.” 『chosun.com』, 2013.8.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22/2013082200462.html> (검색일 2024.1.31.)

58) 오경섭, “제2장 정치·군사분야 실태,” pp. 65~66.

구심점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휘통신수단들을 맹목시켜 초기부터 기를 꺾어 놓고 전투행동에 혼란을 주며 적의 전쟁수행의지와 능력을 마비시키는데 최대의 조목을 돌릴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적의 중추적인 군사지회거점들과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 중요 군사대상물들, 사회정치·경제적 혼란사태를 촉발할 수 있는 핵심요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초강도 타격을 가하며, 다양한 타격수단에 의한 부단한 소탕전과 전선공격작전, 적 후방에서의 교란작전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배합적용해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⁵⁹⁾

다. 남북관계 영향 및 전망

(1) 정찰총국의 대남공작 강화

정찰총국은 전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남 군사정보 수집과 공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특히 정찰국·작전국·해외정보국·기술국은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정찰국은 군사첩보 수집, 무장 간첩 남파, 요인 암살·납치, 기간 산업시설 파괴 등 대남 테러 기능을 수행한다. 작전국은 간첩 양성 및 침투·복귀, 무전기·무기 등 공작용 장비 운반 등을 수행한다. 해외정보국은 대남·해외 정보수집, 국제 대남 테러 등을 수행한다. 기술국은 해커 양성, 사이버테러,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불법 활동, 침투 장비 개발 등을 수행한다. 특히 121국은 베이징·선양·다롄 등에 사이버전 수행 거점을 설치하고, 외국 컴퓨터 망에 침입해 비밀 자료를 해킹하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등 사이버테러를 주도할 것이다.

한국 내부의 간첩망과 친북 단체 관리는 문화교류국 유지, 통일전선부와 문화교류국을 통합해 대외연락부 신설, 정찰총국으로 통합하는

59)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하시고 전군지휘훈련진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노동신문』, 2023.8.31.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통일전선부의 제일 조총련과 재중 총련 등 해외 친북 조직 관리, 대남 심리전 업무는 경찰총국으로 이관하거나 대외연락부를 신설해서 이관할 것이다.

(2) 한국 친북세력의 호응

한국 내부의 친북세력들은 두 국가론과 무력통일론을 지지할 것이다. 문화교류국은 2000년대 이후 일심회, 왕재산, 통합진보당, 자주통일 총북동지회, 창원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 8·15, 민노총 간첩단 사건 등 한국 내에 간첩망과 지하당을 구축했다. 북한은 한국 내 간첩망과 지하당을 통해 친북 성향 단체와 인사들을 관리하면서 무력 통일을 지지·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내 친북단체와 인사들은 김정은의 전쟁을 통한 무력 통일과 남한 평정을 통한 영토 편입을 수용하고 지지한다. 2024년 1월 4일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 조장과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대남전략 기본인식은 평화적 방법이든, 비평화적 방법이든 분단문제는 한반도를 강제 점령한 미제를 몰아내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미국과의 싸움에서 북한이 승리하면 그 자체가 통일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⁶⁰⁾

1월 24일 윤미향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이사장은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저는 조선 반도에서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평화관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영토 완정을 통해 점령하고 평정하고 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⁶¹⁾

60)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이 곧 ‘통일대전’이라는 주장,” 『Redian』, <redian.org/archive/177341> (검색일: 2024.2.10.).

61) “윤미향 주최 국회 토론회서 “평화 위해서라면 北 전쟁관도 수용”, 『조선일보』,

한국 친북세력은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타도 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2024년 2월 6일 노동신문에서 “총선용전쟁위기 조장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민중을 우롱하는 패륜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타도 투쟁을 선동하면서 대남공작을 지속했다. 한국의 친북세력은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듯한 주장을 내놨다. 자주 통일연구소 한성 부소장은 북한의 새로운 대미제압굴복전략은 “괴뢰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평정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는 것으로 미국을 굴복시키는” 한국 평정론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 타도는 촛불행동의 윤석열 퇴진촛불이 들고 있는 윤석열 탄핵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사회의 진보적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탄핵을 목표로 반 윤석열 투쟁을 더욱 더 완강하게 공세화, 정밀화해 범국민항쟁을 예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⁶²⁾ 친북세력은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서 주한미국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미·일 안보협력 반대, 미국의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촉구할 것이고, 총선 국면에서 촛불 행동을 통한 윤석열 정권 타도와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3) 북한의 군사도발 증가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핵군축 주장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거부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면서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북한의 도발유형은 접경 지역과 비무장지대 인근 도발(총격, 포격, 지뢰 매설 등), 공중 도발(공군 핵공격 훈련, 무인기 침투 등), 해상 도발(포격, 함정 무력 충돌 등 서해 NLL 주변 도발, 서해5도 포격 도발 등), 사이버 공격, 각종

2024.1.31.

62) “북한이 새롭게 내오는 대미제압굴복전략과 조국통일전략,” 『열린시민뉴스』, 2024.1.23., <opentz.com/2502> (검색일: 2024.2.10.).

탄도미사일, 상사포, 순항미사일 등 시험발사, 추가 핵실험 등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서해 NLL은 분쟁지역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서해 NLL을 부정하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1999)이나 서해 경비계선(2007)을 국경선으로 주장할 것이다. NLL 주변 수역에서는 포격 도발, 상시적인 NLL 침범과 함정 간 무력 충돌 야기, 서해5도 주변 군사도발 등을 진행할 것이다.

2. 김정은 대남전략의 군사화 및 국제화 분석

김진하(통일연구원)

이번 김정은의 전면적 노선 전환은 대남전략의 ‘군사화’와 ‘국제화’라는 최근 정책 기조가 전면에서 부각된 사건이다. 대남전략의 주요한 목표로서 소위 ‘남조선혁명’과 ‘통일전선’ 구축,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협상을 통한 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식 평화 통일보다⁶³⁾ 핵 무력 등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는 ‘령토완정’이 강조되는 모습이다. 이번 노선 전환 선언으로 대남정책의 ‘군사전략’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평화통일노선을 포기하고 대남전략을 군사적 승리와 영토 평정을 위한 전략적 방책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대남정책의 군사 전략화’ 경향을 ‘군사화’라고 칭한다.

또한, 대남정책을 대외전략 추진의 하위 종속변수로 취급되는 경향이 짙어져 왔다. 신냉전 대립 구도에 편승하는 대외전략 기조에 맞추어 대남전략을 기획·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선언으로 ‘대한민국’은 적대 진영에 속한 교전 국가로 규정되면서 대남전략은 대외적 대적 투쟁의 일 방법론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정세와 대외전략을 대남정책에 연계시키는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국제화’ 경향이라 칭한다.

김정은의 대남노선 대전환 선언은 위협적인 언어 선택과 과거 부정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대남전략의 ‘군사화’ 및 ‘국제화’는 급발진 변경이 아니다.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2020년 8차 당대회 이후 상수(常數)화되기 시작한 전략적 추세였다. 대남노선 전면 전환으로 한국을 적대적으로 객체화하는 대남전략의 군사화·국제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는데, 정면 돌파전 ‘새로운 길’의⁶⁴⁾ 노정

63) 김진하,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한·미 반(反)북핵 독트린(Doctrine)을 제안하며,” 『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pp. 301~343.

6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3일 회의가 12월 30일에 계속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19.12.31.

에서 발생한 사실상 예고된 사태의 진전이다. 따라서 북한 대남노선 전면 전환의 전략적 의도를 판단하고 향후 행태를 적실성 있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이 되는 대남전략 군사화 및 국제화 추세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 대남전략 군사화 및 국제화

먼저 대남전략의 ‘군사전략화’ 경향의 배경을 살펴보자. 한반도 현상 질서의 변경, 그리고 중국적으로 ‘북한 주도 흡수 통일’은 정권 창립 이래 대를 이어가며 일관되게 추구된 체제의 최상위 목표이자 대남전략의 존재 이유였다.⁶⁵⁾ 김정은도 2016년 개최된 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시키겠다고 맹세한 바 있다.⁶⁶⁾

전통적으로 북한은 양대 방법론으로 통일전선 구축과 연방제 협상을 경유하는 ‘평화적 통일’과 무력을 동원한 ‘비평화적 통일’을 주창해 왔다. 그런데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며 ‘평화적 통일의 유일한 방안인 연방제통일’을 강요하던 김정은 정권은⁶⁷⁾ 최근 들어 군사력에 의한 한반도 평정, 소위 ‘령토완정’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대남전략의 핵심 목표도 무력에 의한 한반도 현상변경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북한판 삼전(三戰) 전략 ‘법률전’의⁶⁸⁾ 일환으로 김정은 정권은 ‘강위

65) 김진하,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순환도발 전략의 기원 및 권력 세습 이후 패턴 분석,” 『국방연구』, vol. 57, no. 1 (2014), pp. 27~59.

66)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2016.5.8.

67) *Ibid.*

68) 중국공산당은 정면 대결로 이기기 힘든 적을 대상으로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즉 삼전을 전개하며 세력을 확대하면서 적을 위축시키고 포위하는 중국 특유의 복합전(hybrid warfare)을 구사해 왔다.

력한 군사력에 기초한 무력평정을 법제화해 왔다. 2021년 <당규약>을 개정, 서문에서 기존의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 부분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이라는 문구로 변경하며 ‘힘을 통한 평화와 통일’을 강조했다. 당 최고 준칙으로 ‘남조선혁명’과 ‘민족통일전선’ 구축보다 무력 병탄을 현실성이 높은 대안으로 강조한 것이다.

2022년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⁶⁹⁾ 그리고 2023년 9월 최고 인민회의 14기 9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까지 ‘령토완정’을 조문화한다.⁷⁰⁾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인 한국의 ‘령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못 박은 것이다.⁷¹⁾ 1948년 김일성이 정부 정강 첫째 항에서 국토완정을 주창하던 과거를 상기시킨다.⁷²⁾ 김일성의 ‘국토완정’론은 결국 한국전쟁 침공으로 귀결되었다. 2022년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명시하더니,⁷³⁾ 드디어 최근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한국을 적대적으로 타자화하며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핵 선제공격을 한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협박한다. 대남전략이 ‘핵전략’의 부분집합이 된 것이다.

핵무력 완성 및 고도화, 국제사회 대북 비핵화 조치의 한계 노정, 그리고 미국의 패권 지위 약화와 상대적 국력 감퇴에 힘입어 자신감을

69)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2.9.9.

70)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3.9.28.

7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여 하신 연설,” 『조선중앙통신』, 2024.2.9.

72) “통일부 ‘북, 김일성 활용한 김정은 이상화 움직임 분주,” 『연합뉴스』, 2024.2.15.

73) 『노동신문』, 2023.1.1., *op. cit.*

74) 『조선중앙통신』, 2023.12.31., *op. cit.*

획득한 모습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북한의 핵 무력 확대가 평화 통일 노선의 철폐와 ‘군사적 대남전략 추진’의 물리적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대남전략의 군사화는 새로이 핵무장한 국가의 대외적 ‘담대화(emboldenment)’ 경향에 관한 벨(Mark S. Bell)의 연구와도⁷⁵⁾ 부합된다. 핵전력 고도화가 대남전략 군사화를 촉진한 동인이라면, 고도화가 진전될수록 대남전략 군사화 경향이 가속되면서 더욱 위태로운 대남전략을 구사하도록 추동할 것이다.⁷⁶⁾

둘째, ‘국제화’ 추세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대남정책을 신냉전 대립 구도에 편승하려는 북한 대외전략의 큰 틀에 연계, 재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2023년 연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대남대적부문의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고 근본적인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하라며 대남부문기구들의 정리를 지시했는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최설희 외무상의 주재로 통일선선부장 리선권 등 대남 사업부문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협의회가 열려 ‘관련 단체들을 정리’하는 ‘반드시 깊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을⁷⁷⁾ 진행한 바 있다.⁷⁸⁾ 북한 대남업무 조직 및 기구의 총 정리·개편 작업이 바로 외무성 주도로 추진되는 모습은 대남전략 국제화 추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다.⁷⁹⁾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 외무상이 조직 개편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점과 다른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외무성의 ‘조국통일국’이 통전부 역할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⁸⁰⁾

75) Mark S. Bell, “Beyond Emboldenment: How Acquiring Nuclear Weapons Can Chang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40, no. 1 (July 2015), pp. 87~119.

76) Scott D. Sagan, “Armed and Dangerous: When Dictators Get the Bomb,” *Foreign Affairs*, vol. 97 (2018), pp. 35~43.

77)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78) 『노동신문』, 2024.1.1., *op. cit.*

79) “北, 김정은 ‘대남기구 정리’ 지시따라 통일선선부 통폐합 수순,” 『동아일보』, 2024.1.13.

80) *Ibid.*

김정은 정권은 미·러, 미·중 간 갈등 구도 심화, 현상변경을 노리는 중·러·북 북방 수정주의 동맹의 결속과 한·미·일 자유주의 삼각 동맹의 재결집을 신냉전의 전개라고 인식하며 이를 거둬 강조해 왔다. 중국의 강력한 현상 도전과 러시아의 강대국 정치 복귀, 신냉전 갈등 구도 악화와 국제적 갈등 첨예화를 반기는 모습이었다. 대립과 갈등의 대결적 강대국 정치가 진영화될수록, 이에 편승(bandwagoning)하여 고립과 포위에서 벗어나 생존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반도 현상변경에 도전하는 북한의 목표 추구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발맞추어 김정은의 대남전략 역시 한국을 민족분단의 특수성에 방점을 두며 접근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진영의 '취약 고리'이자 공략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모습이다.⁸¹⁾

최근 북한 대외전략 기조는 '신냉전 편승'이다. 이는 다음 두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진영결집 외교'다. 북한은 반미 국제연대 선봉장을 자임하면서, 미국 주도 자유주의 현상 국제질서에 도전 중인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수정주의 세력 간 보이지 않는 협조 관계를 공고한 진영으로 결집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노이회담 실패로 핵무장 기정사실화와 한반도 현상변경을 시도하던 북한의 유화 공세는 좌절되었다. 국제질서와 동맹 체제 복원, 그리고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더욱 난관에 봉착한 김정은 정권이였다. 북한은 이제 진영 대결로 구조화되기 시작한 미·중, 미·러 대립에 편승하면서 갈등의 국제정치를 악용하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려 시도하고 있다.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김정은은 “미국이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 군사동맹 체제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

81) 이런 점에서 북한 지도부에 의한 '대한민국' 지칭은 한국을 객체화된 적대국으로 취급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남조선 호칭에 비하여서도 오히려 적개심이나 적대감이 상향된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흥체를 드러냈다”며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⁸²⁾ 이번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정은은 ‘반제·자주를 제1 국책’으로 삼고 미국의 ‘자주권 침해행위 불용’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⁸³⁾ 신냉전 대결 심화와 갈등 증폭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북한의 전략적 선택권과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출한 것이다.

최근 북한 외교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특징은 동맹 연루(entrapment)⁸⁴⁾ 전략의 적극적 구사다. 국제적 대결 구도 심화와 중·러와의 진영결속을 토대로 강대 동맹국들의 군사·외교적 관여와 개입을 한반도 지정학 게임에 끌어들여 활용하는 전략이다. 동북아에서 미·일과 대치 중인 중·러는 북한 이외 뚜렷한 대체 동맹국을 찾기 어렵다. 북한의 이탈이나 실패는 중·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전략적 손실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지정학적 입지를 십분 활용, 오히려 주동적으로 중·러 강대국들을 끌어들여 자신에 유익한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에 연루시키고 있다.

2023년 북한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연루 전략을 선보인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소모전으로 진행되면서 군수품 조달 문제와 외교 고립 등으로 곤란에 처한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면서 한반도 국제정치에 끌어들여 핵 무력 고도화 진척 및 대미·대남 압박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전쟁 수행 능력 제고와 미국의 주의 분산을 노리는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정세변화에 따라 대미 갈등 수위를 조절해 나가길 원하는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진영결속 주장과 연루 전술 구사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은

82) 『조선중앙통신』, 2023.9.28., *op. cit.*

83)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84)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July 1984), pp. 461~495.

러시아와의 급속한 군사 밀착을 통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중국을 간접적으로 질타하는 이중 포석도 구사할 수 있었다. 또한, 곤경에 처한 러시아를 활용하여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23년 11월 21일 발사된 인공위성 ‘만리경-1’호의 안착도 러시아의 지원이 추정된다.

러·북 간 군사적 밀착은 선을 넘는 위험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미 전쟁 중인 러시아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동북아 전선에서도 대미 압박에 도전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중동에 이은 동북아에서의 분쟁 또는 위기 상황 발생은 미국의 힘을 더욱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국 대외정책을 비난하며 2024년 타이완 등과 더불어 한반도를 분쟁 위험지역으로 지적한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공개 경고를 마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⁸⁵⁾ 대남·대미 압박에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미 지난해 10월 방북, ‘쌍무적관계’ 확대를 김정은과 논의하고, 최선희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 대한 공동행동 필요성에 동의하며 반미 공동 전선 구축에 합의했던 라브로프다.

북한의 신냉전 심화 인식과 국제정세 편승으로 강화되고 있는 대남 전략 국제화 추세는 군사화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군사적긴장격화’로 ‘지역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⁸⁶⁾ 신냉전의 현실에서 ‘미국의 식민지 속국’으로⁸⁷⁾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을⁸⁸⁾ 유사시 군사적으로 평정하는 것은 당연하

8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Interview with TASS News Agency, December 28, 2023,” <https://mid.ru/en/foreign_policy/news/1923539/> (Accessed December 31, 2023).

86)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87) 『조선중앙통신』, 2023.12.31., *op. cit.*

88)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다는 폐쇄적 합리화 논리가 김정은 정권의 전략 결정 경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대남노선 전면 전환의 전략적 의도

대남전략의 군사화 및 국제화 추세를 배경으로 북한의 민족통일노선 폐기와 대남전략 전면 전환의 전략적 의도를 살펴보자. 북한의 의도는 핵전력 고도화와 신냉전 전개를 토대로 핵·강압(nuclear coercion)과 위기 고조(crisis escalation) 전술의 위력을 배가하여 한반도 현상 질서 변경에 도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제정세 변동으로 기회의 창이 열렸으므로 핵 무력 증대와 핵·강압 배가로 한국, 더 나아가 한미동맹을 선제적으로 제압하며 수정주의적(revisionist)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조악한 ‘핵 기회주의(nuclear opportunism)’적⁸⁹⁾ 계산의 발로다. 세분하여 살펴보자.

첫째,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다. 국가 자원을 군사력 증강, 특히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투자 하겠다는 결의를 최후통첩 성격의 선포를 통해 대내외 청중에게 포고한 것이다. 북한이 처한 결핍경제 환경에서 가용자원을 총집중하여 군사적인 ‘대사변’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핵전력의 고도화를 핵심으로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정세를 고려하여 무력으로 전 국가를 해방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⁹⁰⁾ 경우에는 한반도 현상변경을 위해 모험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자 결심을 발한 것이다.

이번 평화통일 포기 및 대남전략 군사화 선언은 돌발사태가 아니다.

89) Mark S. Bell, *Nuclear Reactions: How Nuclear-Armed States Behav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1), pp. 9~35.

90) 1949년 3월 7일 북한의 개전 의사에 주저하는 스탈린을 설득하며 김일성이 개진한 주장이다. Kathryn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Working Paper No. 39*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02), p. 4.

북한은 외교조차 간지기에 행해지는 ‘평화적 전투’로 인식하는⁹¹⁾ 레닌 주의의 오랜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 김일성도 외교적 협상을 ‘적을 날카롭게 공격해서 적을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인 지류적 공격형태’라고⁹²⁾ 교시한 바 있다. 주가 무력통일이라면 통일전선을 통한 평화통일 방식은 어디까지나 부수적 수단이었다. 과거 통일노선의 기저에도 선제공격으로 통일 “전쟁의 승리는 가능하다”는⁹³⁾ ‘통일 대전’ 필승 공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2004년 김정은도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함으로써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자고 강조한다.⁹⁴⁾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남북 간 군사적 불균형 심화와 호혜로운 국제정세의 전개라는 호조건이 주어진다면 ‘통일 대전’ 해법이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가정되어 왔다. 즉, 한반도의 무력통합 희구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놀라운 점은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노골적 속내를 드러내며 소위 평화 통일노선을 전면적으로 철폐한 점이다. 군사적 준비와 병행하면서 장기적 투자와 인내심을 요구하는 ‘남조선혁명을 경유한 평화통일노선’을 지속 추진하는 것은 실익도 적으며 성공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국제질서의 동요와 미국의 퇴조세를 배경으로 자원을 총집중하여 핵 무력 고도화 계획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완수할

91) 레닌은 평화 시에도,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한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경고한다. V. I. Lenin, “Report on the Tactics of the R.C.P. (July 5, 1921),” Thir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June 22-July 12, 1921,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21/jun/12.html>> (Accessed January 1, 2024).

92) 김일성의 “9·25 전투명령(1972.9.25.)” 중의 주장으로 다음에서 재인용: 김부성, 『내가 판 땅굴』 (서울: 갑자문화사, 1976), pp. 59~60.

93) Joseph S. Bermudez, Jr.,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London: I.B. Taurus, 2001), p. 12.

94) 김정일, “《전시사업세칙》을 내용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 2004.4.7.

수 있다면, 압도적 군사력을 활용한 한반도 평정도 실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기회주의적 전제가 깔려 있다.

둘째, 핵·강압의 위력 배가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목표가 핵 무력의 고도화 및 대사변에 대한 상시적 준비 태세 확립에 비중을 둔 것이라면, 대남노선의 공세적 대전환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전략적 목적은 한미동맹,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핵·강압의 효과 배증이다. 북한의 판단에 따르자면 한반도 현상 질서 유지의 최종 담당자는 결국 미국이기 때문이다.

핵·강압 위력 증대의 최종 목표는 결국 한반도 현상 질서 변경이다. 강압의 최소치 목표가 〈핵무장 국가 인정과 제재 해제〉, 그리고 미·북을 당사자로 하는 〈핵 군축 회담의 개시와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면, 중국적 목표는 〈미국의 대한국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의 유명무실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감군과 한미동맹 형해화〉를 거쳐 〈한반도 현상 질서를 해체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다. 바로 이 시점, 즉 미국 대선을 앞둔 2024년 현재 시점을 공격적 대남노선을 요란하게 선보이며 등장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핵·강압을 증폭시켜 한국 현 정부와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비핵화 정책과 굳건한 한반도 현상 질서 수호 의지를 실패한 전략으로 호도하면서, 동시에 짙어진 핵 그림자를 배경으로 향후 거세게 전개될 북한의 현상 질서 개편 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김정은의 못다 이룬 ‘하노이의 일장춘몽’을 현실화할 수도 있는 유력 미 대선 후보를 간접 지원하려는 김정은의 의도가 엿보인다.

집권 이후 보여준 핵 개발 강행과 강압적 대외 행보는 김정은이 핵·강압의 성공 가능성을 신봉하는 핵 강압론자(coercionist)라는⁹⁵⁾ 점을 확인시켜 준다. 핵 강압론자로서 김정은은 핵·강압 효과는 핵

95) Todd S. Sechser and Matthew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7~9.

무력 확대와 고도화 수준, 즉 핵 '능력'의 증대와 핵무기를 기꺼이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대상국(target)이 믿도록 입증한 수준에 비례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충분한 능력'과 거듭 '입증된 의지'는 핵·확전(nuclear escalation)의 위험성과 실현 가능성을 대상국들에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며 핵·강압의 효과를 배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능력 확대 작업부터 착수했다. 은폐(hiding)가 실패하면 핵확산 희구국가는 군사적·경제적 예방 공격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억제력의 신속한 조기 확보를 위해 무기화 '질주(sprinting)'⁹⁶⁾ 전략을 선택한다. 이와 달리 북한은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을⁹⁷⁾ 선언하는 등 최소억제력을 갖춘 것으로 충분히 평가받은 이후에 오히려 핵 능력 확장을 위해 '질주'한다. 북한의 특이한 질주 타이밍은 북한의 의도가 핵 억제력 확보가 아니라 핵 강압 능력의 배증에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북한은 2019년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철회 및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정면돌파전'으로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이라며⁹⁸⁾ 대미 핵·강압의 최소 목표를 천명한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즉 핵 무력 고도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핵 무력의 대량생산화·고도화·정밀화·다종화·실전화를 강행하고 있다.⁹⁹⁾ 이미 다양한 핵 무력 투사체계 개발 등으로 핵 능력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북한이 '위기 상황에서 핵 사용 문턱(threshold)을 더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¹⁰⁰⁾ 다시 말해, 더욱 위협스러운 핵·강압을 실행할 능력을 보유하게

96) Vipin Narang, *Seeking the Bomb: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pp. 27~47.

97) "중대 보도: 정부성명," 『조선중앙방송』, 2017.11.29.

98) 『노동신문』, 2019.12.31., *op. cit.*

99) 『노동신문』, 2021.1.9., *op. cit.*

된 것이다. 더구나 이번 대남노선 전환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이 핵 고도화 추진에 투자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핵 선제사용 및 핵 확산 불사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매진해왔다. 그동안 행해진 수많은 핵 공갈(nuclear blackmail)과 위협적 수사, 끊임없이 이어지는 핵·미사일 실험, 한반도의 ‘항시적인 전쟁위험’을¹⁰¹⁾ 이해 당사국에 재확인시키는 무력 도발과 벼랑끝 전술 등으로 위험을 불사(risk-acceptance)하는¹⁰²⁾ ‘무모한 강압 행위자’라는 이미지를 굳혀 왔다. 여기에 더해, 2022년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으로¹⁰³⁾ ‘핵 선제공격 권리를 주장’하며 ‘확장적이며 공세적인 핵 교리를 채택’하였다.¹⁰⁴⁾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의 14기 9차 회의에서는 핵 무력 고도화를 영구적인 목표로 헌법 조문화하고, 김정은은 핵무장 고도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우위’ 확보를 체제의 핵심 목표로 직접 선언하기도 했다.¹⁰⁵⁾ ‘핵 우위’ 추구는 물론, 선제핵 사용 ‘의지’를 거듭 천명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접한 데다 통일 대상인 동족의 국가와 국민을 핵 인질(nuclear hostage)로 삼아 핵 선제공격과 핵 확산 불사 ‘의지’를 북한 국내외 주요 청중들(audiences)이 믿게 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번 대남전략·통일노선의 공세적 전면 전환으로 핵 선제사용과 확산 불사 의지를 보다 신빙성 있게 주장할 수 있는

100) Dakota L. Wood, ed., *2024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2024), p. 365.

101)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한 선군태양, 민족의 어버이로 천세만세 온 겨레와 함께 계신다,” 『노동신문』, 2012.2.16.

102)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 *The Myth of the Nuclear Revolution: Power Politics in the Atomic A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0), p. 39.

103) 『노동신문』, 2022.9.9., *op. cit.*

104) 전봉근,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28, 2022.

105) 『조선중앙통신』, 2023.9.28., *op. cit.*

근거를 마련하였다. 생존을 위협하는 최고의 주적이자 교전국으로 낙인찍으며 핵 인질, 즉 한국에 대한 살상 의사를 보다 선명하게 발신한 것이다. 물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국인 미국을 강압하려는 의도도 분명하게 선보였다. 핵 고도화 프로그램 강행 추진으로 ‘증대된 핵 능력’과 공세적 대남전략이 상징하는 ‘핵 확산 불사’ 의지는 향후 북한의 핵·강압 전략 구사가 빈도와 강도 면에서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셋째, 대내 통치전략적 의도다. 지배 엘리트 집단은 물론, 피지배 주민들에 대한 체제의 통제권을 재강화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북한 주민들에 확대 전파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발전상에 대한 동경, 그리고 한류로 대변되는 개성 있고 자유로운 시민 문화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은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파괴적으로 여겨질 것이다.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의 문화 통제 법령의 제정으로 한국문화의 침투 및 확산에 나선 것은 이러한 북한의 우려와 공포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남전략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한국을 적대적 교전 국가로 규정하면서 한국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 그리고 교류 자체를 끊어 한국의 문화적·사회적 영향력의 원천 차단을 시도하고 있다. ‘전민항진’ 대사변 준비를 구실로 ‘정치사상 교양사업’ 및¹⁰⁶⁾ 사회문화적 규율 강화 캠페인 전개, 그리고 주민에 대한 ‘전시동원적 통제’를 심화하고자 하는 대내적 포석이다. 이를 통해 핵 무력 고도화를 위한 자원과 노동력의 과도한 불균등 집중 투자를 정당화하면서 자원 분배에서 밀려나 내핍을 더욱 강요받게 될 피지배층 주민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106)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이에 더해 전시동원형 대남노선 채택과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로 통치 엘리트층, 특히 당·군에 대한 독재자 김정연의 통제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다. 바로 김정은은 ‘핵 카리스마(charisma)’의 공고한 확립이다. 핏줄과 전통 대체하여 초월적 ‘카리스마’의 보유로 독재 권력에 대한 충성의 당위성을 주창하려는 시도다.

김정은은 탈냉전 이후 북한 사회의 세속화 추세 속에 이미 효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관습과 전통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외심과 복종심을 자아내는 카리스마, 북한 정치의 맥락에서는 ‘핵 카리스마’에 빛나는 위대한 지도자상의 정립으로 세습 정통성의 토대를 교체하는 공정에 임해 왔다. 이미 북한은 김정은을 “국가 핵무력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5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달성한 기적”을¹⁰⁷⁾ 보여주었으며, 북한을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켜 대국들이 우리 국가의 이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던 시대를 끝장”내는¹⁰⁸⁾ 대승리를 거둔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으로 김정은을 묘사하며 찬양해 왔다. 만년을 무릅쓴 핵확산 프로젝트 완수 사명을 이행하며 핵 카리스마를 증명하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

이번 대남전략과 노선 전환을 통해 구시대적 통치 정당화 수단인 ‘민족통일’ 사명을 완전히 철폐하고 드디어 자신이 급속히 증강시킨 핵 무력을 정통성의 토대이자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패권국 미국을 강압하여 ‘부정의’한(?) 현상 질서를 타파하고, ‘노북국가’이자 속적인 한국을 제압해 가는 최고의 군사지도자(warlord)로서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확립하는 데 진력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은 적을 분명히 특정하고 악마화하는 작업일 것이다. 대남노선 대전환의 또 다른 전략적 의도다.

107)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8.4.21.

108)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노동신문』, 2021.1.10.

다. 향후 행보 예상

대남노선 전면 전환의 기저에 깔린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한반도 현상 질서 변경이라는 체제의 최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 ‘핵·강압의 효과 배증,’ 그리고 ‘대내 통치전략’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대남노선 전면 전환 이후 북한의 행보를 예상해 본다.

첫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4년 차를 맞이한 핵 무력 고도화 계획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핵전력 확장과 고도화는 공세적 대남 전략을 실천하고 대미 강압을 가증하는 물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핵 무력 고도화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된 탄두, 초대형 핵폭탄과 다종·정밀 전술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면 증대된 대미 억제 및 강압 능력을 활용하여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의 신뢰도를 허물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통미봉남을 실행에 옮겨 한미동맹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고,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즉 북한의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하는 미·북 ‘핵 군축 협상’의 개시(또는 재개?¹⁰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주적 국가 한국의 잠정적인 고립이나 사실상 유기된 동맹국 상태를 불러올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핵 무력을 동원한 군사적 강압이나 무력 병탄으로 한반도 현상 질서를 근본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둘째, 증강된 핵전력을 배경으로 ‘파괴력 있는’ 도발을 감행하여 전쟁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다. 대미·대남 도발의 강압 효과를 증대하고, 핵 위협과 벼랑끝 ‘위기 고조 전략’의 ‘위험성’을 배가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즉, 파괴력과 위험성이 증폭된 초강도 도발도 예상된다. 김정은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 대적투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109) 북한의 입장에서 싱가포르 및 하노이에서의 협상과 회담은 실질적 의미에서 ‘핵군축 회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실시'하여¹¹⁰⁾ 한반도 위기를 의도적으로 증폭 재생산해내는 '위기 비즈니스'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일종의 예고 도발인 셈이다.

북한의 전략 도발은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유형은 핵 '능력 과시'와 핵 사용 '의지 입증' 용도의 도발이다. 대미 강압을 주요 목적으로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신형 무기체계와 핵 능력을 증명·과시하는 시연'성 실험을 감행하고 위협적인 최신행 무기체계를 전시·광고하는 등 정교히 계획된 핵 도발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최근까지 핵 어뢰 '해일'과 북한식 SLBM 탑재 SSBN 도입, 무인기 정밀화 및 대남 침투, 고체 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 실험,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등 해상 또는 해중(海中) 발사 순항미사일(SLBM) 개발과 시험 발사, 인공위성 발사 등을 실행해 왔다. 강압 수위를 대폭 상향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핵 또는 전장(field) 핵탄두나 초대형 전략핵 폭발실험, ICBM 정상각도 발사,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다탄두 신형 ICBM 도입이나 발사실험 등을 감행할 수도 있다. "조선반도의 정세격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전지구적 "핵장거리타격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다.¹¹¹⁾

두 번째 유형의 도발은 한국을 대상으로 특정한 직접적인 국지 무력 도발이다. 한반도 열전(熱戰)화를 노리는 위협한 도발이다. 연쇄적인 재래식 국지 도발과 '단계적 위기 고조'로 한반도 불안정을 상시화하려 들 것이다. '전쟁의 위협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열점지역'으로¹¹²⁾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로 9·19 군사합의 일부의 시행을 유예한 한국에 반발하며 전면 폐기를 선언한 북한의 행태

110) 『조선중앙통신』, 2023.12.31., *op. cit.*

111) 『노동신문』, 2021.1.9., *op. cit.*

112)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는 우발¹¹³⁾ 가장한 재래식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를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소위 헌법 영토 조항 신설을 지시하며, 김정은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며¹¹⁴⁾ 이미 정당화 구실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북한의 초강경 대남공세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환경적 요소는 바로 선거 달력이다. 현상 유지 선호 진영 각국의 주요 선거 일정, 특히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에 맞춰 북한은 모험주의적인 외교 행보와 군사 도발로 한반도 위기 극대화에 나설 공산이 크다. 선거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즉 가시적 파급효과를 충격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규모 재래식 군사 도발이나 충격적 테러 등의 비대칭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재래식 도발의 확대 재생산이나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선보인 대규모 미사일 발사 세례 쇼를 더욱 규모를 키우고 위험스러운 형태로 전개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2022년 11월 2일에 약 이십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백여 발의 포탄을 동해와 서해에 난사, 이 중 탄도미사일 한 발은 울릉도 부근 NLL 이남 해상에 탄착하기도 했다. 미 해군이 동해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대담해진 북한의 도발 의지가 그대로 드러났던 상황이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국정원은 한국 총선 등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¹¹⁵⁾ 마련을 김정은이 지시하였다며 경고를 발한 바 있다. '전쟁이

113) 김정은은 "어떤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다"고 협박한다. 『조선중앙통신』, 2023.12.31., *op. cit.*

114) 『조선중앙통신』, 2024.1.16., *op. cit.*

115) "김정은, 내년초 남한에 큰 파장 일으킬 방안 마련 지시," 『동아일보』, 2023.12.

나 평화나 프레임 확산으로 한국 총선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 여론을 조성하여 미 대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중·러·북 모두 미 대선 특정 출마 예상자에 대한 선호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즉, 북한의 도발이 진영 전체의 목인,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공조 하에 감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 번째 도발 유형은 중·러와의 군사 도발 공조다. 몇 년 사이 중·러는 제1도련선 인근과 동해안 등에서 대규모 연합해상 훈련 등을 정규적으로 실시하며 한·미·일 삼각 군사 공조체제에 위협을 제기하곤 했다. 여기에 북한도 대량의 미사일 발사나 공군기 출격 등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2023년의 러·북 밀착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중·러와의 군사적 공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공산이 크다. 신냉전 대립 구도가 서서히 진영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면서 중·러·북 삼국의 군사적 연동이나 도발 공조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사전 교감을 주고받은 군사적인 양동 작전 수행 등 적극적인 삼국 도발 공조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적 도발 공조를 통해 진영결집 외교를 거세게 전개하며, 중·러를 자신들의 한반도 현상변경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며 평양의 이해 관철에 활용하는 동맹 연루 전략을 구사하려 들 것이다. 예컨대, 양안 사태의 전개에 따라서는 중국 역시 더욱 강경하고 도발적인 대미 도전 태세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을 추동하여 한반도 위기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발할 수도 있다.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의 동시적인 위기 발생은 미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¹¹⁶⁾

28.

116) 대가만 충분하다면 중국의 위협천만한 지정학적 공조(?) 요구를 마다할 북한이 아니다.

셋째, ‘확전 우세(escalation dominance)’가¹¹⁷⁾ 가능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도발 응징에 대해 더 큰 도발로 단계별로 응수하여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공포의 (위기 상승) 사다리(escalation ladder)’¹¹⁸⁾ 게임을 전개할 수 있다. 대미·대남 강압을 극대화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벼랑 끝 치킨게임>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신들이 설정한 위기 상승의 일정 단계에서 드디어 ‘전술핵 선제사용’ 협박이 선명한 가시적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은 핵확전 불사 의지를 증명하며 미국을 거세게 밀어붙이기 위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의 전술핵 미사일 포격이나 핵어뢰 ‘해일’의 발사 등의 위협천만한 도박을 실행해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기 상황에 대한 통제가 불확실해지면서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으로의 확전(inadvertent escalation)¹¹⁹⁾ 발생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불확실성 증대는 북한이 애용해 온 소위 벼랑끝 전술의 요체이다. 우발 핵 확전 위험성을 오히려 효과적인 전략적 강압 수단으로 간주할 개연성이 있다. 즉, 위기가 고조되는 위험한 단계에서 북한은 후퇴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상황 악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이다.

넷째, 대남공작의 하이브리드화 및 테러화다. 활발한 침투 및 영향력 공작을 통한 남남갈등 심화와 한국 정부 무력화가 시도될 수 있다. 김정은은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

117) Michael Fitzsimmons, “The False Allure of Escalation Dominance,” *War on the Rocks*, November 16, 2017, <<https://warontherocks.com/2017/11/false-allure-escalation-dominance/>> (Accessed January 20, 2024).

118) Herman Kahn, *On Escalation: Metaphors and Scenario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p. 3~39.

119) Barry R. Posen, *Inadvertent Escalation: Conventional War and Nuclear Risks of International Stud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p. ix~xi & 1~27.

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하겠으며¹²⁰⁾ 대남전략의 핵심 목표를 남조선혁명이나 통일전선 구축이 아니라 ‘군사 정복에 유리한 환경’, 즉 한국 내 갈등 증폭, 국론 분열, 그리고 국가 기능 마비 상황 등을 예비하는 것으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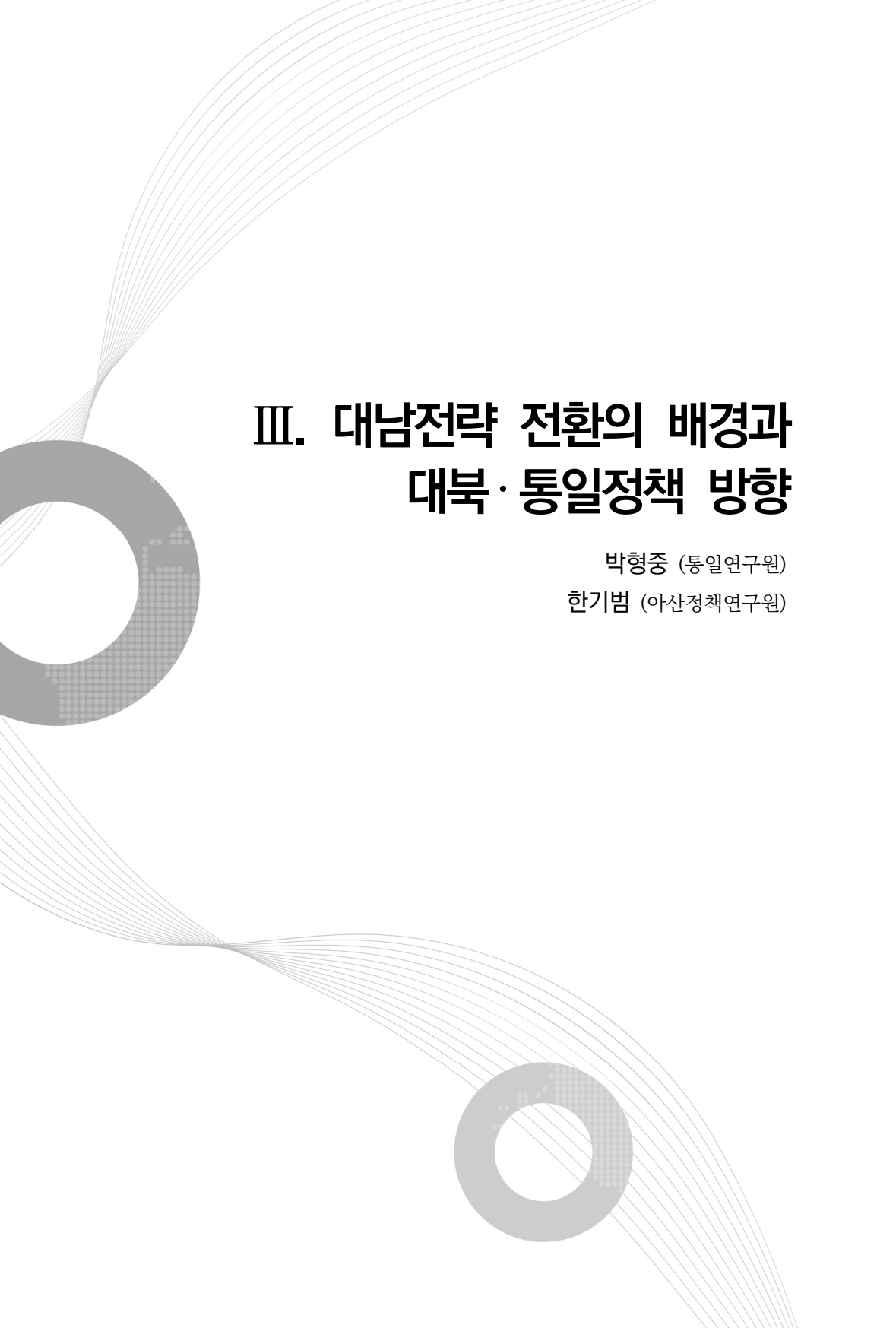
김정은의 결심은 대남전략이 ‘진짜 전쟁’ 개시 이전 대상국의 기능 부전을 위해 수행되곤 하는 회색지대 ‘정치 책략전’ 또는 ‘하이브리드전’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러시아의 조지아 남오세티야 민족 분규 유발 및 2008년 침공, 돈바스 내란 촉발 및 2014년 크림반도 점령,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 하이브리드전 전개 등은 본보기 사례가 되어 줄 것이다.¹²¹⁾

2023년 통전부 문화교류국 요원들의 침투와 포섭 활동으로 결성된 공작조들이 잇따라 적발되었다. 한국 정치·사회 부문에 대한 침투와 영향력 공작의 강도를 높여 가며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하락과 대중 소요 발생을 유도하는 공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북한판 대남 하이브리드전은 사실상 이미 개시된 것이다. 중국적인 ‘목표는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의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한국 내부에서의 혼란과 대결의 극한 정치 상황 발생, 한국 정부의 국가 기능 마비와 붕괴, 그리고 사이버 공작 등을 통한 경제적 대혼란 촉발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선거 정치와 맞물려 무력 도발과 결들여진 위태로운 ‘북한판 북합·하이브리드전’의 대담한 전개, 그리고 국제 현상변경 도전 세력들의 한미동맹을 표적으로 하는 직간접적 하이브리드 북합도발 합작 공모 또는 공조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120) 『조선중앙통신』, 2023.12.31., *op. cit.*

121) Kent DeBenedictis, *Russian “Hybrid Warfare” and the Annexation of Crimea: The Modern Application of Soviet Political Warfare* (London: I.B. Tauris, 2022), pp. 31~54.

마지막으로 북한은 내부적으로 강력한 <주민 사상 재교육> 및 <규율 강화 대중 캠페인>과 '실전형 전시동원체제 실행'을 연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동요하는 추종자들과 피지배 주민들을 총동원 체제 하에서 감시·통제하면서 체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김정은의 세습 정통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의도적으로 외부적 위기를 조성하여 고통스러운 독재체제 안정화 조치들, 그리고 주민들의 내핍과 희생을 강요하는 핵 무력 고도화 정책을 정당화하려 들 것이다. 공세적 대남전략으로의 전환이 의도했던 결집 강화 및 체제 안정화 효과를 추수하기 위해 전환 전쟁(diversionary war) 논리를 구체화하는 연속적 캠페인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consisting of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Two large, stylized circular shapes are integrated into the design: one on the left side, partially overlapping the lines, and another at the bottom right. Both circles have a textured, dotted appearance on their right halves.

Ⅲ. 대남전략 전환의 배경과 대북·통일정책 방향

박형중 (통일연구원)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1. 대남노선 변동에 대한 통시적 진단과 통일·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통일연구원)

가. 북한의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서의 ‘새로운 입장’

북한은 2023년 연말 8기 9차 전원회의 그리고 2024 연초 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김정은은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했다고 했다. 그 핵심은 남북관계를 ‘전쟁중인 교전국가’ 관계로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대남관계를 ‘대적사업’ 차원으로 ‘근본적인 방향전환’한 것이다.

이어지는 나항에서는 ‘새로운 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요약한다. 다항에서는 ‘새로운 입장’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를 검토한다. 라항은 ‘새로운 입장’의 기본성격을 ‘좌경 급진화’로 규정한다. 마항은 ‘새로운 입장’의 함의와 대북통일정책 방향을 서술한다.

나.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입장의 내용

북한은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방침을 제시했다. 방침은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첫째, ‘국가방위력 급진적 발전을 더욱 가속화’, 또는 ‘자주적 국방력과 핵억제력 강화’, ‘나라의 방위력,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명실공히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이다.

둘째, ‘철저한 전쟁억제력의 압도적 행사’,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태한 전쟁발발위험지역’인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또는 ‘현실적 실체로 다가온’ 전쟁에 대한 ‘전쟁준비완성’ 또는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 그리고 그 전쟁을 ‘대한민국의 점령, 평정, 수복’ 전쟁으로 실행, ‘대한민국의 완전 초도화’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실체의 끔찍한 괴멸’과 관련한 ‘의지와 능력의 계속 확대

강화'이다.

셋째, 대남정책을 '대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임무의 재설정이다. 즉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고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적/대외사업부문은 남반부 전 영토 평정과 관련한 북한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한다는 것이다.

넷째, 남북 간 '동족, 동질'을 표현하는 바의 낱말 사용 금지 및 '잔여물들을 처리'이다. 즉 먼저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이다. 다음으로 경의선 북측 구간 파괴 등 남북연결조건의 철저 분리, 조국통일3대현장기념탑 철거 등 북측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과 같은 개념의 완전 제거이다.

다. '새로운 입장'은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

그런데 이상에서 요약한 바의 2023년 말에서부터 2024년 초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에서 북한의 '새로운 입장'은 대부분 새롭지 않은 것이다. '새로운 것'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새롭지 않은 바의 '새로운' 요소들과 실제로 '새로운' 요소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구별을 위해, 여기서는 (당시 한국정부가 생각하기에) 남북관계가 가장 우호적이었던 시기, 즉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년대 초중반,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적대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공개 표출되고 있는 시기 중의 하나인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시기에서의 북한의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관한 입장을 비교한다.

남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의 제2항은 한국의 '연합제' 통일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공통성이 있으며,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2007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정부가 보기에 남북 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력이 역사상 최고 수준에서 전개하고 있었고 더 높은 수준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했다. 그렇지만 이 시기 동안 발간된 북한 군대 내부 학습 및 강연 관련 일련의 자료에 나타난 바의 북한의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대외비 입장은 2023년말/2024년초 북한이 제기한 입장과 거의 차이가 없다.

여기서는 첫째, 한국 <민주>와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변하지 않는 평가, 둘째, 변하지 않았던 무력통일론, 셋째, 북한의 항시적인 한반도 전쟁 직전 상황론, 넷째, 전쟁발발을 기회삼아 무력통일성취론, 다섯째, 선군경제론의 은밀한 부활을 다룬다. 그 결론으로, '새로운 입장'을 북한 대남/통일정책의 '좌경 급진화'로 간주한다.

<한국 <민주>와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변하지 않는 평가>

김정은은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바 없다”¹²²⁾고 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2000년 10월경 다음과 같았다.

“적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힘으로 압살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화정책을 쓰는 것이다. 식량원조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 교류를 통하여 적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우리가 사상적으로 해이되었을 때 보다 쉽게 먹어 치우려는 것이 적들의 흥심이다.”¹²³⁾ 또는 한마디로 말하

122) 『조선중앙통신』, 2023.12.31., *op. cit.*

*여 시간을 얻어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우리 내부를 와해시켜
《승공통일》의 야망을 손쉽게 실현해 보기 위해서이다.”¹²⁴⁾*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이유는 10여 차례나 바뀐 한국 정권들이 모두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이자 ‘미국의 식민지 줄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남조선것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2000년 북한의 김대중 정부에 대한 인식과 다를 바 없다. 2000년 10월경 발간된 것으로 보이는 〈학습제강〉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등장한다. 즉

*이 모든 것은 적들에게는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으며 있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의 통일 다시 말하여
《승공통일》의 야망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현실
적으로 지금 적들은 《대화》의 막 뒤에서 공화국 북반부 침략 준비
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¹²⁵⁾¹²⁶⁾*

-
- 123) 전화일, “적에 대한 환상은 최대의 금물,” 『근로자』, 2000년 9월호, p. 32.
124) “북한군 학습자료 독점 입수 - 전문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버릴 데 대하여,” 『월간조선』, 2002년 3월호.
125) 『월간조선』, 북한군 학습자료, p. 3.
126) 햇볕정책 출범 전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등에서 북한문제 판단 및 대북정책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라종일은 북한의 ‘햇볕정책’에 맞서 4대 ‘햇볕 대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첫째, 남한과 이야기할 때는 민족을 내세운다. 둘째, 햇볕정책 이용해 현금·식량·비료 등 물질적 자원을 확보한다. 셋째, 햇볕정책 활용해 반미, 친북 세력을 양성한다. 넷째, 마음속으로 친하지는 않는다. 군사력 키우고 결정적 계기를 기다린다. 라종일, “라종일 교수가 말하는 ‘DJ 정부 남북관계’ 비화,” 『월간중앙』, 2020년 4월호.

아울러 2003년의 북한측 한 선동자료의 제목은 “남조선은 철두철미 미제의 식민지이다”¹²⁷⁾였다. 북한은 또한 ‘김대중 괴뢰역도’는 미제가 수 십년 동안 길러 온 ‘친미주구’라는 식의 논리도 전개한다.¹²⁸⁾

〈변하지 않았던 무력통일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한은 각기 통일문제와 전쟁문제에 대해 매우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다. 정상회담 다음 날인 2000년 6월 16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남북한이 “다시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 확실해졌다” 또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 우리 민족이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북측도 원치 않고 있다”¹²⁹⁾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적대적 경계태세와 무력통일론을 내부적으로 대외비 차원에서 지속 견지했다. 즉 ‘적에 대한 환상은 최대 금물’,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다’,¹³⁰⁾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은 결코

127) 그 이유로 세 가지가 거론되었다. 즉 1) 정치적 자주성과 독자성이 전혀 없다. 2) 군사적으로도 실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3) 미제의 온갖 범죄만행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선동자료(일반) “남조선은 철두철미 미제의 식민지이다.” 조선노동당출판사, 2003.12. 또한 강연자료, 남조선은 가장 반동적이고 부패한 사회이다, 조선인민군출판사 주체93(2004), 제3권.

128) 김정일동지락전, 7. 송고한 동포애, “변할 수 없는 괴뢰들의 복침야망,” “미국무성이 1973년 작성한 남조선 <잠재적 지도자명단>에는 전두환, 김영삼 괴뢰역도놈과 함께 김대중괴뢰역도놈의 이름도 올라 있었다. 이것만보아도 우리는 김대중괴뢰역도놈이 미제가 요긴하게 써먹기 위해 수십년전부터 미리 장악하고 지지와 보호의 손길을 뻗치며 품을 들여 길러 온 손때 묻은 친미주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129) 유제원,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경기일보, 2000.6.17.

130) 조선인민군출판사가 2003년 발간한 병사/사관용 학습제강(3) 중에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원수들을 반대하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데 대하여”라는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은, 환상 즉 “조국통일이 마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고 생각하는 것”(p. 3)에 대해 경계하면서, “그러면 적들이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진짜 속셈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제놈들에 대한 환상에 물젖게 하자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와해시키며 시간을 얻어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다그치자는 것이다”(p. 9)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하지 않습니다)(김정일), 〈나의 통일관은 본질에 있어서 무력통일관입니다)(김정일), 〈인민군대는 당이 평화적 구호를 들수록 무력통일관으로 조국을 통일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김정일).¹³¹⁾ 아울러 2000년 10월 발간된 북한군대 학습제강은 김정일의 통일관의 본질 즉 ‘무력통일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이고 있다. 즉,

“해설: 흘러간 반세기의 력사는 우리 나라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조국통일은 오직 무력에 의한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때문에 모든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무력통일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무력으로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¹³²⁾

2012 김정은 집권 이후, 무력통일 노선은 공개적으로 표명되었다. 김정은은 2012년 8월 ‘선군혁명 영도 52돌 기념 8·25 경축연회’에서, 자신이 ‘조국통일 반미대전 작전계획’¹³³⁾에 서명하였음을 밝혔다. 북한

131) 이상의 구호는, 2000년대 초중반의 다수의 ‘강연제강’과 ‘학습제강’에서 발견된다. 무력통일 대신에 조국통일성전, 조국통일대전, 통일대전과 같은 표현도 사용된다. 각주 125, 126, 132에서 언급된 것들 이외에도 무력통일관련 용어를 포함하는 북한 자료들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학습제강 (군관, 장령용),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무력통일전략실현에서 적국외해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적공싸움준비를 다그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출판사, 주체91(2002); 강연자료, 『변천된 정세를 높은 계급적안목과 혁명적원칙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대하자: 부쉬가 내놓은 새 《국가안보전략》의 위험성에 대하여』, 조선인민군출판사, 주체91(2002), 제10권; 초급선동일군들을 위한 강습제강,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주체91(2002), 제10권; 강습제강,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우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조선인민군출판사 주체91(2002).

132) 조선일보 북한군 학습제강, p. 6.

133) 한호석, “전시사업세칙 개정이 말해주는 충격적인 사실,” 자주시보, 2013.10.15; 특별취재팀, “북 ‘남애국역량이 요청됐 전시선포,’” 동아일보, 2013.8.22.

은 다음 달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은 집권 초기 ‘우리식 전면전’, ‘반공격작전’, ‘7일전쟁’, ‘조국통일대전’, ‘3일단기속결전’, ‘2015 통일대전의 해’ 등 무력통일을 함축하는 표현들이 대거 등장했다.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당중앙위원회 사업 보고 중 통일 관련 정책 제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 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 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통일 추구에서 무력 사용을 공언하는 이런 식의 문구는 당시 김정은이 계승한다고 하는 바의 김일성/김정일의 ‘조국통일 3대헌장’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문구이다. 8차 당 대회에서 개정 당규약은 이러한 정책노선을 무력통일정책을 보다 명시적으로 밝혔다. 7차당대회와 8차당대회의 당규약에서 통일정책관련 조항을 비교하면, 무력사용 불사를 공언하는 새로운 문구가 첨가되어 있다. 즉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¹³⁴⁾

134) “[표] 북한 노동당 규약 주요 개정 내용,” 『연합뉴스』, 2021.6.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_01170100504?input=1195m> (검색일: 2

8차 당 대회 노동당 규약 개정과 관련한 노동신문의 보도는 관련조항에 대해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8차당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¹³⁵⁾

〈북한의 항시적인 한반도 전쟁 직전 상황론〉

2023년말/2024년초 김정은의 연설들은, 한반도 정세에서 위협스러운 긴장구조와 전쟁발발의 높은 개연성을 매우 강조한다. 그 연설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다시 인용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위태한 전쟁발발위험지역’인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또는 ‘현실적 실체로 다가온’ 전쟁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세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긴장된 인식은 가히 항시적 정세인식이다. 1998년 중반경 인용된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당시 정세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즉

《지금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고 침예합니다. 적들은 사회주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인민군대에서 적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그 어느

021.6.2.).

135)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노동신문』, 2021.1.10.

때보다도 경각성을 높이며 놈들이 덤벼들면 단때에 소멸해버릴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까.」¹³⁶⁾

이러한 정세의 긴박성에 대한 인식은 북한에 가히 항시적이며, 2000년대에도 동일하게 등장했다. 2000년 10월 발간된 북한군 학습제강은 “지금 우리 나라의 정치군사 정세는 적들의 끊임없는 전쟁준비책동으로하여 6·15북남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2002년 발간된 북한군 학습제강은 “지금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 날 수 있는 긴장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¹³⁷⁾ 2003년 증반경 북한의 정세 인식은, “지금 우리 나라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며 미제와의 최후결사전을 눈앞에 박두하였다”¹³⁸⁾였다. 북한이 보기에, 특히 이라크 전쟁을 포함 “미제가 세계도처에서 감행하는 침략행위가 다름 아닌 우리를 겨냥한 예비전쟁, 시험전쟁”¹³⁹⁾이었다. 당시 “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준비를 최종단계에서 더욱 다그치고 있”는데, 그 “침략전쟁 계획을 수정보충하고 조선반도주변에 병력을 증강”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위해 평양과의 회담을 다그치고 있다’¹⁴⁰⁾는 것이었다. 2004년 전시세칙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은

136)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최근 인민군대에 주신 말씀의 중요내용에 대한 학습제강 (주체87년 6월~8월)』, 조선인민군출판사, 주체87(1998), p. 9.

137)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무력통일전략실현에서 적국외해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적공싸움준비를 다그칠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조선인민군출판사주체91(2002), p. 7.

138) 『모든 군인들은 너는 죽고 나는 산다는 혁명적 의지와 락관을 가지고 반미결사전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자』 조선인민군출판사 주체92(2003), 제5권; 『미제와의 결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자』, 조선인민군출판사, 주체92(2003), 제6권.

139) 『모든 군인들은 너는 죽고 나는 산다는 혁명적 의지와 락관을 가지고 반미결사전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자』 조선인민군출판사 주체92(2003), 제5권.

140) 위의 책.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¹⁴¹⁾고 했다.

〈전쟁 발발을 기회 삼아 무력통일성취론〉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은 ‘평화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전국가’론이다. 즉 이제 북한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에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으며, 남북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의 괴멸적으로 파괴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전쟁준비완성’ 또는 ‘대사변 준비’를 강조하면서도, 전쟁을 시작하는 측은 한국이며, 만약 한국이 전쟁을 먼저 시작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고 한다.

‘두 교전국가’론이 내포하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논리는 전통적으로 반복되어 오던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논법에 입각, 한국이 먼저 북침을 감행했다는 거짓 주장을 근거로, 6·25 전쟁 때 북한의 전면 기습 남침을 정당화했다. 아울러 동일한 논리가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가 2004년 발행한 ‘전시사업세칙’에도 등장한다. 즉,

*만일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명예를 걸고 본때 있게 싸워 침략자들을 력사의 무덤속에 영영 매장해버릴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이다.*¹⁴²⁾

141) 전시세칙, p. 1.

142) 김정일, “《전시사업세칙》을 내움에 대하여,” *op. cit.*, p. 1.

2008년에도 거의 동일한 발언이 등장했다. 김정은은 ‘조국통일반미 대전 작전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히는 선군영도 52돌 경축연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미 서남전선의 최전방 부대들에 나가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으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수표하였습니다.¹⁴³⁾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24년 김정은은 동일한 논리를 거의 그대로 반복한다. 즉,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결코 조선반도에서 압도적힘에 의한 대 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한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없이 수증의 모든 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와 력량과 능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드팀없이 계속 확대강화해나갈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¹⁴⁴⁾

2004년과 2024년 발언에서 달라진 것도 있다. 2004년에는 단순히 ‘침략전쟁에서 침략자들을 패퇴시킬 것’이라는 공언만을 하고 있는

143) “선군혁명 영도 52돌 경축연회 및 김정은 연설,” 통일부 월간북한동향, 2012.8., p. 15.

144)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24.1.10.

데 대하여, 2024년에는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과 함께 북한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첨가되었고, 그 결과에 있어 ‘대한민국의 완전 초토화’ 공언과 함께 북한에게는 ‘그럴 의지와 역량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즉 발언의 강도와 그 현실성 공언이 한층 강력해졌다. 또 한 가지 김정은 시대 무력통일 관련 발언들에서의 특징은 앞서의 여러 인용에서도 등장했던 것처럼, ‘강위력한 국방력’,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 등의 북한의 능력을 과시하는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 시대에는 무력통일한다는 것 자체를 위협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압도적 힘’에 의해 무력통일한다는 것이 대남 위협 과시에서 구사되고 있다.

〈선군경제론의 은밀한 부활〉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국가방위력의 급진적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된 언급을 보면,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을 백배, 천배 최상최대로 다져나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 ‘무장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핵전쟁억제력강화와 국가방위력증대’에 관한 전략적 과업 제시 등이다.

이러한 김정은의 2023년말/2024년초 발언들을 토대로 보면, 현재 북한에서 대내적으로 최상위 정책 노선이 무엇인가가 나타난다. 최상위 정책 노선은 현실적으로 ‘(무장장비의 현대화, 핵억제력 강화를 포함한) 국가방위력 급진적 강화의 추가 가속화 및 전쟁준비 완성’이다. 이 정책노선이 대내 정책의 최상위 노선이라는 것은 이 노선이 다른 ‘모든 노선과 정책들 가운데서 이 노선이 주도적이며 규제적인 지위를 차지한다’¹⁴⁵⁾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적어도 2024년 동안, 여기의 노선이 다른 경제 분야, 그리고 정치와 사회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규제한

145) 이 인용은 북한이 선군경제노선에 최상위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서재영·박제동·정수웅,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22.

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나라의 방위력,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명실공히 전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공화국령내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은 군사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력강화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질높게 보장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은 일단 유사시에는 즉시에 전시체제로 이행할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며 전민항전을 위한 물질적준비도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한몫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의무로 여기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군사과업들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야 하며 군사를 소홀히 하는 현상들은 제때에 문제를 세워 철저히 극복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내용상, '선군경제' 노선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선군경제'라는 정책 슬로건이 공식으로 등장한 것은 2002년 9월이다. 그러나 '선군경제'론은 실질적으로 1995년 김정은 집권과 동시 선군정치와 함께 시작되었다.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이 발표한 담화¹⁴⁶⁾는 '인민군대를 강화할 것'을 최상위 정책원칙으로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군수생산 강화'를 포함했다. 이렇

146) 김정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근로자』, 2005년 1월호, pp. 4~5.

게 시작한 ‘군수생산강화’론은 2002년 9월부터 ‘선군경제’론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3년 김정일은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국방공업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노선’이 등장했다. 이후 북한 관변논자들은 이를 선군정치를 경제분야에서 구현하는 ‘선군시대경제사상’으로 그럴듯한 체계와 논리를 만들어주었다. 국방공업 증시노선과 관련 선군정치 10년의 ‘위대한 영도’를 회고하고 칭송하는 2005년의 한 글¹⁴⁷⁾은, ‘군사 첫째, 국방공업 선차’의 원칙이 동시에 내걸렸다는 것, 국방공업증시노선이 관철됨으로써 ‘국방공업이 주도적 지위에 있는 우리식의 독특한 경제구조가 더욱 완비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은 ‘전당, 전국, 전민이 국방공업을 강력히 지원할 것’¹⁴⁸⁾ 또는 “어느 부문에서나 군수생산에 필요한것이 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대주는 원칙을 지켜야”¹⁴⁹⁾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투자에서 국방공업의 몫을 충분히 조성하고 여기에 설비와 자재, 전력, 노력 등을 최우선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며 다른 부분에 비하여 앞세운다”는 것, 그리고 국가적으로 국방공업부분에 기계설비와 자재, 원료와 동력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¹⁵⁰⁾ 북한 전래의 중공업우선발전론과 국방공업우선발전론 하에서의 중공업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국방공업중시 하 무기생산 증대를 실행하자면, 금속공업과 병기공업이 훨씬 중요해진다¹⁵¹⁾고 한다.

147) 오봉길, “국방공업증시로선의 위력이 과시되여온 빛나는 10년,” 『근로자』, 2005년 1월호, p. 40, p. 42.

148) 서재영·박제동·정수용,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pp. 28~29.

149) *Ibid.*, p. 29.

150) *Ibid.*, p. 21.

151) *Ibid.*, p. 31, p. 23. 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의 김정은 연설 중 경제분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산업부문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이고, 아울러 “올해 경제사업에서 특별히 역할을 높여야 할 부문은 기계공업부문입니다”라는 언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새로운 입장’은 북한 대남/통일정책의 ‘좌경 급진화’로 간주한다. 여기서 ‘좌경 급진화’라는 특징지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정책 노선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정당화한다. 첫째 유형은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대립쌍을 ‘동시 병진’한다는 식의 슬로건과 괴변적 논리로 정당화하는 한편, 실제상으로는 어느 한쪽을 중시하면서 다른 쪽을 희생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중공업과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 ‘증상의 통일적 지도와 아랫단위의 창발성의 동시 강화’, 그리고 ‘국방력 강화와 인민생활의 동시 증진’ 등이다.

두 번째 유형은 대남/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그 핵심은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논리를 동시에 구사하면서, 청중성격에 따라 어느 한쪽 논리만 주로 또는 배타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 앞으로 서술하겠지만) 김정일 시기 ‘자주평화통일’은 한국청중을 향한 공개 입장이고, ‘무력통일’ 노선은 북한청중 또는 북한 군부와 군인을 향한 대외비 입장이다.¹⁵²⁾

유사한 사례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다음 해인 2001년 북한이 대외용과 대내용으로 내세운 상반된 주장의 사례를 들어보자. 북한은 한편에서 한국청중을 향해서는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걸고 승부를 가르는 길로 가지 말 것’, 즉 ‘우리민족끼리’를 설교하지만,¹⁵³⁾ 북한 내부 청중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대결은

152) 북한측의 논리전개에서, ‘자주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은 서로 모순하지 않는다. 한국이 북한식 ‘자주’ 즉 한미 동맹 해체에 동의하고 ‘민족대단결’ 즉 한국 내부정치에서 북한지지세력이 주류가 되면 ‘평화통일’이다. 여기까지는 명시적이다. 그 다음 단계 즉, 그렇지 않을 경우 ‘무력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앞의 논리의 논리적 귀결이지만, 암시적으로만 존재할 뿐 명시적으로 표명되지는 않는다. 이런식 주장의 하나의 사례를 보면, “조국통일을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사상과 제도,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로 실현하는 것은 통일문제해결의 3대원칙이다. ... 민족자주가 없으면 평화통일도 민족대단결도 실현할 수 없다.” 전군섭, “새 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국면을 여는 뜻깊은 해로 빛내이자.” 『근로자』, 2001년 3월호, pp. 54~55.

153) 전군섭, “새 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국면을 여는 뜻깊은 해로 빛내이자.” p. 55.

치열한 계급투쟁이며 힘과 힘의 대결이고, (적들이 유화정책을 펴고 있더라도) 적들의 본심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적들에 대해 결코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양자간 대결은 결국 총대에 의해 해결된다'는 식의 논리¹⁵⁴⁾를 강권한다.

과거나 현재를 망라하여, 북한이 항시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 적들의 전쟁 위협이 최고조에 달해있고,¹⁵⁵⁾ 전쟁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전쟁준비를 완성하고 있어야 하며,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적에게 괴멸적 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북한측이 군사력 증강과 전쟁준비완성 유지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과장하며,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따른 확전을 협박하고 끊임없이 핵전쟁 위협을 거론함으로써, 예방적(preventive) 또는 선제(preemptive) 전쟁개시와 특히 핵무기의 실제 사용 결단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성에 따르자면, '침략억제', '침략 방어'와 '침략전쟁수행' 간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북한은 자신의 군사력이 '침략억제'와 '침략방어'를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적들의 '불의의 무력침공'에 의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을 항시적으로 상정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국토완정' 또는 '대한민국의 괴멸적 파괴'를 위한 '전쟁수행'으로 실행될 것이라 공언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북한

154) 김봉수, "적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급적 원칙을 저버리면 사회주의는 망한다 -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이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 『근로자』, 2001년 4월호.

155) 일련의 논자들은 이를 '피포위의식'이라고 하는 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적절한 표현은 위협 극대 과장(maximum threat inflation)을 통한 공포조성이다. 북한식 안보/대외정책 논리는 극대과장된 위협을 현실인 것으로 강변하여 증폭된 허구적 공포를 조성하고, 이 과장된 위협과 허구적 공포를 기반으로 도출된 극단적이고 공격적 행동지침의 정당성 및 그 지침 실행의 사생결단의 절실성을 강변한다. 물론 북한만 이런 식의 논법을 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식 논법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Douglas Walton, *Scare Tactics: Arguments That Appeal to Fear and Threats* (Toronto: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0); 과장된 위협과 증폭된 공포를 갖게 되면,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해 외부적으로 매우 공격적 행동을 취하게 된다. 공격적 대외행동은 주변국이 북한 포위를 강화하도록 만든다(self-encirclement).

이 6·25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용했던 논리와 동일하다. 즉 ‘한국측이 먼저 북침했고, 북한측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면 남침을 감행했다’는 식의 논리의 재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2023년 말/2024년 초 북한의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지난날 북한의 대내외 정책마다 상호 모순 대립쌍으로 병존하고 있던 측면 중에서 보다 실질적 북한 입장이었던 것들만을 선택하여, 상호 연결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남/안보정책과 관련하여 보면 이렇다. 즉 북한은 과거 두 개의 상반된 전략논리를 가지고, 대남 청중과 내부 청중에게 그 중 하나의 전략논리만 설파했다.

첫째, 과거 대남 청중용이자 왜곡 선전과 기만관련 효용을 추구하던 바의 전략논리는 <우리민족끼리 + 자주평화통일 + 침략억제 + 인민생활증진>의 논리 연결고리를 가졌다. 둘째, 대내청중용이자 북한의 실질적 실질 정책이었던 전략 논리는 <대적투쟁 + 무력통일 + 침략전쟁수행 + 국방력 강화>라는 연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개의 각 전략 개념에서, 하위 개별 요소는 서로 보완하고 상승작용을 한다.

<표 Ⅲ-1> 두 개의 상반된 전략개념과 그 구성 요소

과거: 대외비/대내청중용 현재: 대내외 청중	대적투쟁	무력통일	침략전쟁 수행	국방력 강화
과거: 대외/대남청중용 현재: 폐기	우리민족끼리	자주평화통일	침략억제	인민생활 향상

2023년 말/2024년 초 김정은은 대외/대남 청중용 전략논리와 대내 청중용 전략논리 사이에 존재하던 그 동안의 표리부동을 버리기로 결정했다. 김정은은 대남 청중을 향해서도 두 번째 전략논리 또는 과거에도 실질적이었던 바의 전략논리를 내세운다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¹⁵⁶⁾

라. '새로운 입장'의 함의와 대북통일정책 방향

여기서는 '새로운 입장'의 함의로서, 네 가지를 언급하고, 각 사항과 관련한 대북통일정책 상의 고려 사항을 서술한다. 네 가지 사항은 첫째, 그 핵심은 '전쟁하는 두 교전국가'론이다. 둘째, '새로운 입장'은 북한의 증가된 대남 위협 능력과 전략 목표를 반영한다. 셋째, 북한이 처한 현 국면의 지정학적 정세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넷째,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의 집중, 민생경제 위기와 정치안정은 지속할 것이다.

〈핵심은 '전쟁하는 두 교전국가'론〉

북한이 내세운 '새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핵심은 '전쟁하는 두 교전국가'론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전쟁하는 교전관계'로 본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남북관계를 과거 처럼 '동족관계, 동질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가관계'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첫째, 남북관계의 특징 중의 하나가 '민족 내부 관계'로서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의 전면 부정이다. 둘째, 핵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제2의 6·25 침략 핵전쟁'을 공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156) 그런데 이러한 '좌경 급진화' 추세는 대남/통일정책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대외의 모든 분야에서, '좌경 급진화' 경향을 노정했다. 이는 김정일 선군정치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대조적 정책 성향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김정은 시대에는 정치면에서, 당조직의 위상과 일원적 통제 그리고 이데올로기 규정성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경제면에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장악통제 그리고 군수공업 중심주의가, 사회면에서는 정권의 대주민 통제 그리고 대남/대의 차폐가 현저히 강화되었다. 이러한 추세의 마지막 조치가 2023년말/2024년초 명시화된 대남/통일정책에서 '새로운 입장'이다. 김정은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대남/안보정책은 서로 보완적이며,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 각 요소가 상호보완/보강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만 독립하여 전체 틀을 벗어나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한국의 통일정책은 두 가지 강조점을 보완해야 한다.

- 첫째, (북한의 동족/동질관계의 거부에 맞서) 1000년의 통일 국가의 유산인 남북한 주민간 언어와 문화와 역사의 공유 그리고 혈연적 연계를 중심으로 한 동족관계와 동질관계를 강조해야 한다.
- 둘째, (북한의 교전국가론 및 대남 무력점령론에 맞서) 남북간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점진적 평화통일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남북간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의 방도 모색, 자유와 인권보장, 그리고 민주와 복지, 그리고 체제간 선의의 경쟁을 강조해야 한다.

○ 한국은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취한 ‘새로운 입장’이 북한 내부에 야기할 혼란을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단지 북한의 대남용 통일정책이었을 뿐 아니라, 지난 80년 동안 북한 정권의 정체성 및 정당성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져왔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또한 북한 정권 내부에 유무형의 알력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 한국은 내부 혼란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편, 북한이 폐기처분한 ‘민족관련 정치/통일담론’을 일련의 수정을 거쳐 과감하게 재활용하는 방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유/평화/민족대단결’, ‘한반도는 하나다’, 또는 ‘삼천리 금수강산은 하나다’, ‘우리민족제일주의’, 한반도기의 채택 등등)

〈'새로운 입장'은 북한의 대남 공격성 증가를 의미〉

북한이 대외위협을 과장하여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핵억제력 증가와 국방력 증가, 전쟁준비 완성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혹자에게는 마치 북한이 방어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논법에서 보면, 2023년 말/2024년 초 북한이 취한 '새로운 입장'에서의 '동족/동질'관계 포기와 '두 개의 국가'론을 택한 것도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북한의 방어적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망각해서 안 되는 것은 북한이 단순히 '두 개의 국가'론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대적인 두 개의 교전국가'론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택했던 바의 '두개의 독일민족과 두 개의 독일국가'론이 체제경쟁에서 열세인 동독이 '두개의 독일국가의 평화공존'을 추구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었다면,¹⁵⁷⁾ 북한의 '두 개의 교전국가'론은 사실상 한국을 상대로 핵 기반 침략전쟁을 협박하는 것이다.

왜 그러할까? 국제정치학에서 일련의 학자들은 어떤 경우가 강대국 간 전쟁 위험을 높이는가에 대해 연구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강대국간에 전쟁위험이 높아지는 경우는 갈등하는 두 강대국 간에 어느 한쪽이 경쟁에서 중장기적으로 열세에 처하리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경우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국가는 상대적대국이 강성해지는 것을 저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자신이 더 약해지기 전에 즉 미래가 아니라 오늘 예방전쟁을 해야 한다. 자신이 패배 국면에 처해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패배전망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안보를 위해 적대타국을 공격하고 제압해야 한다는 절박성과 대담성이 강화된다.¹⁵⁸⁾

157) Joanna Patricia McKay, "The Official Concept of the Nation in the GDR: Theory versus Pragmatism," Ph.D. Dissert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Summer 1995).

158) Dale C. Copeland, *The Origins of Major War* (Cornell: Cornell University Press, 2013); Dan Reiter, *How Wars End* (Princeton: Princeton

이러한 상대적 힘의 관계 변화에 따른 양국관계 적대성 증가의 논리는 남북관계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다. 체제경쟁에서 열세가 깊어가는 북한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한국의 안정과 번영을 파괴해야만 하는 구조적이며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게 된다. 북한의 대남 열세가 분명해지고 확대할수록, 북한의 한국에 대한 공격성은 강화되는 것이고, 한국의 안정과 번영의 파괴를 보다 강력하게 지향한다.

북한이 한국의 안정과 번영파괴를 위한 대남 전략이 과거에 ‘우리민족끼리(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론과 ‘무력통일’론을 동시 병행했었다면, 2023년말/2024년초 ‘새로운 입장’은 전자를 포기하고 후자에 몰두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비유하면 이해가 더 쉽다. 즉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허비되지 않는 자원을 핵심 사업부문을 강화하는 데 투자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이 명심해야 할 고려사항들을 아래에서 정리한다.

○ 한국은 체제경쟁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오만(hubris)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북한의 열세가 강화된다는 것은 한국의 안정과 번영을 파괴하고자 하는 북한의 대남 공격성이 강화되는 것과 일치할 수 있다.
- 통합국력의 우세가 군사적 우세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

University Press, 2009); Jack Snyder, *Myths of Empi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n* (Cornell: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Jack S. Levy, “Declining power and the preventive motivation for war,” *World Politics*, vol. 40, no. 1 (October 1987), pp. 82~107; Jack Levy, “Prospect Theory, Rational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issu. 1, March 1997, pp. 87~112;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no. 2 (January 1978), pp. 167~214; John J.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Summer 1990), pp. 5~56.

다. 남북간 군사관계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하며, 그 중에는 한국의 안정과 번영에 치명적인 것도 있다.

○ 북한은 ‘두 개의 교전국가’론을 앞으로 장기간 전략적으로 고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남북 간 안보 갈등의 구조적으로 심화에 기여할 것이다.

- 혹자들이 주장하는 바의 남북 ‘두 국가 간 평화공존’론은 전략적 현실성을 결여한다.

○ 북한의 ‘새로운 입장’은 북한의 군사적 차원의 대남 적대시 실효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차원의 조치이다.

- 특히 정찰총국이 관장하고 있는 사이버 차원의 다양한 공격, 대남 비밀 또는 혼합 군사행동, 한국 내 인물과 기관에 대한 직접 협박 또는 테러와 같은 파괴공작 능력이 확충될 것이다.

-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류의 대남 정책을 포기한 데 따른 정치적 비용을 능가하는 만큼의 수익을 이번 대남전략 및 실행체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 북한 대남 공세의 새로운 역점 방향과 강화된 능력이 어느 방향에서 등장하는 것을 관찰하는 가운데 그에 상응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입장’은 북한의 증가한 대남 위협 능력과 전략 목표를 반영〉
앞의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은 항시적으로 위협 과장과 전쟁 임박 협박을 하고 있지만, 북한 자신이 판단할 때 그리고 외부의 관찰자가 판단할 때, 그 실효성은 역사적으로 변화했다. 실효성 변화는 북한의 증가한 능력의 함수이다. 즉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이 증가할수록 상대적대국들에 대한 북한의 협박의 유효성이 증가하며, 북한 자신

이 그러한 협박 행위를 단지 허풍과 허세가 아니라 실제조치 전환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며, 또한 협박과 관련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고 협박이 달성해야 하는 전술 및 전략상 목표도 상향 조정된다.

이글은 앞에서, 북한이 1998년, 2004년, 그리고 2024년 거의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진 바의 전쟁 협박을 하고 있음을 관찰했다. 그런데 북한 자신의 그리고 한미와 주변국의 이러한 협박에 대한 판단은 달랐을 것이다. 1998년 북한 협박은 북한 자신도 또한 주변국들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2004년의 경우 양측 모두가 공히 1998년에 비해 북한의 협박을 좀 더 진지하게 고려했을 것이다. 2024년의 경우, 북한 자신도 주변국도 북한의 압박에 대해 한층 더 진지하게 의도하고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2024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가한 것에 상응하게 북한이 대남/대미 협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지고, 그 유효성도 증가했으며 또한 과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바의 ‘대한민국 점령, 끔찍한 파괴’, ‘압도적 힘’, ‘사소한 우발적 충돌의 (전술핵전쟁) 확산’ 등의 협박도 등장했다. 반면, 자신의 힘과 의도의 증가와 수단의 다양화, 그리고 비용증가와 관련하여 한미의 유효적 상쇄조치들에 대한 불만도 동시에 증가했다.

한국의 대응책을 아래에서 정리한다.

○ 한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능력 증가 및 의도 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최소한 상쇄조치, 바람직 하게는 압도조치를 취해가야 한다.

- 이러한 상쇄조치 구현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북한의 2030년까지 전략목표는 강압적 목표 즉 “확전을 통제하고 정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수준의 보복을 당할 위협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핵무기 위협을 포함하는 위협 또는 군사력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일련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¹⁵⁹⁾이 될 것이다.

- 북한은 증가된 핵/미사일 능력과 실효성이 커진 협박을 활용하여, 한반도 안보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만들어 내고자 할 것이다.
-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증가된 협박을 실효성있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 도발시 성공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을 통해 북한의 입지 강화를 방지해야 한다.

〈북한이 처한 지정학적 정세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남북관계의 전 역사를 놓고 볼 때, 북한은 2023년 말/2024년 초의 시점에서, 두 가지 우호적 조건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능력의 증강이다. 둘째, 우호적 지정학적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서는 둘째 사항만을 거론한다.

북한의 잠재국력은 동북아에서 최약체이다. 북한의 운신 공간의 확장/축소 여부는 강대국간 동북아 지정학적 상황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북한의 공세적 전략의도는 우호적 동북아 지정학 조건에 편승할 때만 실현가능하다. 1950년경, 북한의 군사능력의 대한 압도 우세,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전략의도 지지라는 두 요소의 동시 등장이라는 일시적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은 한국을 침략했다. 그 후 동북아 지정학적 조건은 북한의 의도 실현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1950년대 후반, 소련은 서방과 평화공존을 지향했다. 1960년대는 중소분쟁이 있었다. 1970~1980년대 미국과 중국이 협력했으며,

159)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orth Korea: Scenarios for Leveraging Nuclear Weapons Through 2030*,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January 2023). 이 문서는 2030년까지 북한이 추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수준의 목표를 구분한다. 강압적/공세적/수세적 목표이다. 이 문서는 2030년까지 북한이 강압적 목표를 추구할 것으로 판단한다.

1990~2000년대에는 미국 일극체제였다. 그런데 2008~2009년경부터 동북아 지정학조건은 북한에 점차 유리해지기 시작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이 시기에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둘째, 미국의 상대적 위상이 약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해진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지가 점차 높아졌다. 동시에 한·미·일 결속이 강화된 것을 제외하면 북한은 한국전쟁이래, 최상의 동북아 지정학적 국면의 순풍을 받고 있다. 만약 한·미·일 결속에 금이 가면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지정학적 전략목표를 성취할 개연성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음에서 정리한다.

○ **한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 국가들과 협력하는 한편, 범서방권 강화하는 기여를 증가하는 것을 통해 한국의 국제정치적 입지와 발언권을 향상시켜야 한다.**

- 북한은 단독으로 운신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군사적 능력과 국제정치적 운신공간을 확장하고 있는바, 한국이 이를 상쇄하고 압도하자면 한국은 범서방권의 강화에 적극적 기여를 통해 범서방권에서 자신의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

○ **북한의 군사능력강화와 대남 공세성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을 예견하면서,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 미·중경쟁, 미·러대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후원도 장기화할 것이다.

- 현재의 이러한 국면 하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는 핵심 국익, 즉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영향력 축소라는 국익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할 것이다. 3국 간에 전술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구조적 이익은 공유된다.

〈북한의 국방력강화에의 집중, 민생경제의 위기와 강압을 통한 정치 안정의 3위일체 상황은 지속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을 지원하는 현재의 국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으로 고도화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 북한의 ‘국방력의 급속한 증진의 추가적 가속화’ 정책은 지속할 것이다. 그 동전의 이면으로서, 북한 민생경제의 위기 및 대외차폐와 내부 강압 정치도 계속할 것이다.

현재 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북한 정권의 지속 그리고 최소한의 내부 안정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제재 이행을 태만하는 수준을 높여갈 것이고 러시아로의 무기수출, 중국과의 교역재개 등으로, 북한 민수경제는 내부 정치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의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위태로워지는 것 역시 예방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응방향을 아래에서 정리한다.

○ 한국은 북한이 앞으로 5년 정도 북한의 수정주의적 공세가 절정에 이를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

-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을 지금처럼 지지하는 국면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방력 급진적 강화의 추가적 가속화’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높은 비용 지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국면의 기본구조가 변화하기 이전, 무엇인가 가시적인 전략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강박에 빠져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앞으로 최소 1~2년 또는 5년 정도 시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활용한 강압을 최대한 고도화함을 통해, 한반도 안보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¹⁶⁰⁾자 하는 전략 목표를

160) 통상적으로 북한이 ‘핵보유인정’, ‘핵군축’을 추구한다고 한다. 더 정확한 표현은

달성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 **한국은 북한과의 ‘교전상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통치가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을 토대로 대북통일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 한국의 북한과의 게임은 장기 전략게임이며, 양자 간 힘의 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 강대국간 상대적 힘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한국의 통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취해야 한다.**
 - 한국은 북한과의 장기 게임에서 압도적 힘의 우세를 통해 전쟁 발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한반도 안보구조를 자신에 유리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저지하는 한편, 범서방권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힘의 관계가 한국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데 기여하고, 한국은 적극적 기여를 통해 국제정치적 입지와 발언권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내부의 다원성 증대 및 북한주민의 정치적 역량증진에 기여함으로써, 통일 성취의 역사적 기회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내적 외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
 - 한국은 북한이 앞으로 상당기간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업고 전개하는 대남 ‘교전상태’를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할 것이며, 미래 어느 시점, 중국, 러시아, 북한의 협력 구도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공세적 예봉이 꺾이도록 만들어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 국면 도래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기여하면, 그 때 한국은

북한이 ‘한반도 안보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핵보유인정’, ‘핵군축’ 자체가 아니다. 북한의 전략 목표는 자신의 증대된 핵/미사일 능력을 지렛대 삼아 북한식 평화체제 수립 또는 그 밖의 방식을 통해, 전략적으로 ‘한반도 안보구조를 북한식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북한이 성공하는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그늘아래서 북한의 ‘핀란드화’될 수 있고, 동시에 그 동안 한국의 변영과 국제적 부상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유와 인권과 복지의 보장을 뒷받침해주던 한반도 안보구조는 붕괴한다.

자유/평화/번영과 복지의 원칙에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2. 북한 대남전략 변동 및 도발 양상과 한국의 대책

한기범(아산정책연구원)

가. 문제의 제기

이 글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공언한 ‘대남사업의 근본적 전환’을 전망하는 글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전략 변동과 도발 양상을 전망하면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4가지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공세적·호전적 대남 전략’은 어떤 양상으로 표출될 것인가, 둘째, 이를 위한 대남기구 정비 등 내부 조치와 대남 조치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형태일까, 셋째, 단기적으로 북한의 대남도발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넷째, 북한의 대남전략 및 도발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논의할 것이다.

대남정책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김정은이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와 올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반복해서 밝혔고, 그 진의와 배경에 대해서는 앞 단원에서 다른 학자들의 충분한 분석·평가가 있었다. 필자도 앞에서 기술된 대남정책 전환의 의미·의도와 배경·목표 분석에 대체로 동의하나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대남전략·전술 변화 방향과 도발 행태 전망을 위한 도입 차원에서 김정은의 대남정책 전환의 의미와 의도를 간단히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북한의 무력에 의한 통일 추구는 정권 수립 이래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서문의 대남·통일 부문 문구를 수정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

행” 표현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 표현으로 변경했다.¹⁶¹⁾ 그러나 정세변화에 따라 은유적 표현을 했을 뿐이지 ‘남조선의 자주적, 민주적 발전 실현’은 ‘남조선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 같은 주장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었으나 적화통일이라는 본질적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전략의 목표는 ‘남한 내 미제 축출, 파쇼정권 타도, 인민정권 수립’이다. ‘남조선 혁명’의 간조기와 만조기가 있을 뿐 북한의 근본적인 대남전략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한때 북한은 흡수통일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핵미사일 고도화로 ‘남조선 평정의 대사변’이 가능해졌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지난해 말 김정은의 대남사업의 ‘근본적 전환’ 주장은 남북대화·협력과 연방제 통일 추구 등 ‘평화적 방법’을 폐기하고 핵 위협에 의존한 ‘비평화적 방법’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통일(엄밀히는 무력 점령)’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¹⁶²⁾ 그러면서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 위협이 허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의 소주제인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변화와 대남도발 양상 전망에서 필자는 단기적으로 2024~2025년 전망에 집중한다. 앞으로 2년은 북한이 9차 당대회(2026.1 예상)를 앞두고 ‘국방력 강화 5개년(2021~25) 계획’ 등 8차 당대회 제시 과제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만 하는 시기이다. 김정은이 ‘성과’를 내려는 데에는 북한이 당면한 내외정세가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다. 미·중 전략경쟁, 동시다발적 전쟁과 선거에 따른 지구촌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대러 밀착과

161) 『노동신문』, 2021.1.9., *op. cit.*

162) 김정은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있지만 조국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가 련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노동신문』, 2016.5.8., *op. cit.*

중·러·북 연대 등 국제정세의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북한 내부 경제 사정이 상대적이거나 호전되고 있다. 곡물 증산, 국경무역 재개, 특히 대러 밀착을 통한 외화벌이 가능성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한동안 주민들에게 인고(忍苦)를 강요하고 외부의 제재·압박으로부터 버티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게 했다. 필자는 내외정세가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김정은의 인식이 공세적·호전적 정세 조작을 통한 현상 돌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은 단기적으로는 9차 당대회를 앞둔 김정은의 체제관리 전략과 그 정치 일정 맥락에서 전개될 것이다.

다음은 개념 문제로서, 북한의 '대남사업'을 우리 학계에서는 그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의 포괄성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대남노선, 대남전략, 대남정책, 대남전술, 대남도발 등 다양한 개념들을 동원해 사용한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개념들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북한의 대남사업의 최종목표인 '남조선 혁명에 의한 통일'을 대남노선으로, 적화통일을 '평화적' 혹은 '비평화적'으로 추구할 것이냐를 대남전략 차원으로, 대남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대남정책 혹은 대남전술로 해석한다. 그리고 '대남도발'은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남한의 정치·사회·경제에 '부정적' 파급영향을 기도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한다.

나. 단기 대남전략·전술 전개 방향

먼저 북한의 단기 대남전략·전술 전개 방향이다. 김정은의 대남정책 전환 목표·의도·성격으로 볼 때 그 전개 방향은 ▲'비평화적 방법'의 대남전략 구사, ▲9차 당대회를 앞둔 '체제관리 전략 차원'에서의 전략 구사, ▲유리한 내외정세 전개 인식에 기초한 '공세적' 대남전략 구사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핵전쟁 위협을 비롯해 국지도발과 남한 사회 혼란 조성을 병행하는 복합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그리

고 그 위협은 단발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앞으로 2년 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고조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또 북한은 당대회를 앞두고 정책성과 거양을 도모하고 있어 대남정책은 매우 공세적으로 운용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 전환 목표로 볼 때 ‘비평화적 방법’ 구사

김정은은 지난 연말 연초에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와 연계시켰다. 한마디로 전쟁 위협, 무력 정벌 여건 개척에 대남사업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10여 년간 핵미사일 고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 전반을 관리해 왔다. 대남정책도 핵 개발 정책에 종속되기는 마찬가지다.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에서 내외의 압박이 거세지자 한때는 전면적인 화해·협력으로의 남북관계 ‘대전환’(2018)을 주장하던데, 이번에는 교전 국가 관계로의 대남정책 대전환(2024)을 주장했다. 2018년의 ‘대전환’은 일시적으로 제재·압박을 모면하기 위한 숨 돌리기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남반부 평정’이나 ‘대사변’ 준비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남사업의 전개 방향은 ‘대사변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주장한 대남정책 전환의 목표 즉, 대사변 준비의 의미를 살펴보자.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닌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이와 연계해 대남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더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¹⁶³⁾하는 대적 교양 강화를 주장했다.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은 대한민국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 공존하겠다는 것이

163) 김정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4.1.16.

아니며, 적대와 타도의 대상일 뿐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데 방점을 찍었다.¹⁶⁴⁾ 김정은의 두 개 적대 국가론과 대사변 준비론의 근거를 남한의 ‘일관된 흡수통일 정책과 군사대결책동’에서 찾고 있다.

김정은의 주장 요지는, 남한의 ‘흡수통일’ 정책으로 볼 때 남북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남한은 ‘같은 민족으로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기존 대남사업체제는 ‘대적(對敵) 사업’ 체계로 바뀔 것이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하나는 ‘같은 민족, 화해·협력, 평화통일’을 지우는 네거티브 사업, 다른 하나는 ‘대사변 준비’를 위해 ‘교전 국가, 적대와 대립, 무력 점령’을 정당화하고 촉진하는 공세적 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남북 경계선(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경계선’)에 물리적·심리적 장벽과 장애물을 조성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결국 김정은이 대남사업을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는 준비”¹⁶⁵⁾를 하라는 것은 군대의 싸움 준비에 맞춰 적정 교란과 심리전에 집중하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 전환 의도로 볼 때 ‘8차 당대회 성과 사업’으로 추진

다음은 대남정책 전환 ‘의도’ 면에서 대남전략·전술 전개 방향을 전망해본다. 김정은이 왜 이 시점에 대남정책 전환을 주장했을까. 북한 내부·대남·대외를 동시에 겨냥한 다목적 차원으로 평가된다. 핵 개발

164) 북한 입장에선 내재적 해석에 의하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배경은 핵보유를 통한 대미 대결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자 자신감의 발로이며, 같은 민족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자신들이 만든 핵 독트린 교의의 ‘커다란 구멍’을 ‘대한민국’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해서 메꾼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 방법은 ‘1950년 Version 2’의 방식인 ‘비평화적 방법’으로 ‘영토 완성’ 추구 전략이라고 한다. 1950년 Version과 다른 점은 ‘평화적 방식’의 통일이행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높여놨다는 점이라고 한다. “‘주적’을 철회한 대한민국, 외세로부터 자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포기한 대한민국이 되면” 평화적 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광수, “시론, 정세변화와 남측 진보운동의 나아갈 길,” 『통일뉴스』, 2024.1.23.

165) 『노동신문』, 2023.12.31., *op. cit.*

정책과 남한에 대한 동경심 차단 등 북한 내부 정책 정당화, 남한 사회 내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싼 갈등 조장을 위한 ‘전쟁이나, 평화나’ 프레임 걸기, 대선을 앞둔 미국 사회에 대북정책 전환 여론 조성 및 중·러·북 연대 강화를¹⁶⁶⁾ 통한 한반도 정세 조작 위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북한이 주민들에게 핵미사일 고도화 지속의 불가피성을 중점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점, 남한을 “미국의 노복국가”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미관계를 주종관계로 보는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 오랜 대미 접근 노력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대남정책 전환 의도는 내부적으로 핵 개발 정당화와 대미 접근을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남한을 인질로 삼아 대남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남한 사회 내 대북정책 전환 압박 효과는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남정책 전환이 내부 정책 정당화와 대미 접근 차원에 있음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 집권 10년 차부터 지도자의 편향된 정책과 민생 유예 장기화로 사회적 불만과 정책 이견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부터 한·미의 군사적 압박을 거론하며 왜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해야 하는지를 변명하기 시작했다. 이번 당·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정은은 ‘한·미가 주적이며 여기에 핵무기 용처(用處)가 있다’는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 압박 강화를 통해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의도 중의 하나가 트럼프 2기 출범을 겨냥해 또다시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을

166) 중·북은 올해가 수교 75돌로 ‘친선의 해’로 정한 만큼 쌍방의 밀착이 가속화될 것이며 경제협력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러시아와는 푸틴 대통령의 ‘빠른 시일 내 방북’(1/16 푸틴이 최선희 외무상 면담시 언급)이 이루어지고 상호 조약 개정을 통해 군사협력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중·러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평정하는 대사변’을 위협할 것이다.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은 일반적이라서 긴 설명을 하지 않는다. 북한의 대외전략이 대미 접근을 포기하고 대중·러 접근으로 돌아섰다는 해석도 있으나,¹⁶⁷⁾ 필자는 최근 북한의 대러 밀착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불량국가 행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2017년과 버금가는 대미 벼랑 끝 전술 구사(Again 2017) 가능성을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미 행정부가 출범해 대북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내년까지 열어놓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된 대남정책 전환의 방향은 순전히 ‘대남’ 사업 차원에서 전개되기보다는 내부 정책 정당화와 대미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노리는 방향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실체가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으나 대내 정치적 효과와 국제정치적 효과를 거두는 방법으로 NLL을 다시 쟁점화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서해해상경계선’을 북한 헌법에 자기들 ‘영해’로 규정하여 남북 간은 물론 국제적 분쟁 거리로 확대함으로써 대남 긴장 조성, 내부 결속, 대미협상 유도라는 복합적 효과를 노리는 방식이다.

북한의 정치 일정과 연계시켜 볼 때 앞으로 예상되는 대남정책 전환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것이다. 남한총선이 있는 올해 4월 혹은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을 겨냥한 단발성 전략·전술 구사보다 2024~2025년 기간에 연속적, 점증적, 복합적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대남정책 전환은 8차 당대회 ‘사업총화거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은 2025년 10월 당창건 80돌 행사, 2026년 1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의 리더십으로 선전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모할 것이다.

167)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김정은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며 한반도의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면서 “북한이 미·북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중·러·북 협력을 강화하는 대외정책의 근본적 변화(bedrock policy shift)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몇 달내 한에 치명적 군사행동…연평도 포격 이상 가능성,” 『중앙일보』, 2024.1.26.

(3) 정책 전환의 성격으로 볼 때 ‘공세적 전술’ 구사

정책 ‘전환’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 김정은의 ‘지침’은 지난 12월 당 전원회의 발언과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확인된다. 두 회의에서 김정은 발언의 공통점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공세적으로 ‘남반부 영토 평정’ 혹은 ‘대한민국 점령·수복·편입’ 추진과 ‘대사변 준비’를 주장한 점이다. 차이점은 12월 당 전원회의에서와는 달리 1월 최고인민회의 발언에서는 내부적으로 취할 조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추가했다는 점이다.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주권 행사영역이 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접경지역 등 북남 연계 조건을 철저히 분리”하라는 등 북한을 남한과 단절된 ‘독립적인 국가’로 관리하려 한다는 인식을 자아내는 방어적인 조치에 비중을 두고 대남정책 전환 사업을 거론했다(〈표 III-2〉 참고).¹⁶⁸⁾

<표 III-2> 김정은의 ‘대남사업 전환’ 관련 공개 지침

2023.12.30. 당 전원회의	2024.1.15.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 • 남한을 “주적”으로 간주, “화해·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말 것 • “당 통일전선부 비롯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 정리·개편할 것” • 대남사업의 “근본적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 • 대남사업은 “남반부 영토 평정 군사행동에 보조 맞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연대기구·단체들 정리” • 대남사업 관련 북한 “헌법 일부 내용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방한계선 불허용 등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 - “전쟁시 대한민국 점령·평정·수복 및 영토편입 문제 반영” -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낱말(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등) 불사용,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교양사업 강화” -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 “동족,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 상징 과거 잔여물 처리” • “접경지역(봉쇄) 등 북남 연계 조건을 철저히 분리” • “꼴불견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 “공화국 역사에서 통일, 화해, 민족 개념을 완전히 제거”

168) 『노동신문』, 2024.1.16., *op. cit.*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내부 체제관리 기구로 그곳에서의 김정은 시정연설은 주로 북한 주민들을 청중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가 법령을 정비하고 체제 내부를 관리하는 내각의 정책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내부 조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지만¹⁶⁹⁾,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과 대남정책 전환론이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을 우려한 수세적인 성격의 조치인지, 남한을 핵 공격 위협으로 인질로 삼고 장차 ‘영토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인지는 면밀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성격에 따라 우리의 대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¹⁷⁰⁾

북한의 정책 전환이 ‘수세적 성격의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주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의 내부 조치 거론 외에도 김정은의 핵 사용과 전쟁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등 ‘조건부’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 지방공업발전 추진 등 김정은의 민생 행보가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¹⁷¹⁾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로 한반도 현상 변경을 추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김정은은 집권 초반부터 외부의 위협을 과대 포장하고 역(逆) 강압 전략으로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했다. 핵 개발에 ‘성공’하자 핵무기의 억제력 외에 ‘제2의 사망’을 거론하면서 핵 개발 성과를 김정

169) 김정은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정책 전환을 ‘결단’했으나 내부 논의가 털렸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의제의 미숙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문제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

170) 대남정책 전환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는 한기범,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성격’ 평가,”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4.2.14.

171) 우리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600mm 초대형 방사포인 KN-25가 양산되는 즉시 수십 발 규모로 러시아에 흘러 들어갔다. KN-23/25는 북한이 수년간 공들여 개발한 신형 대남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포탄은 최대 수백만 발이 러시아로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 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약 5,000개이다. 152mm 포탄 기준 약 230만발, 122mm 방사포탄 기준 약 40만 발을 채울 수 있다. “‘전쟁 불사하겠다’더니 핵심 무기 수출…북한의 아이러니,” 『중앙SUNDAY』, 2024.1.21.

은 지배 자체와 동일시하면서 편향된 핵 개발 정책을 절대화했다. 핵미사일 고도화를 장기간 추진하면서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구실이 필요해졌을 것이다. ‘수세적’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폐쇄와 단절’도 북한의 오랜 체제관리 수법이나 김정은에게는 핵 개발 전략의 보조(補助) 전략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대남정책 전환을 내부 단속에도 활용할 정도로 체제 이반현상이 현저해졌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그럴수록 핵 무력을 한반도 현상 변경에 공세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은 증가할 것이다. ‘영토 완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와 ‘독립국가로서의 주권행사’를 동시에 거론함으로써 대남 기만 또는 혼란 조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¹⁷²⁾

요컨대, 이번 대남정책 전환은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세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와 핵전쟁 준비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동시에 발신하는 것은 당장 ‘전쟁’은 아니더라도 핵 공갈이 포함된 ‘도발’을 예고한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앞으로 당분간, 내부적으로 ‘대적 교양 강화’라는 배수진을 치고 ‘독사 전술’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빈번히 구사할 것이다. 실제 전면전쟁까지는 아닐지라도 ‘교전 중인 국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구체적인 대내외 조치 전망

(1) 내부 조치: 민족·통일 지우기, 대적 교양, 헌법개정, 전민항전 준비
먼저 대남정책 전환에 따른 내부조치를 보자. 김정은이 1월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대남정책 전환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취할 조치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공화국 영

172) 한기범,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성격’ 평가,”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4. 2.14.

역 규정”, “남한을 주적으로 하는 교양 사업 강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민족과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과거 시대 잔여물 처리”, “꼴불견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 개념 완전 제거”를 지시했다. 김정일이 남한 사회와의 완전한 단절과 적대를 추구해 북한판 ‘쇄국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내부 조치로 ‘통일, 화해, 민족’ 표현·상징물·역사 제거 작업, 주민들에 대한 대적(對敵) 교양 강화, 헌법에 대남 및 영토 관련 규정 개정, 대남정책·기구 정비, ‘전민 항전’ 준비로 나눌 수 있다. 그중 대남사업 체계 정비는 대남 조치에서 살펴보고 나머지 조치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⁷³⁾ 통일·민족·화해 개념과 연결된 상징물은 신속히 없었을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이 오랜 기간 구축한 ‘통일 민족주의’ 담론과 ‘연방제 통일정책’과 관련된 문헌들을 정리하고 ‘김일성 민족’ 등 민족 개념과 ‘삼천리’, ‘8천만’ 등 “남과 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개념”을 없애는 작업은 복잡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며, 권력층 내부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 ‘선대 유훈’과 상반된¹⁷⁴⁾ 김정일의 극단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될 것이다.¹⁷⁵⁾

173) 김정일이 2001년 8월 14일 건립한 3대헌장 기념탑은 2024년 1월 19일 촬영된 영상에서 사라져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1월 23일 NK뉴스가 보도했다. “북, 김정은 지시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연합뉴스』, 2024.1.23.

174) 친북 진영에서는 김정은이 선대의 ‘연방제 통일’ 유훈을 정책적 실패로 규정했거나 그것이 유훈으로부터의 탈선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술적으로 적극 수용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마치 김일성의 ‘비핵화’ 유훈을 핵보유를 통해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김광수, “시론, 정세변화와 남측 진보운동의 나아갈 길,” *op. cit.*

175) 김정은의 ‘대남 쇄국정책’은 전략적 실수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선은 하나다’를 모토로 통일 민족주의 논의에서 북쪽이 쌓아온 자원을 스스로 폐기하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김일성대에서 공부한 루디거 프랑크 빈대학 교수는 ‘38노스’에 쓴 글에서 김정은의 새 정책을 ‘한국에 주는 선물’로 비유하며 ‘역설

남한에 대한 ‘대적(對敵) 교양’도 강화될 것이다. 연초에 나선시당은 “남조선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는 김정은의 방침지시문을 접수해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남조선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돼있는 적대국으로 동족이라는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할 것”과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반정부 투쟁으로 내부정세가 위기에 달하고 있어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방침을 전파했다고 한다.¹⁷⁶⁾ 북한은 이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사상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남한풍’과 ‘비사회주의 현상’ 확산을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형을 강화했다. 남한풍을 차단하는 방식에서 남한을 적대하는 방식으로 사상 교양을 전개할 것이다.

김정은은 대남부문 관련 헌법개정 사항으로 ‘영토규정, 전쟁 발발시 남한수복·편입 명기, 남과 북을 민족으로 오도하는 개념 불사용, 대남 주적 교양 강화, 북반부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삭제’ 등 5개 항목을 거론했다. 이를 연구해 차기 최고인민회의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다. 헌법에 남과 북을 ‘적대국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영토 조항으로 MDL과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¹⁷⁷⁾을 국경선으로 명기한 데 이어 지뢰·콘크리트·함정 등으로 ‘국경선’을 밀봉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밀봉 경험이 활용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을 수복·편입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추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도 강화할 것이다. 김정은은 연초부터 군대의 싸움 준비는 물론 ‘전민항쟁 준비’를 강조했다. 민간무력에 대한 훈련

적으로 이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한국의 보수세력이 될 듯하다”고 했다. 북쪽의 통일정책 폐기로 앞으로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는 유일한 주체가 될 터이고, 북쪽은 군사행동을 동반한 대남 강경정책으로 남쪽 보수세력의 입지를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선언을 읽는 5개 물음표,” 『한겨레』, 2024.1.18.

176) “남조선에 대한 환상은 죽음” 김정은 방침지시문 포치·침투, 『데일리NK』, 2024.1.9.

177) 북한은 1999년 9월 NLL에 대응해 한강하구에서 덕적도 및 백령도 중간점을 연결하는 선을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이라며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과 동원태세를 강화할 것이며, 전시 예비물자 비축, 주민 대상 전시 대피 훈련으로 당장 전쟁을 일으킬 듯 내부 긴장 수위를 높일 것이다.

전례대로라면 올 3월 15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이어 4월에 15기 1차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2026년 1월 9차 당대회가 소집되면 당규약도 개정할 것이다.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한 직후 남북관계는 ‘조·한(조선·대한민국) 관계’로 명명될 것이고, ‘서해해상경계선’을 둘러싼 긴장 고조가 예상되며, 북한이 ‘조국통일 전쟁’이 아닌 ‘남조선 정벌 전쟁’¹⁷⁸⁾을 추구하는 등 대남 강성의 표출 정도가 한 단계 오를 것이다.

북한 헌법·당규약·공식문건·역사·교육·교양에서 ‘민족, 화해, 통일’ 개념을 지우고 새로운 ‘대적’ 개념으로 대체하는 작업은 방대해서 2~3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일성·김정일 ‘통일 유훈’과는 다른 방침으로, 남북관계 규정 논리 대체 작업의 복잡성으로, 기존 개념과 연관된 직무 종사자들의 부정적 심리로 내부의 대남정책 조정작업은 혼란과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¹⁷⁹⁾

(2) 대남사업체계 정비 : 통전부 기능·명칭 재정립 불구 갈등 불가피

북한의 대남사업은 당 통일전선부가 대화·협상 기구인 조평통을 앞세워 주도하다가,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2009년 무렵 대남 공작·침투를 주 기능으로 하는 군부 산하 정찰총국이 주도하기 시작했

178) 1월 28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은 “미국과 괴뢰 대한민국 족속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만약 전쟁의 도화선에 불꽃이 이는 경우 우리의 무자비한 정벌의 목표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179) 북한의 ‘통일’ 개념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공세적 차원에서 주장했으나, 이후 남한을 반통일세력으로 몰아가는 방어적 차원에서 통일을 이용했다. 지금은 남한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난해도 북한주민에게 잘 먹히지 않으며 통일 추진이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동안 북한의 지침에 따라 통일운동을 해온 조총련 측이 당황한 나머지 ‘이제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다급히 통일전선부에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도 있다. 장세정, “김정은 민족·통일 부정에 주사파 ‘멘붕 침묵,’” 『중앙일보』, 2024.1.22.

다.¹⁸⁰⁾ 정찰총국장에서 통전부장으로 승진한 김영철¹⁸¹⁾은 2018년 대미 핵 협상까지 주도하다가 이듬해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통전부장에서 해임되었고, 대남기구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위축되었다. 대남기구의 위축과정은 다음과 같다.¹⁸²⁾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대남비서 직제를 없앴다. 대남비서는 대남사업 전반과 해외동포 대상 통일전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그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한 단계 낮은 당 통일전선부장이 총괄하게 되었다. 8차 당대회 이후 ‘조평통’도 사실상 활동을 멈추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정책을 집행하는 외곽기구로 대남 대화·협상 업무와 남한 및 해외동포를 상대로 통일전선 및 친북 여론 조성 기능을 수행했다. 남북대화에 참여함에도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남측의 문제 제기로 조평통은 2016년 6월 국가기구로 편입되었고, 2018년 1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조평통위원장 리선권이 나서기도 했다. 그러다가 통상 중요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오던 조평통이 2019년 8월을 끝으로 북한 보도 매체에서 사라졌으며,¹⁸³⁾

-
- 180) 최승철·권호웅 등 통전부 간부들이 2009년경 숙청되면서 김정은 집권 초기 대남사업은 김영철 등 군부 산하의 정찰총국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정찰총국은 군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이 당 산하 작전부와 대외정보조사부를 흡수해 확장된 군 산하 대남공작기구이다. 게다가 2015년 12월 대남 비서 김양건의 사망 이후 북한의 외교·안보 기구는 한때 김영철 통전부장, 리선권 외무상, 림팔일 총참모장 등 한때 정찰총국 출신들이 거의 독식했다.
- 181) 김영철은 2009년 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에서, 김양건 당대남비서 겸 통전부장 사망(2015.12.) 직후인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대남비서 겸 통전부장을 승계했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인 2019년 4월 해임되었다. 2021년 1월에 당 통전부장 재등용(당대남비서 직제는 폐지) 되었으나 이듬해 2022년 6월 리선권으로 교체되었고, 김영철은 2023년 6월 통전부 고문으로 등장했다.
- 182) 대남기구의 기능도 축소되었다. 정찰총국은 사이버 해킹에, 문화교류국·조선6·15편집사 등 당 통전부 산하 기구는 사이버 심리전 업무에 주력하는 등 외관상 사이버 업무가 주 기능으로 나타났다.
- 183) 조평통 담화는 2019년 8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마지막으로 조평통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1년 3월 김영정은 담화에서 “현정세에서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을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후 조평통은 북한 매체에서

조평통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김정은의 당 전원회의(12.30)에서 “당 통일전선부를 비롯해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 정리·개편”을 지시한 직후 북한은 김정은 지시 이행을 위한 ‘대적부분 일꾼 협의회’(1.1, 최선희 외무상 주재)와 ‘대적부분 일꾼 쉼기모임’(1.12)¹⁸⁴을 진행했으며, 1월 중순부터 대남 단체·방송·웹사이트를 폐쇄했다. 1월 12일에는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민족화해협의회 등 대남 화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를 없앴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 도메인(.kp)을 이용하는 우리민족끼리·통일의메아리·류경·조선의오늘·려명 등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들도 1월 11일부로 폐쇄되었고, 대남 방송인 ‘평양방송’도 1월 12일부로 중단되었음이 확인되었다.¹⁸⁵

북한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남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기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¹⁸⁶ 김정은이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라고 하면서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사라졌다.

184) 1월 12일에는 “대적부분 일꾼들의 쉼기모임”을 진행하여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6·15북측위·민화협 등 대남교류단체 정리,” 『연합뉴스』, 2024.1.13.

185) “북한, 남파간첩에 지령 보내던 라디오 ‘평양방송’도 중단,” 『연합뉴스』, 2024.1.13.

186) 북한은 폐지 이유로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젠가도 통일을 이룰수 없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조선반도에 통제불능의 위기상황을 항시적으로 지속시키며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로 된다”면서 “력사적 현실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낙인하면서” 폐지한다고 했다. 최고인민회의의 결정(2024.1.15.)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함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4.1.16.

발언한 점에서¹⁸⁷⁾ 민족경제협력국과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는 물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 대남 경협단체들은 진작에 철폐했을 것이며, 이번에 없어진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 통일전선부도 김정은 지시대로 ‘정리·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리·개편 방향은 ‘폐지’¹⁸⁸⁾가 아닌 ‘기능 재정립 및 명칭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대적’ 혹은 ‘대한’ 관계 업무나 조총련·재증총련 등 해외동포 업무가 여전히 중요하고 외무성은 국가기구로서 당차원의 정책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일전선부의 기능은 남북대화·교류·협력, 조총련·재증총련 등 해외 통일전선체 관리, 문화교류국을 통한 남한 및 해외 간첩망 구축, 대남 및 해외 사이버 심리전 공작을 수행하는 정찰총국 지휘 등 방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당 통전부를 폐지하고 당 차원의 정책관리는 당 국제부로 통합하면서 집행기능은 외무성과 정찰총국 등 여타 공작기구로 분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이 ‘적대 국가관계’에서 ‘적대’보다 ‘단절’에 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전부의 ‘적대’ 기능을 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경우 대남 대화·협상 기능과 조총련 등 통일전선체 관리 기능은 외무성으로, 대남·해외 사이버 및 간첩망 구축 기능은 정찰총국으로 이관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187) “김정은 ‘금강산 남시설, 싹 들어내라’ 초강수…남북경협 빨간불,” 『연합뉴스』, 2019.10.23. 북한은 2019년 12월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2020년 2월까지 남측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했다가, 2022년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2016년 2월에 폐쇄된 개성공단은 2022년에 북측이 공단시설 일부를 무단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88) 2024년 1월 1일 소집된 ‘대적부문일꾼협의회’에서 최선희는 외무상 직책으로 회의를 주관했으나, 당 통전부장인 리선권은 직책 소개 없이 이름만 북한 관영매체에 보도되어 일각에서는 이를 ‘통전부 폐지’를 예고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말을 김정은이 쓰지 말라고 했으니 당장 ‘통일전선부장’이라는 직책을 거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명칭으로 개칭하고 대화·협력 기능을 축소하면서 사실상 그대로 존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통전부의 기능은 대남·해외 공작, 통일전선체 관리 등 단순한 외교 업무가 아닌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및 ‘국제혁명지원역량 강화’ 등 무력통일 측면 지원 내지 선도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고, 대남·해외 부문에서 통일전선부(정찰총국) 출신들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통전부가 대미협상마저 주도하다가 비판을 받았고, 2019년 이후부터 대남기구의 축소 및 대남정책 전환 조짐을 보여왔다는 점에서,¹⁸⁹⁾ 북한 권력층 내 대남사업 주도권 다툼 내지는 노선 갈등이 상당 기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김정은이 ‘결론’을 내렸으나 후유증이 남아 그 후속 조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3) 대남 조치: NLL 쟁점화, 전쟁·평화 프레임 걸기, 무력정벌 전초전 수행

대남정책 전환의 ‘대남’ 조치에 대해서 김정은이 밝힌 사항은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남사업의 “근본적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하며, 남한을 “화해·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말고 “주적”으로 간주하면서, 대남사업을 “남반부 영토를 평정하는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했다. 대내 조치와는 달리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추상적 방향 제시에 그쳤으나, 대남부문 발언 전반의 맥락에서 유추하면, 남북관계는 ‘적대적 국가관

189) 김정은이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사업을 “선임자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판한 것이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10년도 아닌 반세기를 넘는 세월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했다”라는 결론을 짓게 했다. 대남정책의 변화 조짐으로는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한미에 대한 ‘장기 대결전’ 선언,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정책을 ‘대적 사업’으로 규정,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에 ‘조국통일 투쟁’ 및 ‘우리민족끼리’ 삭제와 ‘힘을 통한 평화와 통일’ 명문화, 2022년 김정은 남매 ‘남조선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발언, 2023년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기 시작한 것 등이다.

계'로 간주하고 평화통일이 아닌 '무력에 의한 정벌'을 추구할 것이며, 대남사업도 '비평화적 방법'을 동원하라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우선 북한의 '주권행사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대책' 시행으로 NLL과 MDL에서의 충돌이 우려된다. 북한은 NLL을 다시 분쟁 거리로 삼을 공산이 크다. 과거 북한이 내세운 '서해해상군사분계선(1999)'과 '서해 5도 통항질서(2000)'를 재론하면서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포격도발 위협이 우려된다. 때에 따라서는 미국과 해상 경계선을 다시 확정 짓는 협상을 제기(2020.10, 조평통)할 것이다. "접경지역 등 북남 연계 조건을 철저히 분리"하는 조치로 MDL에 지뢰를 추가 매설하거나 콘크리트 장벽을 구축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2월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콘크리트로 GP를 복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목함지뢰 매설 사건(2015.8.4.)과 같은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는 '남한 내 미제 축출, 파쇼정권 타도, 인민정권 수립'이었는데 변함이 없다.金正은의 대남사업의 '전환' 주장은 남북대화·협력과 연방제 통일 등 '평화적 방법'을 폐기하고 핵 위협과 침투·도발, 사회 혼란 조성 등 비평화적·폭력적 방법으로 '남조선 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엄밀히 해석하면 '남조선은 통일이 아닌 점령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대남정책은 군대의 '무력 점령'을 지원(혹은 선도)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 사회에 전쟁 위기 주입을 위한 심리전을 강화할 것이다. 고도의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프레임 걸기 전술을 시도할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과거와 같은 '탄핵정국'의 재발을 기대하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유도하여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의지를 꺾어 보겠다는 계산이다. 북한은 이 프레임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올봄이나 여름에 고강도 복합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 도발 논란은 보수 정당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거나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북한이 남한 사회에 집권당의 ‘대북정책 무능’과 함께 ‘전쟁이나, 평화나’ 이분법 구도 프레임을 형성해 ‘안보 무능’을 낙인찍는 데에도 성공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¹⁹⁰⁾

국내외 친북 단체들도 조직재편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2월 17일 ‘해산 총회’를 열고 ‘새 조직 건설 결의 대회’ 진행한다고 밝혔고,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1월 31일 총회를 열고 향후 노선을 논의했다.¹⁹¹⁾ 수십 년 유지해 온 대남전략이 일거에 붕괴되자 친북단체들은 내부혼란에 빠지면서도 ‘더 전투적인 자주적 민주 정부 수립 투쟁’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의 전쟁관을 정의(正義)의 전쟁관’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반도에서 미제의 지배를 종식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것들에 의한 정부를 몰아내는데” 목표를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¹⁹²⁾

김정은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적 입장’으로 “남한의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 중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근본적·본질적 문제

190) 북한의 대남 선거 개입 의도와 수법이 노출되고 남한의 정치 구도가 역동적으로 전개되면서 북한의 선거 개입 전술도 은밀해지고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동안 비무장지대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단순한 방법을 구사했으나 점차 남한의 역동적인 정치 구조로 북한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하고 역효과를 초래하자 진일보한 방법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방법이었다. 보수층의 분열을 유도하면서 진보층의 대북 유희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대형 안보 이슈가 발생했지만 ‘북한 도발→ 보수층 결집’ 공식이 깨진 대표적인 사례가 천안함 폭침 석 달 후에 치러진 2010년 6월 지방선거였다.

191) “김 ‘통일폐기’ 한마디에… 범민련 남측본부 해산 수준,” 『조선일보』, 2024.2.2.: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1990년 11월 남북한과 해외 민간통일운동 대표들이 모여 결성한 기구다. ‘북측 본부’는 노동당 외곽기구다.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 공동선언 준비위원회’는 범민련처럼 남북 해외 각 계층을 망라해 2005년 결성된 민족통일운동 연대기구이다. 북측 기구는 지난 1월 12일 없앤다고 밝혔다.

192) 김 ‘통일폐기’ 한마디에… 범민련 남측본부 해산 수준,” 『조선일보』, 2024.2.2.: 친북세력은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에서처럼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평화는 분단극복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면서, 통일전쟁이 일어나 ‘결과로서의 평화’가 만들어지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김광수, “시론, 정세변화와 남측 진보운동의 나아갈 길,” *op. cit.*

라고 했고, 방역 협력, 인도주의 협력, 개별 관광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했다.¹⁹³⁾ 8차 당대회에서 밝힌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동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대적 차원에서 해법을 추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무력 점령을 위한 ‘3대 혁명역량 강화’(1964.2.)를 위해 북한 내 사상·군사역량, 남한 내 지하당 구축 및 반미·반정부 투쟁, 국제적으로 한·미 이간 및 한국 고립화 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대남사업 전환에서 예상되는 또 다른 특징점은 앞으로의 대남전략은 단순히 대남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군사·외교를 아우르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 수법도 군사적 위협, 중·러·북 연대를 통한 압박전략, 대남 침투·도발을 통한 혼란 조성 전술 등 하이브리드 방식이 될 것이다. 향후 대남전략이 포괄적으로 구사될 것임은 북한이 새롭게 추구하는 대남전략 전환의 목표가 다차원적이며, 김정은이 대남사업을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라”고 한 점, 김정은의 지시 이행을 위한 연초 ‘대적부문 일꾼 협의회’를 외무상이 주재한 점에서도 예고했다. 대남전략 변화에 따른 북한의 도발 형태도 재래식 도발과 핵미사일 도발을 병행하는, 한·미를 동시에 겨냥한 복합도발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 대남도발 유형 및 양상

(1) 대남도발 개념과 유형 분류

대남 ‘도발(provocation)’은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전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정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과 물리적 행동으로 남한의 정치·사회·경제에 부정적 파급영향을 초래하는 전술의 한 형태다.¹⁹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 행위는 ‘공격’이지 ‘도발’이

19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1.1.9., *op. cit.*

194) 우리 군은 ‘국지도발’의 개념을 “북한이 침투하는 행위 또는 일정지역에서 특정

아니다. ‘도발’은 문제 유발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전술 환경으로 이용하는 전략적 사고(일종의 심리전)를 포함한다.¹⁹⁵⁾ ‘도발’은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과 물리적 행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남 선전·선동 방식에 의한 심리전과 구분되며, 한정적인 위해(危害) 혹은 국지도발에 그친다는 점에서 전면전쟁과 구분된다.

도발의 개념은 전면전에 이르지 않은 제한적 도발 상황이나, 수단 면에서는 군사·비군사를 한정하지 않는다. 도발의 형태로는 포격 도발, 무장 침투, 테러, 암살 기도, 납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다양하다.¹⁹⁶⁾ 도발 강도를 기준으로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도발로 구분한다.¹⁹⁷⁾ 도발 유형은 주체가 드러난 국지도발, 주체가 불분명한 국지도발로 나눌 수 있으며, 대남 혁명을 위한 간접전략 차원의 도발, 남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강압 전략을 목표로 한 도발로도 구분된다.

북한은 과거 60~70년대에 국지도발을 대남 혁명을 위한 간접 수단으로 활용했고, 탈냉전 이후에는 주로 강압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했다.¹⁹⁸⁾ 전통적인 대남도발 개념은 대남 선전·선동·침투·도발-전쟁 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영역에서 가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합동국지도발대비작전』(서울: 합동참모본부, 2017), pp. 1~8 재인용: 이영규,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1.8., p. 2.

- 195) 도발은 ‘전략적 문제 유발 행위’라는 해석도 있다. 문순보, 『북한의 도발 환경 비교 분석』, 세종정책연구 2012-13, p. 8.
- 196) 국방백서는 핵미사일 도발 외의 도발 유형을 침투와 국지도발로 나누고 침투는 다시 직접침투, 간접침투, 월북남북자 남파로, 국지도발은 지상도발, 해상도발, 공중도발, GPS 교란으로 구분한다.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 352.
- 197) 고강도 도발은 확전 가능성과 함께 심대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도발, 중강도 도발은 잠재적 확전 가능성은 있으나 지엽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종결된 도발(주로, 육상 전선지역 침투), 저강도 도발은 확전 가능성과 무관하거나 사후에 인지된 단순 침투도발(주로, 후방침투)이다.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p. 132.
- 198) 이영규,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p. 11 재인용: 이미숙,

념의 중간에 위치하나, 오늘날의 도발 개념은 점차 말에 의한 선전·선동도 ‘말 폭탄’으로 발전하였고, 핵·미사일 위협에 의한 도발이 빈번해졌으며, 비대칭전·네트전¹⁹⁹⁾, 사이버·전자전(EW)·인지전(Cognitive Warfare)²⁰⁰⁾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군사·비군사 수단이 혼합된 하이브리전으로 점차 전쟁과의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표 III-3> 북한의 대남도발 유형

	심리전	군사 도발	침투/테러	핵미사일 도발	새로운 형태
수단	cyber 공간 방송전파, 전단	총·포격, EMP 지뢰매설	드론, 무인기 무장 인원, 간첩 함정, cyber해킹	핵무기, 미사일 정찰위성, 잠수함	비대칭 능력, 전자파, 가짜 뉴스, 비군사 수단
형태	당국자 비방 흑색 선전·조작 가짜뉴스 전파	NLL/DMZ 포격함정/GP 총포격 무력 시위	DMZ·내륙 침투 폭파, 암살, 납치 cyber망 교란	핵·미사일 실험, 전술핵훈련·시위 정찰위성 발사	비대칭전, 네트전, 사이버전, 인지전 하이브리전
목적	남남갈등 조장 반정부 선동 한미동맹 이간	긴장 고조 정책 전환 압박 전쟁/평화 프레임	정탐, 지하망구축 국가시설 마비 사회 혼란 조성	대미억제, 대남억압 정책전환압박	혼란조성 의사결정 교란 정책전환 압박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pp. 132~133.

199) ‘비대칭전(asymmetry war)’은 갈등 상황에 놓인 행위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경제력, 잠재력 등에서 보유한 자원의 격차를 분쟁에 활용함을 의미하고, ‘네트전(net war)’은 정보혁명이 진행된 탈산업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쟁의 한 양상이다. ‘하이브리전(hybrid war)’는 전쟁과 평화,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전쟁 형태다. 이영규,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pp. 22~25.

200) 적 레이더나 통신장비를 재밍으로 무력화하거나, 아군 장비를 적의 전자파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개념이 전자전(EW)이고, 가짜 정보를 흘려 적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교란해 판단력과 전쟁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개념이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다. “[김귀근의 병영터치]우주·사이버·전자전…확대된 한미연합 연습,” 『연합뉴스』, 2023.8.20.

(2) 예상되는 도발 형태와 특징

북한이 남북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으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도발 수위를 크게 올릴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이다. 김정은이 대적 관계로의 전환과 전쟁 위협 고조를 통해 노리는 효과가 대남 전쟁·평화 프레임 걸기, 대미 대북정책 전환 압박, 내부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 정당화 및 긴장 조성 등으로 복합적·다차원적이라는 점에서 도발의 성격도 강도 높은, 복합도발이 예상된다.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은 남한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제압하고, 오는 4월 한국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계기를 활용하며, 한·미·일 대 중·러·북 대립의 선봉에서 한반도 정세를 조작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김정은이 노리는 도발 효과는 미국 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에 남남갈등 유발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유도하며, 북한 내부적으로도 핵 개발 지속을 정당화해주는 효과 발휘를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발은 ▲한국 사회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걸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도 영향을 미치며, ▲도발의 귀책 사유를 한·미에 전가할 수 있거나 도발 주체가 모호한 회색지대 도발을 꾀할 것이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하고 '대사변 준비'를 공언했다는 점에서 도발 위협 강도는 남한 사회 내에서 전쟁 위기를 실감하고 미국이 북한을 달래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도록 '위협적'일 것이다.

과거와 같은 단발성 도발로는 한·미에 '전쟁 대 평화' 프레임을 걸기가 어려움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도발의 특징은 첫째, 우리 국민이 '전쟁하자고 하는 것이냐'라고 느낄 정도로 고강도 도발을 할 것이다. 둘째, 미국 여론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고 중·러와의 연대 효과도 활용해야 하므로 도발 형태에는 핵미사일 도

발이 포함되고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성격의 복합도발 혹은 하이브리드 도발을 할 것이다. 셋째, 도발의 귀책 사유를 남한에 전가하거나 출처 불명의 도발 즉, 책임 전가형 혹은 희색 지대 도발 소재를 찾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과 도발 위협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 거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발성 도발보다는 도발 효과를 보아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점증형 도발이 예상된다. 다섯째, 북한 내부의 정치 일정 진행, 의식주 등 경제문제 집중 필요성 증대, 중·러와의 접근 강화 등은 극단적 도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과거 도발 사례와 시나리오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고강도 도발 사례로²⁰¹⁾ ①2010년의 천안함 폭침(3.26.)과 연평도 포격(11.23.), ②2013년 3~4월 각종 성명을 통한 대남 전면 대결전 선언, ③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유발을 통한 ‘준전시 상태’ 선포, ④ 2017년 8월 꺾 포위사격 위협 등을 통한 대미 대결전 선언을 들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이 이 같은 4개 유형의 도발 재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 고강도 도발은 확산 가능성과 함께 심대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도발이다. 2010년까지 북한의 고강도 도발 사례로는 청와대 기습 미수(68.1.21.),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68.10.30.), KAL 여객기 납북(69.12.11.),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74.8.15.),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76.8.18.),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83.10.9.), KAL 858기 폭파 사건(87.11.29.), 노동1호 미사일 발사(93.5.29.),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96.9.18.), 대포동 1호 시험발사(98.8.31.), 제1차/2차 연평해전(99.6.15./02.6.29.), 대포동 2호 시험발사(06.7.5.), 1차 핵실험(06.10.9.), 장거리 로켓 발사(09.4.5.), 2차 핵실험(09.5.25.), 대청해전(09.11.10.), 천안함 피격 사건(10.3.26.), 연평도 포격 도발(10.11.23.) 등 총 19건이다. 합동참모본부, 『북한 대남침투 및 도발 사례집』 (서울: 합참 정보본부, 2011), p. 6 재인용: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p. 132.

○ NLL·DMZ 도발

서해 NLL에서 일어난 북한의 대형도발은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을 시발점으로,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도 전투, 2010년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의 천안함 폭침,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어졌다. 이후 한국군의 강력한 NLL 수호로 이 지역에서 북한의 큰 도발이 줄었으나, 이번에 김정은이 느닷없이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 불허”를 주장함으로써²⁰²⁾ 서해 NLL이 다시 분쟁 우려 지역으로 급부상했다. 1월 25일 뉴욕타임스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향후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도발 가능성을 지적했다.²⁰³⁾

만약 북한이 오는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서해해상경계선’을 국경선으로 규정하면 헌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로 NLL을 무실화하기 위한 도발을 빈번히 자행할 것이며, 서해 NLL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칫 3차 연평해전이 일어날 수 있고, 2010년의 두 도발(천안함 폭침²⁰⁴⁾, 연평도 포격)이 재연될 수 있다. 잦은 NLL 도발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킬 것이며, 독도처럼 서해 수역을 ‘조·한 간의 분쟁 거리’로

202) 김정은은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노동신문』, 2024.1.16., *op. cit.*

203) “미뉴욕타임스 ‘북, 향후 몇 달 내 한국에 치명적인 군사행동 가능성,’” 『TV조선』, 2024.1.26.,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26/2024012690034.html> (검색일: 2024.2.2.).

204) 제임스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미 안보 매체 내셔널인테레스트 기고문에서 “김정은에게 개인적 생존이 최우선 순위라서 자신의 생존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한미동맹의 심각한 대응은 피하면서 힘을 과시하는 최상의 도발은 미사일 발사 또는 천안함 격침처럼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는 제한적 공격이다. 그가 핵무기 구축에 혈안이 된 이유는 웬만한 도발을 하더라도 한미 양국이 핵전쟁으로의 비화를 우려해 보복해 오지 못하리라는 계산 때문이다. 이처럼 핵무기를 앞세워 위협 도발을 가하는 배경을 핵그늘(nuclear shadow)이라고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2024.1.31.

국제사회에 쟁점화할 것이다.

김정은이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고, NLL은 우리의 실효적 지배선으로 북한도 사실상 이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위협’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김정은의 호전성 증대로 종래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남·군사 부문 간부들 사이의 충성심 경쟁으로 엉뚱한 불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인 ‘접경지역 등 북남 연계 조건을 철저히 분리’하는 조치로 MDL에 지뢰를 추가 매설하거나 콘크리트 장벽을 구축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2월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콘크리트로 GP를 복원한 바 있다. DMZ 지역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충돌을 빚을 수 있으며, DMZ 이남으로 북한이 무인기를 띄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의 북한 함정·잠수정의 출몰도 빈번해질 것이다.

○ ‘전면전 돌입’ 성명전

김정은은 10여 년 전인 2013년 3월 핵미사일 고도화에 착수하면서 각종 ‘말 폭탄’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적이 있다. 집권 이래 첫 핵실험(2013.2.12. 3차 핵실험)과 “자위적인 핵 보유 영구화”를 추진하는 ‘병진 노선’((2013.3.31. 선포)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 제재와 한미군사훈련을 핑계 삼아 2013년 3~4월 긴장 수위를 최고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성명전을 전개했다.²⁰⁵⁾

성명전으로는 2013년 3월에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 활동 전면 중지’ 발표(3.5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3.7 외무성 성명), “북남 불가침 합의 무효화”(3.8 조평통 성명),

205) 김진하·박형중 외,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210.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3.26 최고사령부 성명), “조선반도에 핵전쟁 상황 조성을 유엔안보리에 공개통보”(3.26 외무성 성명),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3.30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우리 존엄 훼손하면 개성공업지구 차단·폐쇄될 것” 위협(3.30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담화)이 있었다.²⁰⁶⁾

그해 3월 29일 김정은은 ‘전략로케트군 임무수행을 위한 작전회의’를 소집해 “전략로케트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²⁰⁷⁾ 북한 내부에서는 한미합동훈련에 대응한 군·관·민을 연계한 전국 규모의 군사훈련을 잇달아 실시하고, 전주민 갱도 대피 훈련도 실시했으며 모의 압해책동분자 신고·체포 훈련도 있었다. 북한은 남한 방송사·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전산망을 마비시켰고(3.20), 북한 내부에도 강력한 방해전파를 발사해 남한TV 방송 시청을 불가능하게 했다.²⁰⁸⁾

성명전은 물리적 위협을 예고함으로 자신이 의도하는 심리적 효과를 상대방에게 주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 달성하려는 현상 변경을 강요하거나 책임 전가 차원에서 말 폭탄을 쏟아낼 것이다. 특히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앞둔 3월 8월에, 그리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핵실험 직후에 정세관리 차원에서 성명전을 구사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성명전’은 2013년의 방식과 두 가지 점에서 차이

206) 홍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130~132.

207) 위의 책, p. 132.

208)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64~65.

가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가 ‘대적 관계’로 변경된 만큼 북한 군대와 외무성이 한국 사회 혹은 미국·유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성명전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과거와는 달리 핵미사일 고도화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물리적 위협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말 폭탄을 마냥 허세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국지도발 → ‘준전시’ 선포로 확전 위협

북한이 국지도발을 자행해 ‘전면전 확전’ 위협으로 비화시킨 사건이 2015년 8월의 목함지뢰 매설 사건(2015.8.4.)이다. 당시 북한이 한국군 DMZ 수색로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우리 수색대원이 중상을 입자 한국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8.14)했다. 이에 북한이 우리 영토에 고사포 3발을 발사했으며, 한국군은 10배 많은 고폭탄 29발을 날렸고(8.20), 북한은 그날 밤 김정은 주재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 회의를 소집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²⁰⁹⁾

‘준전시상태 돌입’(8.20., 17:00~ 8.25.)에 따라 북한 지상군은 전방 화포를 사격 진지에 전개하고 GP에 병력을 추가 투입했으며, 기계화 부대는 주둔지 인근 경도로 이동했다. 해군은 동·서해에서 공기부양정 및 잠수함정 수십 여척의 해상 활동과 NLL 북방 해군기지에 함정 수십척이 집결했다. 공군은 경도생활 전환 등 방공태세를 강화했을 뿐 이외 활동은 저조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전방지역에서는 예비군 동원도 있었다. 당시 북한군 동향은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화포·잠수함정

209) 북한은 다음날 아침 8월 21일 06:30 이례적으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공개했다. 결정 내용은 △군 전선사령부 반타격 공격작전 계획 비준, △총참모부 대남최후통첩(48시간 내 방송중단) 승인, △최고사령관 명령(8월 21일 17시부로 전선대연합부대의 전시상태로 이전 및 전선지대 준전시상태 선포) 하달, △십리전수단을 격파할 지휘관 전선급파 결정, △“전선시대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보위·보안기관, 사법검찰기관,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모든 단위들을 준전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적들의 침략 진상을 폭로하기 위한 대외부문 일꾼들의 임무과 과업”이 제시되었다.

등 기습전력 위주로 전개한 점이 특징이다. 전면전 징후로 볼 수 있는 후방부대의 전방이동, 기계화부대 기동, 전투기 남하 전개, 미사일부대 활동 등은 식별되지 않았다. 북한군 동향은 '전면전을 위한 작전'이라기보다는 제한된 수준의 도발 준비태세에 가까웠으며, 시위 효과가 큰 기습전력을 전개해 남한을 압박했다.

김정은이 “남조선 평정”을 주장하며 ‘전쟁 불사’를 공언한 만큼 말 폭탄이나 성명전에 그치지 않고 ‘준전시 상태’ 선포로 ‘전면전 위협’ 수위까지 긴장도를 높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이 ‘전면전 불사’를 외치며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다면, 2015년에는 북한이 화전(和戰) 양면 전술로 나와 북한이 ‘사과’하고 ‘확성기 방송중단과 준전시상태 해제’에 합의(8.25)했으나,²¹⁰⁾ 앞으로는 남한을 인질로 삼기 위한 대치 상태가 장기화되는 등 공세가 집요해질 수 있다. 북한 내부사정이 공세 기간과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핵미사일 도발과 대미 ‘타격’ 위협

국지도발을 통한 한반도 전쟁 위협 고조가 남한을 인질로 삼기 위한 전술이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괘 포위사격 위협’ 등 대미 타격으로 위협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13년 3월에 이어 2017년 8월 화성-12형 IRBM을 앞세워 ‘괘의 미군기지를 포위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018년 8월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있자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8월 8일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북한은 이전에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fire

210) 남한에서 김관진 안보실장과 통일부장관이, 북한에서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전부장이 8.22.~25. 3차례 판문점 접촉결과 8월 25일 02:00 ①당국회담 개최 ②지뢰도발 유감표명 ③8.25 12:00 확성기 방송 중단 ④북 준전시상태 해제 ⑤추석계기 이산상봉 진행 ⑥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김정은은 8월 28일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8.25 합의’를 ‘김정은의 지략과 영군술’에 의한 ‘不戰無血의 승리’로 자화자찬했다.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반응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인 8월 9일 새벽 북한은 군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동시에 냈다. 총참모부는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포함한 괴뢰 1, 3야전군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 전 종심을 동시 타격하겠다”라고 위협했다. 전략군 사령부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출격과 관련 “화성-12형으로 미국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괌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일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직접 TV에 나와 미군 통수권자가 “화염과 분노라며 망발을 늘어놓아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IRBM ‘화성-12’형 4발을 동시 발사하는 괌 포위사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8월 중순까지 방안을 최종 완성하여 김정은의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²¹¹⁾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과 북한군의 ‘괌 포위사격 검토’ 공방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감은 급상승했다. 북한이 “미 선제타격 조짐 땀서울 불바다”를 협박하여 한국을 핵 인질로 삼겠다는 본심도 명확히 드러냈다. 그해 8월 25일 선군절에 북한은 김정은 참관하에 고속단정과 AN-2를 탄 특수부대를 동원한 백령도·대연평도 점령훈련을 진행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2024년 1월 14일 신형 고체연료 추진제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²¹²⁾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3,500km이상으로 추정되며,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가 3,500km이다. 북한의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

211) 이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8.9 성명에서 “북한은 정권의 종말을 이끌 어떤 행동도 고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날 미국의 NBC방송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리면 괌에 배치된 B-1B 전폭기 6대가 북 미사일 기지 20여 곳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212) “북, ‘신형 고체연료 추진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 성공 주장,” 『연합뉴스』, 2024.1.15.

미의 요격망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BM) 시험발사도 했다. 북한이 주일미군기지와 괌에 대한 기습공격 역량을 구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내년 8월 UFS 등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할 계획임을 밝혔다. 북한은 오는 8월 UFS훈련 직후 7차 핵실험과 대미 '포격' 위협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사이버 공작·테러로 대남 선거개입 및 혼란조성

최근 사이버 위협행위자에 의한 첨단기술 유출, 가상자산 탈취와 함께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를 통한 여론조작, 핵심 인프라 무력화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들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24년 2월 우리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간상 영향력 공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개정해 공세적 방어 활동을 강화했다.²¹³⁾

세계 최고 수준인 남한의 디지털 환경은 국민의 삶의 편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만 역으로 소통의 편의성·신속성·확산성으로 북한이 회색지대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력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과 함께 3대 공격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이버전은 정찰총국, 총참모부(적공국, 지휘자동화국), 통일전선부 등 여러 기구에서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남정책 전환 이후 정찰총국 121국의 사이버 공격(GPS 교란,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과 통일전선부 예하 기구의 사이버 심리전(흑색선전, 가짜뉴스 전파) 강화가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전파 등 흑색선전은 물론 선거 시스템 해킹도 우려된다. 공공망에

213) 국가안보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2024.2.1.

대한 디도스 공격(2011), 농협 전산망 공격(2012.4.), 방송사·금융사 내부 시스템 공격(2013) 등 과거와 같은 사이버 테러를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하거나 AI를 악용한 위협²¹⁴⁾으로 국가 핵심시설을 마비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 조성을 기도할 것이다.

○ 도발 시나리오 종합

향후 북한의 도발은 ‘전쟁이나, 평화나’ 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고강도·복합도발·책임 전가형·점증형 성격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NLL·MDL 충돌이나 천안함 폭침 유사 도발을 시작으로 2013년 3월의 전방위적 전쟁 위협, 2015년 8월의 준전시상태 선포, 2017년의 핵미사일 도발이 함께 어우러지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과거와 같은 단발성 도발로는 한·미에 ‘전쟁 대 평화’ 프레임을 걸기가 어려움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복합도발이 우려된다. 한국 사회 교란을 위한 사이버 공격도 강화될 것이다.

복합도발은 ‘MDL/NLL 총·포격 도발 → 준전시상태 선포 + 대미 ‘괘 포위사격’ 위협 → 추가 핵실험 + ICBM/SLBM 발사’ 형태가 되거나, 상황에 따라 이들 도발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발 시점은 올 3, 8월 한미 연합훈련(자유의 방패)을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올 4월 한국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이 계기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도발을 가상한 올 8월 한미의 UFS 훈련 직후, 미국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7.15~18)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직후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진행되는 시점인 8월 말~9월 시점을

214) 삼성SDS는 국내 보안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주목할 5대 사이버 위협으로 AI를 악용한 보안위협,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보안 위협, 개인·민간정보 유출, 지속 진화하는 랜섬 웨어, 공격 대상 확장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위협을 꼽았다. 특히 ‘웜 GPT’와 ‘사기 GPT’를 악용해 손쉽게 대량으로 악성코드를 제작한 사이버 공격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4.1.23.

북한이 도발의 적기로 간주할 수 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화산-31 비롯한 전술핵을 다종의 투발 수단에 최적의 조건으로 장착하려면 수차례 핵실험으로 성능과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

김정은의 비합리성과 정세 전개에의 우발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점은 별도로 하고, 북한의 도발이 실제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추구하는 ‘남반부 평정’ 사업이 ‘불가능한 장기적 희망’에 불과하며, 정책 전환, 대적 교양, 경제재건 등 내부적으로 취할 ‘수세적 조치’들도 산적해 있고, 당대회(2026.1)를 앞두고 성과 내기 차원의 사업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마. 전략적 고려사항 및 대책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과 핵전쟁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의도를 우리 사회에 정확히 알려 북한의 고도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은 극도의 긴장 조성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쟁이나, 평화나’ 프레임을 조성해 남남갈등, 한·미 이간을 도모하고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정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박하고 있다. 따라서 도발 수위와 강도는 높을 것이나, 자멸을 의미하는 전쟁에 배팅하지는 못할 것이며, 우리가 일치단결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면 북한의 기도는 좌절될 것이라는 요지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국민 홍보 주안점’ 예시

- 김정은의 적대국가론과 대남정책전환론은 핵개발 장기화에 따른 내부불만을 남한의 ‘흡수통일’ 추구 탓으로 돌리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심리전임.
- ‘민족’, ‘화해’, ‘통일’ 개념 폐기 주장은 남북이 두 개 국가로 따로따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대남 핵 사용 및 무력 정벌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임.

- 따라서 우리도 ‘평화·공존형 두 개 국가’를 지향하자는 주장은 남북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한 김정은의 반민족적·반역사적 처사를 오해하는 것임.
- 앞으로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로 국론분열을 유도할 것이나, 우리가 일치단결해 단호하게 대응하면 ‘전쟁이나, 평화나’ 프레임은 작동하지 못할 것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이 대다수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북한의 말 폭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나,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강압을 위한 북한의 도발이 장기화될 것이므로 차제에 우리도 군대는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대비태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방위 훈련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춰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 착안 사항

- 올해 8월 을지자유의방패훈련에서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 시키기로 한 것과 발을 맞춰 민·관의 핵전쟁 대피 훈련을 강화
- 주변 국가의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가 지나친 전쟁 불감증에 빠져있다는 점, 대피 훈련이 불필요한 위기 조성 목적이 아니라 하는 점을 적극 설득
- 북한의 전술핵 도발 가능성, 우리 군의 대응능력과 한계, 그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지역별 대피장소 지정, 유사시 준비물 등 교육과 반복훈련
- 우선 아파트마다 지하 주차장에 세대별 대비장소를 지정해두고 유사시에 대비해 사전 준비할 물품을 계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는, 지난해 워싱턴 선언 이후 결성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체제를 강화하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한·미·일 협력체제를 통해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훈련 등 공동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올 8월부터 시행하는 ‘핵작전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전계획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개선·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아인언돔의 방어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정보역량과 MD 체제 보강이 요구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볼 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을지자유의 방패’(UFS) 훈련부터 사이버 공격과 가짜 뉴스 유포 등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회색지대 도발’ 상황도 시나리오에 반영해 연습하기 시작했고, 올 2월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개정했다고 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공작에 대비한 공세적 방어 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민관군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

전쟁할 결심과 함께 대화할 결심도 필요하다는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진리이며, 북한이 상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간헐적이거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음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국가 위기관리의 중점을 응징적 억제에만 두면 도발 예방 효과는 높일 수 있으나, 실제 도발로 이어지면 확산될 가능성의 크고 초반부터 통제가 어려워진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끊임없이 ‘외교’를 거론하고 있다.

북한이 문제 삼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국한해 좀 더 보탠다면 ‘좁

더 넓고, 길게 보는 대북정책의 일관된 구사'를 제언한다. 우리의 정책 대상은 북한의 지도자가 전부가 아니다. 권력 엘리트, 주민을 포함해 3주체를 고루 상대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배적 개념으로 간주하지 말고, 남북관계를 긴 안목에서 보고 통일을 포괄하는 평화 혹은 안보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어떤 정책이든 성과를 거두려면 일관성이 중요하다. 북한 지도부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확고히 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관리하며, 끊임없이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견지해야 한다.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의 확대재생산은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다. 국내에서 일부 거론되는 '평화공존형 두 개 국가론'은 북한이 공존이 아닌 대남 '점령·수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간과했고, 우리 헌법 질서와 대북정책에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며, 북한 체제의 실패는 역사적 필연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우리도 북한 체제 진화(Regime Evolution)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대북·통일정책 정립 방안으로 공식적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자유' 개념을 추가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 자극을 우려해 비공개적으로 추진해온 급변대비계획도 이제는 공론화하여 민간차원에서의 연구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multiple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from the top left to the bottom right. Two large, grey, circular shapes are integrated into the design: one on the left side, partially cut off by the edge, and another smaller one on the bottom right. Both circles have a grid-like pattern of small dots on their right-hand side.

IV. 한국의 전략적 대응

정성윤 (통일연구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1. 북한의 핵 무력 정책과 대남전략 변화

정성윤 (통일연구원)

가. 북한의 핵 무력 정책변화와 대남전략 변화

(1) 대남전략 전환의 외교·안보적 배경

2024 북한의 파격적 행보는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의 공식 언급과 북한의 발표에는 핵 무력에 대한 자신감과 정세를 돌파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2023년 12월 말 개최한 전원회의에서는 강력한 대미 비난과 대미 정책의 기초가 소상히 담겨 있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와 김정은 개인의 연이은 발언에는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세적 대남전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 이후 북한 스스로가 밝힌 전략적 행보는 다분히 남한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핵 무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행보를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까? 본 장에서는 아래 <표 IV-1>의 내용과 같이 5가지 질문을 통해 북한의 언술과 행태를 구명하고자 한다.

<표 IV-1> 주요 연구 질문

1. 북한의 행보는 대전략(grand strategy)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가?
2. 북한이 대전략을 전환한 외교안보적 동기와 환경은 무엇인가?
3. 북한의 능력·지위·구조(정세)에 대한 전략적 평가가 대남전략·전술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가?
4. 북한은 어떠한 정세에서 어떠한 전략·전술을 선호할 것인가?
5. 북한의 전략·전술 선호와 핵 무력 활용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북한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전략적 변화인지 아니면 전술적 의도에 서 기획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상존한다. 북한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북한 스스로가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북한의 최근 행보를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국한해 본다면 북한이 최근 전략의 큰 변화를 모색 중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큰 틀에서 국가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이다. 첫째, 목표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이다. 전략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이는 당연하다. 둘째, 능력의 변화도 전략 변화의 주요 요인이다. 경제력과 군사력과 같은 중요한 국력 요소 변화는 전략 구상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 환경의 변화이다.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정세나 체제적 속성은 국가의 전략 구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기존 전략의 효과와 평가 결과에 따른 새로운 전략이 채택되는 경우도 당연히 전략 전환의 흔한 사례임은 분명하다.

국제정치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따르면, 북한이 전략 변화를 추진해야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은 상당히 충족되어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북한의 최근 행보를 대남 목표의 근본적 변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의 역대 대남전략의 일관된 목표가 남한을 적화 통일한다는 것이라 평가하고 가정할 때 더욱 그러하다. 김정은이 핵 무력을 동원해 남한 영토를 완전히 평정하고 수복하겠다고 공식 선포한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목표를 더욱 분명하게 제시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의지가 전술적 차원에서 가볍게 던져진 것도 아니다. 이미 북한은 2022년 ‘핵 선제공격 법제화’ 발표에서도 영토 완전(完整)의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이다.²¹⁵⁾

비록 북한의 목표가 전환되지 않았지만 상기 제시한 전략 전환의

215) 북한은 2022년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 할 당시 “핵무력은 국가주권,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라고 천명했다.

충분조건 중 3가지 모두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 채택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우선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능력이 급변했다. 핵 능력이 고도화되었으나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는 피폐화되고 있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전략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의 지속·新냉전적 질서 부각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북한이 채택한 전략의 한계와 실패이다.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패한 북한은 기존의 통일전략전술로 남한을 제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물론 모든 국가가 능력과 환경이 변했다고 국가 전략을 전환하지는 않는다. 특히 외교·안보 차원의 전략 변화는 주변국의 대응을 유도해 지역 질서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도전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현상변경 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전통적으로 위 3가지 요소에 따른 전략 변화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 체제 변화, 즉 역내 강대국 질서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인 전략적 변화를 모색해 왔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탈냉전의 시기까지 아래 <표 IV-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 및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총 3번의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단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심화되었던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적대국과 가장 필요한 동맹국 간 세력경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북한 스스로가 이 전장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IV-2> 주요 연구 질문 국제정치의 변화와 북한의 전략 전환

	국제질서의 변화	북한의 전략적 선택
1차	냉전 - 양국체제	전쟁
2차	중소 갈등기 - 데탕트	등거리 외교
3차	탈냉전 - 단극체제	핵 개발
4차(?)	新냉전질서 - 다극체제	핵 국가로서 한반도 2국가 체제 구축

(저자 작성)

북한은 미·중 전략 경쟁에서 단연히 패권국인 중국의 우세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미·중 양국의 전략 경쟁이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또 미국의 상대적 국력 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오히려 강대국 질서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지도부는 아직 핵 능력의 고도화와 실전 배치를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3년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단기간 강화되는 것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북한은 불리한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와 같이 다시 한번 큰 전략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직면했다. 북한의 선택지는 불리한 정세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세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남한과 미국과의 전격적 타협으로 가능한데 북한은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은 핵 능력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한 후 역내 세력균형을 회복하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과감한 현상타파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에는 두 동맹 강대국과의 적극적 연합과 핵 무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즉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과 능력 요소를 동시에 확보해 향후 적극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구조 조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북한은 주변 강대국 정치의 변화와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과감

한 전략 노선 전환의 계기로 활용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최근 변화는 북한 전략 노선 변화 4.0 시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외교·안보 정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과연 대남전략·전술의 변화를 추동한 직접적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아마도 대남전략·전술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아닐지는 몰라도 중대한 배경이 있음은 분명하다.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전환의 핵심 키워드는 2가지이다.

첫째, 탈민족적 대남 접근이다. 북한은 남한을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국가로 취급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적대적 관계인 남한과 전시 중이라며 남북관계를 평가했다.²¹⁶⁾ 언젠가는 반드시 함께해야만 하는 숙명적 존재로서 남한을 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둘째, 북한이 핵무기를 동원한 묵시적 선전포고(tacit ultimatum)를 했다. 비록 조건을 달았지만, 기회가 되면 핵 무력을 활용해 남한을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즉 북한은 적대적 국가인 남한과 현재 전시 중이기에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민족이 아니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큰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은 탈민족적·반민족적 국가주의를 동원하고 핵무기로 무력 통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북한 정권은 민족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상투적 비난처럼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작동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216) 김정은 정권은 최근 수년간 김일성·김정일 집권 시기와 확연히 차별적인 모습으로 유독 ‘국가성’을 강조해 왔다. 그 출발점은 2015년 8월 15일 자정부터 표준시(평양시간)를 기존 UTC + 9에서 변경한 일이다. 당시 북한의 의도는 “대한민국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즉 남한이 일본과 같은 시간대를 사용한다는 점을 부각해 대한민국을 일종의 친일파 국가로 폄하하기 위한 전술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는 체제경쟁과 국력 대결에서의 패배 의식이 내재 되어 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활용한 고강도 대남 강압이 전략적으로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상과제인 핵 무력 확보가 요원하고 설사 목표한 바대로 능력을 증강하더라도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를 당분간 무력화시키기 힘들다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단은 핵 강압 수위를 최대한 높여 한반도를 상시 분쟁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이롭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한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강조하고 연이은 도발을 집중 시현하는 것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즉 전쟁 위기론을 북한 내부적으로 확대 재생산해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북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식 및 강화시켜, 소위 '반동문화사상'의 급격한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핵 무력 통일을 내세워 남한 내 전쟁 위기론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 여론을 확산함과 동시에 실제 연이은 도발 등을 통해 국내 정치권의 당파적 쟁점화도 유도할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한의 총선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슈를 부각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최근 북한의 이례적인 공세적 행태는 북한 지도부가 역내 안보환경과 강대국 국제정치의 역동성을 적극 반영한 전략적 전환이라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의 전략 전환은 비단 외교·안보적 목적과 이익에만 제한되지 않고 대내·대남 전략·전술적 차원의 효과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본 절의 주장이다. 북한이 이러한 전략·전술을 채택한 것은 불리한 현재 정세와 한반도 안보 구조를 적극적으로 타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핵 무력 증강에 대한 야욕과 핵 무력의 전략적 효과에 대한 맹신이 자리 잡고 있다.

(2) 핵 무력 확장과 정책변화의 시사점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전환에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핵 무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구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북한 지도부의 절실함과 야욕이 담겨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와 속내는 국제정치의 일반적 관점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들이 우리의 안보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은 핵 무력을 어떠한 전략적·정책적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능력(무력)과 핵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1980년대 중후반부터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핵 능력의 구성 요소는 핵 기폭 능력을 포함한 탄두 제작 능력과 미사일 운반체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 제조 능력을 공개한 것은 90년대 중후반 장거리 발사체 실험과 2006년 1차 핵 실험을 단행한 시기로 가늠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2016년까지 6차례 핵 실험을 통해 핵 분열과 융합 기술을 통한 핵 탄두 제조 능력을 순차적으로 확보했고, 지난 30년간 집중적인 운반체계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 개발의 종착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핵 능력을 길게는 30~40년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핵 정책 혹은 doktrin은 2022년 소위 핵 무력 정책법을 통해 공개했다는 점이다. 통상 국가들이 중요한 안보전략을 추진할 때 일반적 경향은 목표 설정 → 전략·정책 설계 → 능력 확보의 경로를 채택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통상적 경로와는 달리 핵전략과 핵 정책(교리)이 미비·미성숙한 상황에서 핵 능력 고도화에 질주했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목표의 전환

가능성이다. 북한은 핵 개발 초기 미국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을 것이다. 물론 당시에도 북한은 유사시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안보 위협은 과거나 지금이나 남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예전과 달리 공개적으로 전술핵 능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어떠한 이유이든 남한에 대한 핵무기 투사를 목표와 전략에 공식 반영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의 핵전략 전환 가능성이다. 북한의 제한적인 핵물질 생산능력 등 핵무기 제조 환경과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사례를 고려할 때,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핵전략이 ‘최소억제전략(minimum deterrence strategy)’에 기반하고 있다는 세간의 일반적 평가가 있었다. 최소억제전략은 중국이 선택한 핵전략이다. 이는 핵무기의 수량을 수백 개 수준으로 제한하고 2차 타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의 확보를 중요한 요소로 본다. 아울러 ‘선제 핵공격전략’을 채택하지 않는 비교적 신중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표 IV-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토 안정’이라는 표현과 함께 상황에 따라 핵 선제공격을 강행할 수 있음을 법제화했다. 이는 북한이 핵전략(교리)을 기존의 억제 중심에서 실제 전장에서 사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2023년 12월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핵무력에 의한 남한 영토 점령 의지는 이러한 전략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V-3> 북한의 2022년 핵무력정책법 주요 내용²¹⁷⁾

<p>목표</p>	<p>■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핵보유국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모든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정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지향한다. 핵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보유국 간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둔다.”</p>
<p>임무</p>	<p>■ 전쟁 억제, 전쟁의 결정적 승리(작전) “핵무력은 국가주권,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핵무력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다.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p>
<p>사용 원칙 및 조건</p>	<p>■ 기본원칙은 최후수단, 조건부이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사용 가능, 비핵국가에도 사용 가능(선제사용 가능) “국가와 인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비핵국가가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①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림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한 경우 ⑤ 국가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로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p>
<p>지휘 통제</p>	<p>■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의 보좌 유고시 제한적 위임 핵타격 자동시행 가능성 ①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② 국무위원장은 모든 핵무기 관련 결정권을 가진다.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 관련 결정과 집행의 전 과정에서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핵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는 경우, 사전 결정된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 등 적대세력을 괴멸하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p>
<p>준비 태세</p>	<p>■ 동원태세 유지 “핵무력은 핵무기 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p>

217) 정성운·김민성,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24), pp. 68~69.

(3) 능력과 정책의 변화가 대남노선에 미친 영향

북한이 장기간 추진했던 핵 능력의 고도화가 마무리 단계에 직면했고, 북한이 이러한 능력과 그 효능을 맹신하며 공세적 핵전략으로 전환했다면 이러한 행태가 대남전략과 전술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현시되고 또 남북관계와 우리의 안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북한은 전통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한 대남 강압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아울러 2019년 미국과의 타협 실패 이후 그 원인을 우리 정부에게 돌리며 상당히 공세적인 대남 정책을 지속해 왔다. 북한은 급기야 전술핵 등을 개발하며 우리를 직접 겨냥한 핵 강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주목하면 향후 우리를 훨씬 위협스럽고 거친 방식으로 강압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은 핵 무력을 사용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부하고 우리의 통일 의지를 좌절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상대에게 위협을 가해 상대의 의지, 결심, 정책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소위 강압전략(coercive strategy)의 전형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 정부를 강압하는 주요 수단으로 핵무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9차 전원회의에서 ‘영토 완정’의 지 피력의 주요 수단으로 핵 무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남한에 대한 상당히 높은 수위의 핵 강압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판정 가능하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의 본질은 ‘핵 강압전략’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강압전략의 수준을 어느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아래 <표 IV-4>를 통해 단계별 강압전략(혹은 강압외교전략)에 따라 북한의 대남 핵 강압 전략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IV-4> 강압전략의 강도별 분류

강압의 단계	요구 조건	시한	처벌내용
선전포고 (the ultimatum)	명확	명확	명확
묵시적 선전포고 (tacit ultimatum)	명확	불명확 그러나 위급성 암시	불명확 그러나 심각한 처벌 암시
점진적 강압 증가 (gradual turning of the screw)	명확	불명확	점진적 증가
강압 후 관망 (try and see)	명확	불명확	불명확

<저자 작성>

북한 정권이 2022년 채택한 『핵무력정책법』과 금번 9차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의 사용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요구 조건과 처벌 내용은 추정이 가능하거나 명확한 데 반해, 우리의 정책 전환에 대한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았다.²¹⁸⁾ 북한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흡수통일’ 전략 포기와 한미동맹을 통한 무력 압박 포기(확장억제강화 반대)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처벌내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해 영토적 점령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이 일종의 조건을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볼 때, 현재 북한이 대남 핵 선전포고(ultimatum)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남 핵 강압은 2024년 2월 현재 ‘점진적 핵 강압’에서 ‘묵시적 선전포고’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8) 북한은 대미 강압 과정에서 실제 시한을 설정한 적이 있다. 북한은 2019년 미국과의 타협이 실패로 끝난 직후 미국의 행동을 강제하려 했다. 2019년 12월 3일 이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의 담화에서였다. 당시 리태성 부상은 담화에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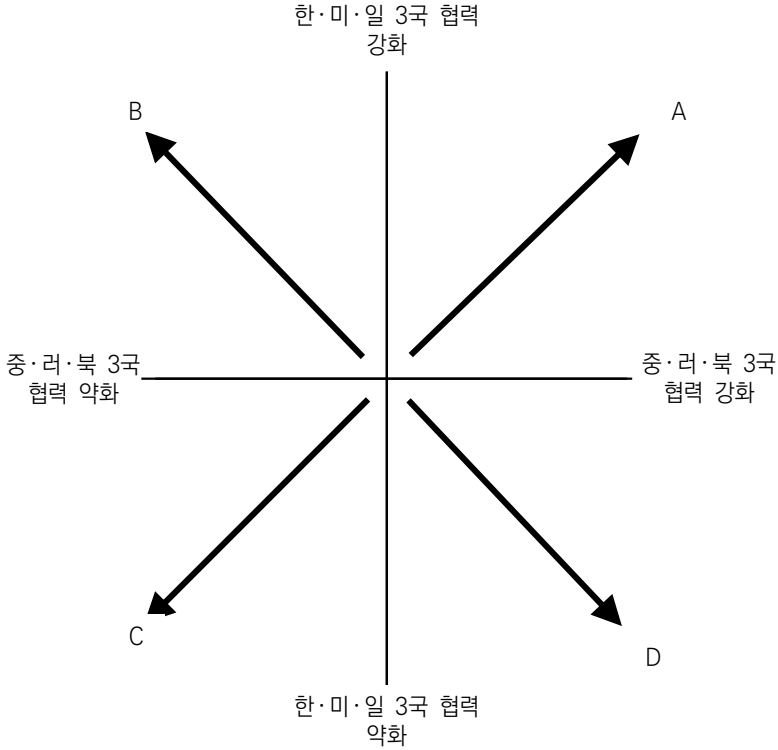
나. 북한의 핵 무력 활용 시나리오와 대응 방향

(1)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선호

북한은 핵 중심의 외교·안보전략 체계하에서 대남 핵 강압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대남 관계를 적대적 국가 대 국가 관계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대남 핵 강압전략 또한 북한의 외교·안보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구상되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핵 무력 증강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유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당연히 핵 무력을 조기에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외교·안보 구조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의 대남 핵 강압 투사의 행태 또한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현재의 전략 전환을 과거처럼 외교·안보 정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북한은 아래 <그림 IV-1>의 4가지 전략 환경에 따라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이와 연계해 전략 선호를 설정할 것이 유력하다. 그리고 당연히 목표 달성과 전략 선호를 고려해 대남 핵 강압의 투사 행태를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체제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 및 약화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한 다극 체제이다. 그 핵심은 한·미·일 대 중·러·북 세력 경쟁으로 특징되는 동북아 신냉전 체제이다.

<그림 IV-1> 향후 한반도 정세 전개 방향



<저자 작성>

A 국면은 한·미·일과 중·러·북 각각의 협력의 공고화가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이며, 어느 한쪽의 협력이 강화되면 나머지 3국의 협력도 강화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이다. 전형적인 안보딜레마가 작동되는 상황이다. B 국면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도발과 핵 고도화를 지속함에 따라 한·미·일 3국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나, 중·러·북 연합의 협력 수준은 2023년 하반기 임의의 시점보다 조금씩 낮아지는 상황이다. C 국면은 한·미·일 3국 협력과 중·러·북 3국 협력 모두 2023년 초에 비해 약화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현실화될 수 있다. D 국면은 중·러·북 3국 협력은 점차 강화되지만, 한·미·일 3국 협력은 오히려 점점 약화 되는 상황이며, 북한에게는 최선이지만 한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2023년 이후 한반도 정세는 A 화살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최근 전략 전환은 A 화살표 방향의 정세와 구조를 능동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북한은 향후 정세가 B 방향으로 전개되면 자신에게 불리하고, D 방향으로 전환되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당연히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의 현재 머릿속에는 향후 전략·전술의 방향을 첫째, D 방향으로 정세 전환, 둘째, A 방향에서 생존 버티기, 셋째, B 방향 전환의 적극 차단으로 설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지도부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차별적인 전략환경과 자신들의 전략 선호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을까? 북한의 외교·안보전략의 핵심이 ‘핵’임은 분명하므로 북한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가정하고 있을 선호의 순서는 아래 <표 IV-5>과 같을 것이다.

<표 IV-5> 북한의 전략 선호와 북한의 전략 환경 유불리

선호	내용	전략환경의 상대적 평가 ²¹⁹⁾	
		유리	불리
최선	공식적 핵보유국 지위 확보	D	B
차선	비공식적 핵보유국 인정	C, D	A, B
차악	타협에 의한 완전한 비핵화	A, C, D	A, B
최악	(무력에 의한) 강제적 비핵화	C, D	A, B

<저자 작성>

219) 알파벳은 <그림 IV-1>의 화살표 방향을 지칭한 것을 의미한다.

위 <표 IV-5>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최악은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다. 북한의 차악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북핵 대응 목표이다. 둘째, 북한이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든 그나마 가장 우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환경은 D 화살표 방향이라는 점이고, 반대로 우리는 어떠한 시나리오이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가 유리하다. 셋째,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차악인 ‘타협에 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A 국면이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타협과정에서 핵무기 일부를 은닉할 수 있다는 기대와 동기가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북한의 핵 무력 활용 시나리오와 평가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외교·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투 코리아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 무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북한은 현재 자신들에게 유리한 외교안보체제와 질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자 절대적 사명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북한은 강력한 핵 강압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 강압전략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핵무기의 실제 사용을 거론하는 등 전형적인 강제(compellence)와 공갈(blackmail)을 구사한다. 그리고 향후 미국 대선을 전후해 강력한 대미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 또한 구사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향후 실제 대남전략·전술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과 행태로 핵 무력 활용을 모색하겠지만, 대별 하면 첫째, 핵 강압을 통한 대남 제압, 둘째, 핵 무력을 활용한 무력 통일, 셋째,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한 안보 자주성 확보 등의 방책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핵 강압을 통한 대남 제압

북한은 9차 전원회의와 김정은의 직접 언급들을 통해 대남 관계는 적대적이며 현재 남북관계는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휴전이나 정전체제라는 점이 아니고 굳이 전시상황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향후 한반도를 중동과 같은 분쟁지역화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에게 대한 무력 강압에 절대 신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은 핵 무력을 활용한 대남 강압에 주력할 것이다.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의 범위가 다양하고 크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은 대남 핵 강압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좌절시키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보수·진보 구별 없이 일관되게 흡수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는 핵 선제공격의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북한은 핵 강압을 통해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열망을 좌절시키고자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도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남한 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면 통일·대북 정책의 전환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기대하는 정책 방향은 남한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을 변경시켜, 미·북 간 군축 협상을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대남 핵 강압의 외부효과도 기대할 것이다. 그 대상은 북한 내부이다. 즉 대남 핵 강압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론을 확산하고 이를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강화에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내부적으로 한류 확산을 차단하고 전시동원국가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나) 핵 능력을 활용한 무력 통일

북한은 핵 무력을 비단 정치·외교적 강압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이 여차하면 핵무기

를 사용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강화(strengthening credibility) 방책이다. 하지만 억제를 위한 핵무기 운용의 경험이 일천한 북한이 핵무기를 억제만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 북한이 오로지 억제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핵무기가 필요 없을 수도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소량의 핵무기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두 차례 공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 수량을 늘이겠다고 선언했고, 대남용으로 활용될 것이 분명한 전술핵무기 개발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핵 무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토를 정복하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위와 같은 이론과 사례를 합리적으로 검토하면 북한이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실제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우리의 입장에서든 당연히 그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핵 무력을 실제 군사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실제 현실화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핵 무력 사용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첫째, 핵 무력 시위용이다. 이는 실제 전쟁이 아니지만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남한에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군사적 조치이다. 북한은 핵 고도화 능력을 시험하고 시연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도발을 강행하거나 열병식 등을 통해 핵무기의 외양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진화된 핵 강압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가령 한미 연합 훈련에 맞추어 핵무기 사용 준비 태세를 명령하고 핵탄두가 탑재된 단거리 미사일 수기의 발사 준비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아울러 단거리 미사일, 순항 미사일, SLBM(혹은 핵어뢰)등 최근 대남용으로 성능 개선 중인 무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험하는 진화된 도발을 통해 대남 핵 무력을 높은 수준에서 과시하려 할 수도 있다.²²⁰⁾ 마지막으로 핵 배낭

등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전격 공개하며 대통령실, 원전 시설, 공항과 항만 등 남한의 특정 목표를 겨냥한 연습 장면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일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다. 북한이 확전을 무릅쓰고 선제적으로 전술핵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원전시설에 대한 테러 행태가 유력하다. 하지만 남한 정부와 미국이 이를 북한의 전술핵 공격이라고 단정하나 북한은 남한 원전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주장 하면서 자신에 대한 즉각적인 핵 보복을 회피하고자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확전을 최대한 회피하려 하나,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확전도 감내하는 결기에서 핵 무력 일부의 실제 사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북한은 이러한 핵 무력 활용을 통해 자신들의 핵 능력이 비단 억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강력한 전략적 시그널을 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은 미국의 국내정치적 변화, 한미 관계의 변화에 따른 전술핵의 선제 타격 활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가령 남한에 미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되는 경우와 남한이 독자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관련 시설에 대한 선제적 타격을 동시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²²¹⁾ 하지만 설사 북한이 자신들이 목표로 설정한 핵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핵무기 일부라도 테러 등 국지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자신들의 선제적 핵사용이 비록 제한적 규모로 행사 되더라도 미국의 핵보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북한이 이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이 남북한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남한 영토를

220) 북한은 이러한 과감한 도발을 통해 미사일 방어력(MD)의 본질적 한계를 최대한 우리 국민에게 각인시키고자 할 수 있다.

221) 이 두 가지 대남 전술핵 선제 타격 모두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핵무기를 독점하겠다는 전략적 목표가 분명할 때 실제 사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점령하기 위해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이다. 확전의 과정에서 전면전을 결심하는 경우와 평시에 전격 핵 선제 기습공격을 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재래식 능력을 우선 동원해 남한과 국지전을 수행하면서 핵 선제 공격을 동원한 전면전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확전의 과정 없이 핵전쟁 수행을 결심하는 경우이다. 어느 상황이든 북한 지도부는 남북한 간 전면전이 불가피하거나 꼭 필요하다는 최종 판단 하에, 이 경우 미국보다 핵무기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롭다고 결심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두 시나리오 모두 가급적 북한은 미국의 핵 보복을 차단하거나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을 동시에 염두에 둘 것이다. 핵 보복을 100% 확신하고 핵 선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다)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한 안보 자주성 확보

북한이 대내·외 정치적 목적에 주목하던 실제 남한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유력하게 검토하던, 북한은 실제 두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핵 무력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이 중에서 북한은 어떠한 이유이든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되는 상황을 대비할 것이다. 이 경우 앞서 언급했던 북한의 핵 선제사용 가능성은 판단하기에 따라 높아질 수도 혹은 억제될 수도 있다. 북한이 남한에 배치된 핵 무기를 우선 제거할 동기도 물론 생길 수 있다. 물론 이는 전면전을 결심할 때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남한의 핵무기 배치로 인해, 북한이 의도치 않은 확전(unintended escalation)을 오히려 회피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즉 북한이 핵 무기를 실전 사용하는데 좀 더 신중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은 기존의 핵 무력의 전략적 활용을 핵

균형의 효용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북한은 남한 정부가 핵무기를 활용해 무력 흡수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추가해 대남전략을 구상할 것이다. 즉 미국의 가공할 핵 보복과 더불어 남한 정부의 독단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합리적 행위자라면 남한과의 의도치 않은 핵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대남 핵 강압에 신중할 것이지만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유력한 상황은 이 경우 북한이 남북한 공포의 균형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공포의 균형이 가져다 줄 전략적 손익에 대해 상당히 고심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공포의 균형으로 자신들의 핵 보유 상황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남한이 북한 비핵화 정책을 후 순위로 미루고 일단 핵 균형 체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한과의 핵 군축을 통해 핵 능력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헛된 기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고수하면서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군비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할 것이다. 자신의 능력이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3) 우리의 대응방향

(가) 대응체계

북한이 대남 핵 강압 수위를 과거와 비견할 수 없는 수위로 높일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이 국제·지역 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인 외교·안보 전략 전환을 선택했고, 이를 고려해 두 코리아로 상징되는 과감한 대남전략·전술의 변화를 추진한다면, 분명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행태를 보일 것이 유력하다. 본 장에서 주장하듯이 북한이 이러한

행태를 핵 강압전략 메커니즘에 따라 추진하고, 묵시적 선전포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양한 공세적 방식으로 핵 무력을 실제 활용한다면 단기적 차원에서 우리가 목도할 북한의 대남 행태는 상당히 낮설고 위태로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안보적 차원의 대응체계는 ‘역강압 전략(counter coercive strategy)’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본적으로 강압전략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는 공세적 대응 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 수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관여책 투사를 우선시하는 ‘유화 전략(appeasement strategy)’과는 정반대의 전략이다. 아울러 대응 메커니즘의 구상시 북한이 불리한 정세를 뒤집기 위해 무리한 방책을 수세적 입장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지도부의 회심의 한 수가 알고 보니 패착이라는 점을 즉각 각인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누적되어 결국 북한 엘리트가 자신들의 미래를 다른 방식으로 고민할 수 밖에 없도록 해야만 한다. 이는 ‘적극적 거부’ 능력과 ‘대량 보복’ 능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체계는 “북한의 의지와 행동, 정책을 힘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전환 시키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강력한 힘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북한이 핵 무력을 동원해 성취하고자 하는 기대 효과를 즉각적으로 거부함과 동시에, 북한이 혹시나 핵 무력을 선제적으로 동원할 경우 100% 핵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확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앞서 <표 IV-5>의 북한의 차악과 최악의 선호를 북한이 고려할 수 밖에 없도록 북한 지도부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압 메커니즘 구축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응체계 방향의 기초에 따라 외교·안보적 차원의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외교적 차원

외교적 차원에서 대북 '역 강압전략'의 핵심 방향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통한 중·러·북 3국 연대 약화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이다. 앞서 <그림 IV-1>에서 화살표 A의 방향을 B로 전환하는 것이 외교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4>에서의 주장에 따르면 B 화살표 방향으로의 정세 전환은 북한의 모든 전략 선호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정세를 형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최선 전략 전환의 목표인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한 한반도 안보 구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 환경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2가지 전략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러·북 3국 연대의 공고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상대의 전력 연합을 약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썬더전략(wedge strategy)에 해당한다. 러·북 군사협력이 당분간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중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대한 관여가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추동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 방식을 채택이 현실 친화적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도해 중국과 러시아의 정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중·러·북 3국 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책은 지역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를 적극 자극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를 차단하거나 약화시키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두 국가가 북한과의 협력을 높일수록 미국이 영향력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반미 연대라는 공통의 가치보다 중·러·북가 현실적인 전략적 이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해야만 한

다. 이를 위해 당연히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할 원칙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우리와 세심하게 조율된 방향과 방식으로 썬기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는 방식의 중·러·북 연대의 약화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러·북 3국 연대의 약화와 동시에 우리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최우선 외교 전략으로 확립하고 강력히 추진해야만 한다.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되면 우선 <그림 IV-1>에서와 같이 북한에게 유리한 전략적 환경인 D 방향으로 정세 형성을 차단된다. 아울러 대북 정보자산의 효율적 운영 등 북한의 핵 무력 사용을 적극 거부할 수 있는 연합 능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무엇보다 한·미·일 3국의 연합 국력이 중·러·북 3국 연대를 월등히 상회하기 때문에 동북아 세력균형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는데 유리하고, 상대의 현상 타파의 동기를 미연에 좌절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부가적으로 이들 3국이 보유한 외교적 자산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선전전과 공세를 차단하는데도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외교적으로 북한을 봉쇄하는데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One Korea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근본적인 한반도 전략의 대전환을 견인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이 북한이 추진하는 Two Koreas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중국이 내심 그러한 북한을 비호하는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이의 외교적 국제법적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Two Koreas 정책의 핵심은 핵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며, 이는 반평화, 반인륜적 정책으로 오히려 중국의 국익을 해치

고 동북아 전체를 핵전쟁의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을 강하고 일관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30만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중국 국적 상주인력이 가장 많다. 핵무기를 동원해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인류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인륜적 선전포고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헌법 규정에 따라 북한은 한국의 영토이며 한반도의 미래는 한국과 남북한 주민이 평화롭게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일관된 게 밝힌 원칙이 ‘자주’와 ‘평화적 방법’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 안보적 차원

북한의 전략 전환의 핵심은 핵무기의 효용이다. 핵은 북한 정권의 목표이자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사실상 가장 높은 수위의 핵 강압인 ‘묵시적 선전포고’를 했다. 따라서 우리의 최우선 안보 목표는 당연히 ‘북핵 억제력의 강화’여야 한다. 독자적 핵무장이 당분간 정책 목표나 대안이 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에서, 우리의 당면 정책 목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력의 획기적 강화’로 설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북한이 당분간 대남 핵 강압의 수준을 과거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일 것이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전쟁 위기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한반도를 무력 분쟁지대로 조성하고자 할 것이 농후하기 때문에 안보적 대응 방향은 단기적·중장기적 차원으로 구분해 현실 친화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안보적 차원의 대응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워싱턴 선언의 과감하고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2023년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미동맹에는 다양한 도전 요소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안보적 차원에서 가장 중대한 우려는 바로 2023년 한미가 약속한 워싱턴 선언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미국이 핵협의그룹(NCG)의 제도화를 거부하거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동맹 간 주요 디커플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 미 대선 이후에 돌이키기 힘든 수준의 제도화 성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 회의를 미 대선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24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에 맞추어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상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기적 차원의 또 다른 안보적 대응은 바로 북한이 기대하는 대남전술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북한은 4월의 한국 총선, 11월의 미국 총선을 동시에 겨냥해 한반도 전쟁 위기 담론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확산하려 할 것이다. 김정은의 핵 무력에 의한 영토 완정도 이러한 북한의 안보 전술 혹은 심리전의 일환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의 내부 정치적 목적과 사정에 문외한인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쟁 위기론에 편승하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고 있고, 우리 조야의 일부도 이를 당파적 시각으로 접근해 우리의 대북 정책 전환을 주장한다. 이러한 반응은 바로 북한의 핵 강압전략이 노리는 효과이다. 실제 북한은 이러한 일부 여론의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인 전술적 도발을 강화하면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려 할 것이 유력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북한 및 국제사회에 정치한 논리로 설명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안보 차원의 대응도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자발적 핵 포기가 단기간 쉽지 않을 것이므로 중장기적 차원의 북한 비핵화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담대한 구상을 현실 친화적으로 더욱 진화시켜야 할 뿐 아니라, 북핵 억제와 한반도 통일,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하는 거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핵 억제 → 북한 변화 → 북한 비핵화 → 평화 체제 → 평화통일의 로드맵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핵 억제를 통해 북한

이 핵무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인다면, 과도하게 핵에 의존하는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 체제의 변화 없이는 북한 비핵화를 기대하기 힘들고, 북한의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통일은 허상에 불과하다.

두 번째 증장기적인 대응 방향은 바로 독자적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 구상과 추진 방향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존의 3축 체제와 확장억제가 미래에도 우리 안보 전략의 중추가 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 핵 강압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북한이 대내외·대남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전술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친화적 방향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3축 체제 중 MD의 획기적 강화와 독자적 대량보복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 국방부는 2021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착수를 발표한 이후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국방부는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한국형 3축 체제와 비대칭 전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 무력을 실제 투사한다면 기습 선제공격이 유력하고, 우리가 이에 충분한 방어를 해야지만 대량보복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상대적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선제공격을 완벽히 요격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선제공격의 효과가 우리의 MD로 인해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곧이어 우리의 대량보복이 진행될 것이라 확신하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억제력의 강화로 연계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남 전술핵무기 고도화를 겨냥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성과를 자주 북한 지도부에게 적극적으로 현시한다면, 그 자체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를 좌절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2. 북한 민주화 및 평화통일을 위한 전략적 대응

조한범(통일연구원)

가. 대응 기초

(1) 북한의 실·패 부각 및 공세적 대북·통일정책 전환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 2국가론(Two Koreas)과 명백한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 인식을 드러냈다. 6·25전쟁기와 냉전기를 포함해 분단사 전체를 통틀어 통일, 민족, 그리고 평화를 공개적으로 부정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북 양 체제에서 통일, 민족, 그리고 평화는 체제와 정권 존립의 근거이며, 포기할 수 없는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한 것은 체제경쟁의 패배를 공식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1990년 전후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은 붕괴했으며, 냉전은 종식을 고했다. 북한은 노동당과 김씨 일가 독재체제를 유지했지만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기’에 수십만명 이상이 아사하는 위기를 겪었다. 집권 후 핵개발에 주력한 김 위원장은 2018년 한반도 정상외교에 나섰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한계에 직면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를 강조²²²⁾하며, 남북관계의 문제를 교정하는데 주력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해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제경쟁의 패배는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 즉 고려연방제와 통일전

222)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한다.”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 2023.7.22.

선전략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시기 도출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통일보다 남북 양 체제의 공존에 방점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미 수세적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직후 북한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전격 철거²²³⁾했으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주요 매체에서는 김 위원장의 한반도 2국가론과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선언과 관련된 후속보도가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관련된 대규모 군중집회나 선전·선동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선언은 김 위원장의 독단적 선택일 뿐이며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들이 동의한 것이 아니다. 김 위원장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혁명역사, 교과서, 기념물 등 북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불가피하다.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지시는 많은 점에서 풀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백두혈통’, ‘혁명전통 계승’, ‘혁명위업 달성’ 등은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주요 개념이며, 김씨 일가 독재체제의 정당성과 명분의 핵심으로 활용되어 왔다. 김일성 주석이 항일무장 투쟁을 했다고 선전하는 백두산을 상징하는 백두혈통은 북한에서 ‘성역’으로 취급되며, ‘백두’의 궁극적 의미는 조국광복 즉 한반도 전역의 해방이다. ‘혁명전통 계승’은 김일성·김정일의 적화통일노선을 이어받는 것이며, ‘혁명위업 달성’은 당대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체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혁명’의 목표와 핵심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다. 한반도 전역의 해방과 적화통일의 명분은 한반도 1국가론이며 단일 한민족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북한이 신성시하는 ‘백두혈통’과 ‘혁명’개념에서 ‘통일’, ‘민족’, ‘평

223) “김정은 “꼴불건, 철거” 지시 일주일 만에 사라진 조국통일 기념탑,” 『NK NEWS』, 2024.1.23.

화'를 거세할 경우 남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독재와 왕조체제일 뿐이다. 북한에서 반통일과 반민족은 반혁명과 동일한 의미이며, 그동안 극형으로 다루어진 죄목이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김일성·김정일체제가 구축한 정권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정한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기 부정은 7차 당대회의 언급을 상기할 경우, 보다 명백해 진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의 조국통일노선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통일노선이라고 하시면서 이 노선은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밝혀 주시었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투쟁방침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시었다.”²²⁴⁾

김정은 위원장의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선언은 선대의 유훈을 전면 거부한 것이며, 철저한 자기부정에 해당한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약 4년 간 유훈통치를 통해 ‘고난의 행군기’의 난관을 돌파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두 선대의 유훈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정권의 기반을 스스로 훼손했다. 통상 사회주의체제의 정책전환은 치열한 노선투쟁의 결과로 탄생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정권과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선언을 독단적으로 단행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역사, 교과서, 각종 기념물들을 대대적으로 전면 수정·재편해야 한다. 북한 정권 스스로의 자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기 아사의 위기와 당면한 경제적

224) 학습제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혁명역사』 제5장 제1절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22), p. 13.

어려움과 고난 등 수많은 문제가 분단에서 비롯되었으며,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해야 한다고 교육받아왔다. 북한이 성지로 선전하는 대성산 혁명열사능과 신미리 애국열사능은 모두 한반도 적화통일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정책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선전·선동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다시 세뇌시켜야 한다. 기존 북한체제와 정권의 정당성과 명분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선언의 이행 과정에서 일반주민은 물론 엘리트들이 어떤 반발과 불만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한민족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민족, 반역사주의자임을 선언했다. 한민족의 역사는 5천년이며, 선사시대까지 감안할 경우 수만년에 이른다. 민족공동체는 장구한 역사와 경험,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강한 연대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시기의 정치적 선언으로 단절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한민족 개념은 한반도 전 구성원의 정체성의 핵심이자 자기 인식의 좌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민족의 지도자로 포장한 이유도 민족개념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제 김 위원장은 스스로 남북한은 물론 전세계 한민족의 공적이 되었다. 김 위원장의 반역사적, 반민족 인식에 대해 한민족 전체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통일을 포기함으로써 체제경쟁의 실패를 자인했다. 김 위원장은 1민족 1국가 2체에 기반을 둔 고려연방제를 포기하고 남북관계를 6·25 시대로 퇴행시킴으로써 우리의 염원은 물론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의 유훈까지 일거에 ‘꿀볼건’으로 전락시켰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절대적 힘’으로 완정·평정해 북한으로 편입시키겠다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말 한마디로 남북을 교전관계로 전환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 모두의 공적임을 자초했다. 김 위원장의 체제경쟁 패배 선언

과 반평화통일 인식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선언으로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와 정통성을 계승하는 한반도 유일의 적통으로서 위상이 확고해졌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민족사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독재정권, 반민족정권으로 전락했다. 김정은 정권은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격이 된 셈이다.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인식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물론 전세계 한민족과 연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나. 세부 추진 방안

(1) 대북전략

(가) 한반도 2국가론 공략

김정은 위원장이 제기한 2국가론은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으며, 목적은 오로지 독재체제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통일전선전략에서 대한민국은 통일대상이며, 미국은 이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주적'에 해당했다. 그러나 남북체제경쟁의 실패로 북한의 가장 큰 적은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군중신고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만든 주목적은 대한민국의 영향과 한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과 접촉면이 넓어질수록 북한 내 위기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북 협상 가능성을 확인했을 개연성도 있다. 김 위원장의 2국가론은 북한의 주적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2국가론의 치명적 위험은 분단체제의 영구화다. 한반도 분

단체제는 근 80년을 경과하고 있으며, 주변 국제정세는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냉전 해체로 동독의 후견자였던 소련이 몰락한 반면 북한의 동맹인 중국은 G2의 위상을 확보하며 국제질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분단체제의 환경이 상이하며, 그만큼 우리의 통일환경은 긍정적이지 않다. 한반도 2국가론이 고착될 경우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헌법적 차원의 권리는 상실되며 이로 인한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2국가체제에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경우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중국의 일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2국가체제가 고착되면 북한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상실된다. 현재 탈북민의 입국할 경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만 2국가체제에서는 난민 지위로 전략하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2국가론은 교전국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핵무기를 의미하는 북한의 '절대적 힘'이 일방적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며, 꼭 필요한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드리지 않으면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²²⁵⁾ 북한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가 방어적 차원임을 선언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남쪽 국경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규정했지만, 북방한계선(NLL)은 '불법무법'이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도발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²²⁶⁾ 대한민국은 NLL을 확고한 경계선으로써 절대

225) 『노동신문』, 2024.1.16., *op. cit.*

226) *Ibid.*

수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언급대로라면 이미 북한 영해를 깊숙이 침범한 셈이며, 전쟁도발을 한 형국이다. 북한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해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2국가론, 교전 중인 국가관계 선언의 위험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동독의 2국가론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를 입증했다. 동독은 1949년 헌법 제1조에서 독일을 ‘불가분의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해 하나의 독일 입장을 견지했으나 1968년 헌법을 개정해 ‘양 독일국가’라는 표현을 삽입해 2국가론을 지향했다. 동독은 1974년 개정 헌법을 통해 사실상 통일을 포기했다.²²⁷⁾ 그 이유는 서독의 국력신장과 체제경쟁에서 동독의 열세때문이었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장벽은 붕괴했으며, 1990년 동독은 서독체제를 받아들이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분단체제 2국가론의 역사적 교훈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2국가론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평화적 수단을 통한 1국가론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2국가론의 목적이 명분없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체제 유지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2국가론이 가지는 반민족, 반역사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공략하고, 남북한 구성원은 물론 전세계 한민족과 협력해 한반도 2국가론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식량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국관계로 전환해 전쟁준비를 상시화하는 것은 무모한 선택이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핵전쟁의 위협을 내재한 위험한 한반도 2국가론은 남북 모두에게 안보적 불안의 상시화와 군사적 대치의 고비용구조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227) 이규창, “북한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지속되어야 하는 평화통일 노력,”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24-06, 2024, pp. 1~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시점까지 남북한 간의 공존과 특수관계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잠정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문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은 1국가론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2국가론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 인식 공략

김정은 위원장은 ‘삼천리 금수강산’, ‘겨레’와 같은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5천 년 한민족역사와 민족적 정체성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김 위원장의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 인식이 확고하게 드러난 만큼 이를 공세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의 언급이 있기 전까지 근 80년 한반도 분단사에서 북한에서도 통일은 신성시되는 담론이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반통일 인식은 효과적인 공략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흡수통일과 북한 정권붕괴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지만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며,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계승해왔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체제를 지향하며, 남북화해·협력, 남북연합, 그리고 통일 국가완성을 평화적이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²²⁸⁾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1민족 1국가 2체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역대 대한민국 모든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글자 하나도 수정한 적이 없다.

김 위원장의 반통일선언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북한 주도의 통일을 거부하고, 대한민국과 완전히 유리된 상황에서 독재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에 불과하다. 반통일선언은 체제경쟁에서 실패해 글로벌 대한민국의 위상과 마주한 상황에서 취약한 정권을 유지하고 북한 내부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김정은 체제의 고육책일 뿐이라는 점을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민족의 개념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족 인식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민족은 북한체제에서도 중요시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특히 민족은 김일성의 이상화와 신화화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김일성은 민족의 지도자로 미화되었다. 일제강점기 김일성의 활동을 미화하기 위해 조작된 노래 ‘조선의 별’²²⁹⁾도 김일성이 조선민족의 지도자임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다부작 예술영화의 제목도 ‘민족과 운명’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폐기를 지시한 조국통일3대헌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1980년 고려연방공화국창립방안, 1993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 세 가지를 통칭한 것으로 핵심개념이 민족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그동안 북한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져왔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종합한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반민족선언으로 북한체제의 역린을 건드린 셈이다.

한민족 근현대사는 외침으로 얼룩져 있으며, 우리는 일제 강점이라

228) 『노동신문』, 2024.1.16., *op. cit.*

229) 북한은 ‘조선의 별’을 1928년 만주에서 김혁이 김일성을 칭송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김일성은 16세에 불과한 무명이었고, 김혁은 7년 연상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선전은 신빙성이 없다.

는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한민족은 완전한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단일민족 개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에 해당한다.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도 역사와 공동체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반민족적 인식은 한민족 구성원에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동일한 한민족임을 부정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은 전세계 한민족의 공적임을 선언하고, 스스로 반민족세력임을 자인해 고립을 자초했다. 5000년 한민족사에서 80여 년에 불과한 김씨 일가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민족이 아닌 김일성민족, 김정일·김정은조선으로 북한을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독재체제 유지가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김정은 정권의 반민족성을 전면적으로 공략하고, 전세계 한민족과 연대해 2민족론의 부당성과 반역사성을 부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을 교전 중인 두 국가간의 관계로 규정해 한반도를 일거에 전시상태로 전환시켰다.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교전상태로 전환된 셈이며, 군사적 긴장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체제 유지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남북한 구성원 모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특히 식량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전시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기 북한경제는 최악의 상태이며, 대북제재의 장기화와 국경봉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대외무역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교역은 2023년 22억 9천538만 달러(약 3조 1천억 원), 수입 20억 350만 달러(약 2조 7천억 원), 수출 2억 9천 189만 달러(약 3천 920억원)로 약 17억 불이 적자다.²³⁰⁾ 대북제재로 수출의

230) “지난해 북-중 교역 전년대비 137%↑… ‘코로나’ 이전 82% 수준,” 『KBS뉴스』, 2024.1.18.

대부분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필수품 수입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북한의 무역적자 누적과 외화고갈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사이버 범죄와 유엔결의로 금지된 해외노동자가 북한 외화수입의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평양시의 경우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등 김정은 정권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지방의 경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북한의 지방 경제를 '세기적인 락후성(낙후성)'²³¹⁾으로 평가했으며,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정치적 문제'²³²⁾라고 규정했다. 북한에서 정치적 문제는 체제 위협요소를 의미하며, 주민들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비평화적 인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주민 희생을 기반으로 전시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의 불합리성과 비인도주의적 성향을 적극 공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를 선언함으로써 체제경쟁의 실패를 자인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희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김정은 정권의 반민족, 반역사성을 적극 공략하고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의 분리

김정은 위원장의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선언은 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며, 그동안 북한의 대남정책과도 근본적으로 상반된 것이다. 장기간 북한 주민들은 통일민족국가를 지향하는 북한

231) 『노동신문』, 2024.1.16., *op. cit.*

232) 『노동신문』, 2024.1.25., *op. cit.*

식 평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에 공감해왔다. 김 위원장의 선언은 스스로 북한 주민과 괴리되어 오로지 독재체제 유지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는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의 반민족적, 반역사적 인식과 행태에는 적극 대응하되 북한 주민을 통일의 동반자로서 적극 포용해야 할 것이다. 헌법상 한반도 전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은 잠재적인 우리 국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는 이유이다.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노력과 함께 북한 주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무한책임론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²³³⁾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투명성을 전제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언 자체만으로도 북한 주민에게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이 경제난과 주민의 희생을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며 반민족적, 반역사적 인식을 드러낸 상황에서 ‘한반도선언’은 그 자체로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북한 변화 견인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

233) 조한범, ‘남북관계 정상화 가능성,’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 79~80.

되어야 한다. 독재체제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장기간의 과정을 통해 성숙된다.²³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구 소련권 국가들 대부분에서는 전체주의 정권이 장기독재를 이어가고 있다. 재스민혁명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민주화 역시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긍정적 변화를 위한 내부 동력의 형성은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화에 중요한 이유이다. 4·19혁명에서 시작되는 장구한 민주화의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독재체제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며, 체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주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은 3대 세습의 장기독재와 강력한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내부의 변화 동인이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다.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체제 내 변화를 위한 맹아를 형성하는 일이며, 북한 주민 스스로가 당면 문제 해결과 긍정적 미래를 향한 의지를 결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재체제의 민주화와 자유화 과정에서 객관적 정보와 진실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북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진실을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내 긍정적 변화를 견인·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북한의 민주화·자유화 및 통일로드맵의 구현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효율적인 협력체제가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²³⁵⁾

234) 조한범,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 262.

235) 조한범, “남북관계 정상화 가능성,” p. 80.

(2) 대내전략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2국가론에 대해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일부 동조하는 기류²³⁶⁾가 있으며, 전쟁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²³⁷⁾ 우리 사회 내부의 2국가론은 분단체제의 장기화로 인한 이질성의 증가와 남북한이 국제법적으로 유엔에 가입한 개별국가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2국가체제로 전환할 경우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담고 있다.

한반도 2국가론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며, 반국가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2국가론은 평화공존이 아닌 핵강압에 기반을 둔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 사용조건을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해, 사실상 자의적인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해 놓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4년 1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²³⁸⁾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을 완전한 타국으로 규정한 자신의 언급과 상충된다. 국제법적으로 전쟁을 통해 타국을 편입시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고려연방제 통일은 포기했지만 핵무기를 활용한 무력통일 노선에는 변함이 없다

236) “차제에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재정립해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협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효과적일 수 있다.” ‘북,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규정… ‘투 코리아’ 정책으로 급선회,’ 『문화일보』, 2024.1.16. “주권 국가이자 유엔 회원국인 동시에, 종족·혈통·언어가 같다는 점만 빼고 주권·국가·이념·체제가 분리되거나 정반대인 정치공동체가, 두 독립국가가 아닐 이유와 필요는 전혀 없다.” ‘공존과 평화: 두 번째 70년을 향해,’ 『중앙일보』, 2024.1.26.

237) 2024년 1월 24일 개최된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평화의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통일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북한의 전쟁은 정의(正義)의 전쟁관”, “북이 전쟁이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등의 발언이 있었다. ‘평화위협서라면 北 전쟁관도 수용,’ 『조선일보』, 2024.1.31.

238) 『노동신문』, 2024.1.16., *op. cit.*

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의 위선적인 한반도 2국가론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 안의 2국가론에 대해 철저한 비판과 아울러 논의 제기 및 확산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남북회담과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²³⁹⁾했으며, 금년 1월 12일부터 남파간첩들에게 난수방송으로 지령을 내려온 평양방송이 중단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파간첩과 대한민국 내 친북세력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남파간첩과 대한민국 내 친북세력들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통일전선전략 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활용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남북을 교전국관계로 전환한 상황에서 남파간첩들의 성격은 자동적으로 전시요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남파간첩의 임무는 남북 교전국관계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남 교란, 테러, 하이브리드전 수행 등으로 변화하게 될 우려가 있다. 북한판 '외로운 늑대'와 '지하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대외전략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현 상황을 신냉전·다극화²⁴⁰⁾로 규정함으로써 북한판 신냉전전략 구사 의도를 밝혔다. 북한은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쟁의 발발로 러시아와 북한은 전면적인 관계발전과 아울러 군사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신냉전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미·중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전쟁의 영향으로 유엔안보리는 사실상 식물상태로 전략

239) 『노동신문』, 2024.1.15., *op. cit.*

240) 『노동신문』, 2023.1.1., *op. cit.*

해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개발에 대해 2017년 12월 이후 그 어떤 제재나 결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신냉전외교와 아울러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과는 달리 미국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하고 있으며,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 부분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2024년 1월 김정은 위원장 군수공장 시찰 당시에는 반미구호를 모자이크 처리한 정황도 포착되었다.²⁴¹⁾ 북한은 미·북협상이 진행 중이던 2018년 9월 정권수립기념일 열병식에서도 탱크에 부착된 반미구호를 모자이크 처리한 바 있다.²⁴²⁾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 즉 핵보유 인정 및 대가 확보와 미·북관계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 일각에서 핵군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미 수위를 조절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협상의 기회로 활용할 개연성이 있다.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일제강점기의 만행과 최근 일본의 동향에 대한 비판 기사를 주기적으로 게재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6일 김 위원장은 일본 기사다 총리에게 지진피해 위로전문을 보내면서 이례적으로 ‘각하’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은 납치자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100억에서 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수교배상금 때문에 일본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2022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전격적으로 방북한 배경이다.

24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2024.1.10.

242) “김정은 군수공장시찰 사진, 반미구호 모자이크 이유는,” 『RFA자유아시아방송』, 2024.1.17.

북한은 중국, 러시아 중심의 신냉전외교를 기반으로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의 여지를 뒤편으로써 한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신냉전외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핵군축론이 미국에서 제기되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할 것이다. 핵군축이 진행될 경우, 우리는 북핵 위협 속에 미국의 확장억제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핵군축론이 현실화될 경우 전술핵 반입, 농축·재처리권한·핵추진잠수함 확보 등 잠재적 핵능력 구축, 그리고 독자핵무장 등 다양한 카드를 레활용해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혈맹이자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지만 국제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중국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노골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부담이다. 중국 내 탈북민의 안전을 위해 중국과 ‘조용한 외교’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기술과 장비를 제공할 경우 북한의 정찰능력과 재래식 전력의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러·북 간 군사협력의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수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시나리오를 우려한다는 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이 종식될 경우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보다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시베리아·극동개발전략과 신동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아닌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²⁴³⁾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서도 북방정책의 여지는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243) 조한범, “2024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및 대응 방향,” 『국가안보전략』, vol. 13, issue 1 (2024), p. 24.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consisting of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Two large, gray, circular shapes are integrated into the design. The upper circle is partially filled with a grid of small dots, and the lower circle is also partially filled with a grid of small dots. The overall aesthetic is clean and modern.

V. 전략적 고려사항

저자 일동

본 장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강조한 전략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한다.

〈대남전략 전환의 대내 통치 전략적 목적〉

노선 전환의 대내 통치전략적 의도를 살펴보자. 첫째, 주민의 남한 동경 차단 위한 대남적개심 고취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 및 비사품조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중으로 한국의 자유로운 시민 정신과 자본주의 기풍이 은연 중에 전파되며 북한의 폐쇄적·독재적·수구적 질서에 대한 모멸과 비판 의식이 간접적으로 함양되는 파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의 문화 통제 법령의 제정으로 한국문화의 침투 및 확산에 대한 체제 보위 강화에 나선 것은 북한의 우려와 공포를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번 대남·통일 노선 전환은 북한 주민과 간부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남한에 대한 동경심과 친남한화를 방지하면 남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지배층의 두려움과 남한과의 체제경쟁에 대한 자신감 결여에서 기인한다. 한국을 배타적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반민족적 조치로 대남적개심을 고취시켜 북한 내부의 한류를 탄압하고, 남한을 동경하거나 추종하는 친남한화를 뿌리 뽑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둘째, 핵무력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지다. 국가 자원이 핵무력 건설에 집중되면서 악화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에 대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이는 핵무력 건설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내부 요인이다.

김정은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인민들의 불만을 유발해서 당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붕괴시키려한다”고 진단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행정책을 지지·성원

한다며 적들이 오판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내부적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김정은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은 이번 대남노선 전환을 통해 남한을 불변의 적대국으로 규정해서 핵무력 건설을 정당화해서 간부와 인민들의 반대를 제압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대내 통치용 전략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이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강력한 <주민 사상 재교육> 및 <규율 강화 대중 캠페인>과 '실전형 전시동원체제 실행'을 연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동요하는 추종자들과 피지배 주민들을 총동원체제 하에서 감시·통제하면서 체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김정은의 세습 정통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의도적으로 외부적 위기를 조성하여 고통스러운 독재체제 안정화 조치들, 그리고 주민들의 내핍과 희생을 강요하는 핵 무력 고도화 정책을 정당화하려 들 것이라는 점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북한의 '새로운 입장'과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김정은은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감행했다. 그 핵심은 남북관계를 '전쟁중인 교전국가' 관계로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대남관계를 '대적사업' 차원으로 '근본적인 방향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2023년말/2024년초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에서 북한의 '새로운 입장'은 대부분 새롭지 않은 것이다. '새로운 입장'이 대부분 새롭지 않다는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년대 초중반과 2023년말/2024년초 시기 북한의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관한 입장을 비교하면 드러난다. 두 시기에 있어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다. 첫째, 한국 <민주>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평가는 적대적이었다. 둘째, 햇볕정책 시기에도 북한은 내부적으로 무력통일론을 견지했다. 셋째, 북한은 항상적으로 한반도가 전쟁 직전

에 처해있다고 생각했다. 넷째, 북한은 항상 전쟁발발을 기회삼아 무력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섯째, 2000년대 초반 선군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력 강화를 경제분야 최상위 목표로 삼았던 경제노선이 부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2023년말/2024년초 북한의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지난날 북한의 대내/대남 정책은 표리부동의 이중 노선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대외 선전용 또는 대남 청중용 노선이 있었다. 이 노선은 <우리민족끼리 + 자주평화통일 + 침략억제 + 인민생활증진>의 논리 연결고리를 가졌다. 둘째, 대내 청중용이자 실효적인 그러나 대외비 전략 노선이 있었다. 그 노선은 <대적투쟁 + 무력통일 + 침략전쟁 수행 + 국방력 강화>라는 연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개의 각 전략 개념에서, 하위 개별 요소는 서로 보완하고 상승작용을 한다. 이 두 전략 노선 중에서 대내용 전략 노선은 과거 대남청중에게는 대외비 성격 즉 ‘내부에 한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2023년말/2024년초 김정은은 대외/대남 청중용 전략논리를 폐기하고, 과거 전적으로 대내 청중을 향해 설파하던 전략논리를 대외 청중을 향해서도 공식적으로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새로운 입장’이라 발표되었다.

북한의 ‘새로운 입장’과 관련해서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가장 적대적으로 교전하는 두 국가’관계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통일정책은 두 가지 강조점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동족/동질관계의 거부에 맞서) 1000년의 통일국가의 유산인 남북한 주민간 언어와 문화와 역사의 공유 그리고 혈연적 연계를 중심으로 한 동족관계와 동질관계를 강조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교전국가론 및 대남

무력점령론에 맞서) 남북간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점진적 평화통일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남북간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의 방도 모색, 자유와 인권보장, 그리고 민주와 복지, 그리고 체제간 선의의 경쟁을 강조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 한국은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취한 ‘새로운 입장’이 북한 내부에 야기할 혼란을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한국은 체제경쟁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오만(hubris)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의 열세가 강화되는 것은 한국의 안정과 번영 파괴하고자 하는 북한의 대남 공격성이 강화되는 것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북한의 ‘새로운 입장’은 북한의 군사적 차원의 대남 적대시 실효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차원의 조치로 간주해야 한다. 특히 정찰총국이 관장하고 있는 사이버 차원의 다양한 공격, 대남 비밀 또는 혼합 군사행동, 한국내 인물과 기관에 대한 직접 협박 또는 테러와 같은 파괴공작 능력이 확충될 것이다.
- 4) 한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능력 증가 및 의도 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최소한 상쇄조치, 바람직하게는 압도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쇄조치 구현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5) 북한의 2030년까지 전략목표는 강압적 목표, 즉 “확전을 통제하고 정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수준의 보복을 당할 위협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핵무기 위협을 포함하는 위협 또는 군사력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일련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²⁴⁴⁾이 될 것이

244)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orth Korea: Scenarios for Leveraging Nuclear Weapons Through 2030*,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January 2023). 이 문서는 2030년까지 북한이 추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수준의 목표를 구분한다. 강압적/공세적/수세적 목표이다. 이 문서는 2030년까지 북한이

다.

- 6) 북한은 단독으로 운신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군사적 능력과 국제정치적 운신공간을 확장하고 있는바, 한국이 이를 상쇄하고 압도하자면, 한국은 범서방권의 강화에 적극적 기여를 통해 자신의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
- 7) 북한의 군사능력강화와 대남 공세성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을 예견하면서,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미·중 경쟁, 미·러대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후원도 장기화할 것이다. 현재의 이러한 국면 하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는 핵심 국익, 즉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영향력 축소라는 국익을 공유하며, 따라서 상호 협력할 것이다. 3국간에 전술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구조적 이익은 공유된다.
- 8) 한국은 북한이 앞으로 5년 정도 북한의 수정주의적 공세가 절정에 이를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을 지금처럼 지지하는 국면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방력 급진적 강화의 추가적 가속화’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높은 비용 지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국면의 기본구조가 변화하기 이전, 무엇인가 가시적인 전략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압박에 빠져 있을 수 있다.
- 9) 한국의 통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취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과의 장기 게임에서 압도적 힘의 우세를 통해 전쟁발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한반도 안보구조를 자신에 유리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저지하는 한편, 범서방권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힘의 관계가 한국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데 기여하고, 한국은 적극

강압적 목표를 추구할 것으로 판단한다.

적 기여를 통해 국제정치적 입지와 발언권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내부의 다원성 증대 및 북한주민의 정치적 역량증진에 기여함으로써, 통일 성취의 역사적 기회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내적·외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북한 대외·핵전략에 대한 함의와 우리의 대응〉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전환은 외교·안보적 동기와 배경도 작용했다. 북한의 핵을 통한 대외 생존환경 구축과 대남 적화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북한이 탈민족적 국가주의를 동원하고 핵무기로 무력 통일을 시사한 점은 남북관계를 민족적 관점에서 설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불리하고, 핵무기를 동원한 대남 강압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절실함을 반영한다. 북한은 과감한 전략 전환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우리의 통일 의지를 좌절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동북아·한반도 안보 구조를 새롭게 구축하려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한반도 전쟁위기로 확대 재생산, 중·러·북 연대 강화, 핵보유국 지위 확보등을 단기적·중장기적 핵심 과제로 설정했을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와 과제 수행을 위해 대남 핵 강압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 강압전략은 대미 핵 강압 외교와 대남‘묵시적 선전포고’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이 향후 대남 핵 강압을 통해 핵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① 핵 강압을 통한 대남 제압, ② 핵 능력을 활용한 무력 통일, ③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한 안보 자주성 확보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를 휴전이나 정전상황이 아닌 전시상황이라 규정했다. 이는 한반도를 중동과 같은 분쟁 지역화 하려는 의도이다. 이 경우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남한 내 대북 정책에 대한 갈등 유발

→ 남한의 북한 비핵화 정책 변화 유도 → 남한의 미·북 군축 협상 찬성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반도에 전쟁 위기론을 확산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강화를 부추기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한휴 확산을 차단하고 전시 동원국가체제로 전환해 정권의 내부 생존력을 제고하려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노골적 대남 핵 위협 수준을 보면, 북한은 남한에 대한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그 이익도 계산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는 행태는 ① 핵 무력 시위, ② 제한적 핵무기 사용, ③ 전면 핵전쟁 불사 등 세 가지이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고려할 때 실제 북한이 전면전을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을 것이다. 능력이 부족하고 큰 대가가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적 핵무기 사용 또한 의도하지 않은 확전에 대한 부담으로 북한이 선뜻 채택하기 힘들다. 하지만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핵무기를 시위하는 방식의 강압은 상당히 유력하다. 새로 개발한 전술 핵무기를 전격 공개하거나, 한미연합훈련 기간 실전 전투명령을 내리고 핵무기 발사 준비의 노출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 경우 남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무력 흡수통일할 수 있다고 의심하겠지만, 남북한 공포의 핵 균형 체제의 등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남한이 북한 비핵화 정책을 후 순위로 미루고 핵을 통한 상호공존과 핵 군축을 시도할지, 혹은 자신들과 핵 군비 경쟁을 공세적으로 하고자 할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공포의 핵 균형으로 인해 당분간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 상황이 좀 더 안정화되었다고 오판할 여지도 있다.

북한의 외교·안보와 대남전략·전술의 전환은 우리의 새로운 대응 체계를 요구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북한의 강압전략을 대항한 ‘역 강압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는 “북

한의 의지와 행동, 정책을 힘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전환”시키려는 공세적 전략이다. 북한의 과감한 도발이 유력하고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응 전략의 방향은 북한의 의도, 노력, 성과 모두를 즉각 무력화하고 불필요하게 만드는 대북 강압 체계가 필요하다.

외교적 차원에서는 첫째, 현재 한반도에는 약 230만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므로 북한의 핵 무력을 동원한 한반도 무력 통일이 인류 전체에 대한 핵전쟁 위협이라는 명분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가장 불리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유리한 동북아 정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와 중·러·북북 3국 연대의 약화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역내 영향력을 단기간 높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롭다. 셋째, 중국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One Korea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한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묵시적 선전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 최우선적 목표는 ‘북핵 억제력 강화’임이 분명하며 단기적·중장기적 차원에서 각각 2가지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워싱턴 선언의 신속한 제도화를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또한 대내외 전쟁위기론의 부상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쟁위기론을 통한 대북 정책의 정쟁화는 북한이 노리는 심리전의 일환이고 강압전략의 효과에 해당되므로 치밀한 논리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우선 북핵 억제 → 북한 변화 → 북한 비핵화 → 평화 체제 → 평화통일의 로드맵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3축 체제의 완성 시점을 앞당기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향후 도발 양상 예상과 대책〉

김정은의 대남정책 전환 목표·의도·성격으로 볼 때 그 전개 방향은 ▲‘비평화적 방법’의 대남전략 구사, ▲9차 당대회를 앞둔 ‘체제관리 전략 차원’에서의 전략 구사, ▲유리한 내외정세 전개 인식에 기초한 ‘공세적’ 대남전략 구사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핵전쟁 위협을 비롯해 국지도발과 남한 사회 혼란 조성을 위한 사이버 공작을 병행하는 복합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위협은 단발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앞으로 2년 기간에 점진적으로 고조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대남정책 전환에 따라 북한이 취할 조치는 내부 조치와 대남 조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내부 조치는 김정은이 1월 시정연설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헌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4월 최고 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을 수복·편입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추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남조선 평정 준비’를 위한 후속 조치도 강화할 것이다.

김정은은 연초부터 군대의 싸움 준비는 물론 ‘전민항쟁 준비’를 강조했다. 민간무력에 대한 훈련과 동원태세를 강화하면서, 전시 예비물자 비축, 주민 대상 전시 대피 훈련으로 당장 전쟁을 일으킬 듯 내부 긴장 수위를 높일 것이다. 대남사업체제 정비 차원에서 당 통일전선부도 김정은 지시대로 ‘정리·개편’될 것이다. 그러나 정리·개편 방향은 폐지가 아닌기능 재정립 및 명칭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통전부의 기능인 ‘대적(대남) 관계 업무나 조총련·재중총련 등 해외 동포 업무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을 새롭게 명기함에 따라 NLL과 MDL에서의 충돌이 우려되고, 남한 사회에 전쟁 위기 주입을 위한 심리전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 사회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 걸기 전술을 시도할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과거와 같은 ‘탄핵정

국'의 재발을 기대하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유도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단순히 대남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군사·외교를 아우르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대남 핵전쟁 위협과 함께 중·러·북 연대를 통한 압박전략, 대남 침투·도발을 통한 혼란 조성 등 하이브리드 방식이 될 것이다.

다음은 대남도발 전망이다. 김정은이 대적 관계로의 전환과 전쟁 위협 고조를 통해 노리는 효과가 대남 전쟁·평화 프레임 걸기, 대미 대북정책 전환 압박, 내부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 정당화 및 긴장 조성 등으로 복합적·다차원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도발은 강도 높은, 복합도발이 예상된다. 예상되는 도발은 ▲한국 사회에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걸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조약에도 영향을 미치며, ▲도발의 귀책 사유를 한·미에 전가할 수 있거나 도발 주체가 모호한 회색지대 도발을 피할 것이다.

예상되는 도발의 성격은 미국 여론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고 중·러와의 연대 효과도 활용해야 하므로, 핵미사일 도발이 포함될 것이고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성격의 복합도발이 예상된다. 또 북한이 도발하는 의도가 2026년 1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 거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발성보다는 도발 효과를 보아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점증형 도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정치 일정 진행, 의식주 등 경제문제에 집중 필요성, 중·러와의 접근 강화 등은 극단적 도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 요컨대, 향후 북한의 도발은 전쟁 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고강도·복합도발·책임 전가형·점증형 성격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NLL·MDL 충돌이나 천안함 폭침 유사 도발을 시작으로 2013년 3월의 전방위적 전쟁 위협, 2015년 8월의 준전시상태 선포, 2017년의 핵미사일 도발이 함께 어우러지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와 같은 단발성 도발로는 한·미에 '전쟁 대 평화'

프레임을 걸기가 어려움을 북한도 잘 알고 있으므로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복합도발이 우려되며, 한국 사회 교란을 위한 사이버 공격도 강화할 것이다.

도발 시점은 올 3, 8월 한미 연합훈련(자유의 방패)을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올 4월 한국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이 계기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도발을 가상한 올 8월 한미의 UFS 훈련 직후, 미국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7.15.~18.)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직후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진행되는 시점인 8월 말~9월 시점을 북한이 도발의 적기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도발이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추구하는 '남반부 평정'이 '불가능한 장기적 희망'에 불과하며, 정책 전환, 대적 교양, 경제재건 등 내부적으로 취할 조치들도 산적해 있고, 대남정책 전환이 성과 내기 차원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및 도발에 따른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 및 대책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의도를 우리 사회에 정확히 알려 북한의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은 극도의 긴장 조성으로 남남갈등, 한·미 이간을 도모하고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정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박하고 있다. 따라서 도발 수위와 강도는 높을 것이나, 자멸을 의미하는 전쟁에 배팅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북한의 말 폭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나,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강압을 위한 북한의 도발이 장기화될 것이므로 차제에 우리도 민방위 훈련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춰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 8월부터 시행하는 UFS 훈련의 '핵 작전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계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아인언돔의 방어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정보역량과 MD 체제 보강이 요구된다. 북한의 비핵

화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쟁할 결심과 함께 대화할 결심도 필요하다는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가 필요하다. 북한이 상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음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국가 위기관리의 중점을 응징적 억제에만 두면 도발 예방 효과는 높일 수 있으나, 실제 도발로 이어지면 확전될 가능성의 크고 초반부터 통제가 어려워진다.

좀 더 넓고, 길게 보는 대북정책의 일관된 구사가 절실하다. 지도자, 권력 엘리트, 주민 등 북한의 3주체를 고루 상대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하고, 평화와 통일을 배척 개념으로 간주하지 말고, 남북관계를 긴 안목에서 보고 통일을 포괄하는 평화 혹은 안보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중요하다. 북한 지도부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확고히 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관리하며, 끊임없이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은 견지되어야 한다.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의 확대재생산은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다. 국내에서 일부 거론되는 ‘평화공존형 두 개 국가론’은 북한이 공존이 아닌 대남 ‘점령·수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간과했고, 우리 헌법 질서와 대북정책에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며, 북한 체제의 실패는 역사적 필연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우리도 북한 체제 진화(Regime Evolution)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대북·통일정책 정립 방안으로 공식적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자유’ 개념을 추가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 자극을 우려해 비공개적으로 추진해온 급변대비계획도 이제는 공론화하여 민간차원에서의 연구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 민주화 및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전략〉

대한민국은 한반도 2국가론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평화적 수단을 통한 1국가론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2국가론의 목적이 명분없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체제 유지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 2국가론이 가지는 반민족, 반역사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공략하고, 남북한 구성원은 물론 전세계 한민족과 협력해 한반도 2국가론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삼천리 금수강산’, ‘겨레’와 같은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5천년 한민족역사와 민족적 정체성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북한이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 인식이 확고하게 드러난 만큼 이를 공세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

반통일선언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북한 주도의 통일을 거부하고, 대한민국과 완전히 유리된 상황에서 독재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에 불과하다. 반통일선언은 체제경쟁에서 실패해 글로벌 대한민국의 위상과 마주한 상황에서 취약한 정권을 유지하고 북한 내부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김정은 체제의 고육책일 뿐이라는 점을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동일한 한민족임을 부정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은 전세계 한민족의 공적임을 선언하고, 스스로 반민족세력임을 자인해 고립을 자초했다. 5000년 한민족사에서 80여 년에 불과한 김씨 일가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민족이 아닌 김일성민족, 김정일·김정은조선으로 북한을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독재체제 유지가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김정은 정권의 반민족성을 전면적으로 공략하고, 전세계 한민족과 연대해 2민족론의 부당성과 반역사성을 부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상시화하고 대남 핵공격 위협을 명백히 한 김정은 정권의 비평화적 인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주민 희생을 기반으로 전시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의 불합리성과 비인도주의적 성향을 적극 공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를 선언함으로써 체제경쟁의 실패를 자인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희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김정은 정권의 반민족, 반역사성을 적극 공략하고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선언은 북한 주민과 괴리되어 오로지 독재체제 유지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는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무한책임론을 내용으로 하는 가치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언 자체만으로도 북한 주민에게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독재체제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며, 체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주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은 3대 세습의 장기독재와 강력한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자유화를 위한 체제내부의 변화 동인이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다.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진실을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효율적인 협력체제가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2국가론에 대해 우리 사회 내부의 동조 기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2국가론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며, 반국가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2국가론은 평화공존이 아닌 핵강압에 기반을 둔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 안의 2국가론에 대해 철저한 비판과 아울러 논의 제기 및 확산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을 교전국관계로 전환한 상황에서 남파간첩들의 성격은 자동적으로 전시요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남파간첩의 임무는 남북 교전국관계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남 교란, 테러, 하이브리드전 수행 등으로 변화하게 될 우려가 있다. 북한판 ‘외로운 늑대’와 ‘지하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중심의 신냉전외교를 기반으로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의 여지를 뒤편으로써 한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신냉전외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핵군축론이 미국에서 제기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핵군축론이 현실화될 경우 전술핵 반입, 농축·재처리권한·핵추진잠수함 확보 등 잠재적 핵능력 구축, 그리고 독자핵무장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혈맹이자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지만 국제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중국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노골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부담이다. 중국 내 탈북민의 안전을 위해 중국과 ‘조용한 외교’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러·북 간 군사협력이 선을 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카드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시베리아·극동개발전략과 신동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아닌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가면서〉

북한은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 교전국이자 군사 정복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심지어 핵 선제사용까지 공개 협박하고 있다. 위기가 목전

에 도달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이성적 협박과 강압은 기실 체제 수호에 대한 내적 불안과 초조감을 반증하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 민주 헌법 정신에 대한 확신과 결의, 그리고 의연하고 현명한 위기 대처로 닥쳐올 한반도 위기 상황을 오히려 통일을 향한 전기로 활용하는 지혜와 결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제』. 서울: 기파랑, 2013.
- 김부성. 『내가 판 땅굴』. 서울: 갑자문화사, 1976.
- 김진하·박형중 외.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문순보. 『북한의 도발 환경 비교 분석』. 세종정책연구 2012-13, 성남: 세종연구소, 2012.
-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오경섭 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23.
- 유용원·신범철·김진아.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 유진오. 『헌법해의』. 서울: 명세당, 1949.
- 이무철 외. 『북한 분야별 실태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 이만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황금알, 2004.
-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서울: 통일연구원, 2023.
- 정성윤·김민성.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24.
- 조한범.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통일연구원.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23.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 한기범.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서울: 선인, 2023.
- 합동참모본부. 『북한 대남침투 및 도발 사례집』. 서울: 합참정보본부, 2011.
- 재인용: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 합동참모본부. 『합동국지도발대비작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7. 재인용: 이영규.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1.
- 홍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Bell, Mark S. *Nuclear Reactions: How Nuclear-Armed States Behav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1.
- Bermudez, Jr. Joseph S.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London: I.B. Taurus, 2001.
- Copeland, Dale C. *The Origins of Major War*. Cornell: Cornell University Press, 2013.
- DeBenedictis, Kent. *Russian “Hybrid Warfare” and the Annexation of Crimea: The Modern Application of Soviet Political Warfare*. London: I.B. Tauris, 2022.
- Jervis, Robert.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no. 2, 1978.
- Kahn, Herman. *On Escalation: Metaphors and Scenario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 Mearsheimer, John J.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1990.
- Narang, Vipin. *Seeking the Bomb: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 Lieber, Keir A. and Daryl G. Press. *The Myth of the Nuclear Revolution: Power Politics in the Atomic A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0.
- Posen, Barry R. *Inadvertent Escalation: Conventional War and Nuclear Risks of International Stud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 Reiter, Dan. *How Wars En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 Sechser, Todd S. and Matthew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Snyder, Jack. *Myths of Empi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n*. Cornell: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Walton, Douglas. *Scare Tactics: Arguments That Appeal to Fear and Threats*. Toronto: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0.
- Wood, Dakota L. ed. *2024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2024.
- Woodrow Wilson Centr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Working Paper No. 39*.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02.

2. 논문

- 김진하.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순환도발 전략의 기원 및 권력 세습 이후 패턴 분석.” 『국방연구』, vol. 57, no. 1, 2014.
- 조한범. “2024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및 대응 방향.” 『국가안보전략』. vol. 13, issue 1, 2024.
- Bell, Mark S. “Beyond Emboldenment: How Acquiring Nuclear Weapons Can Chang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40, no. 1, 2015.
- McKay, Joanna Patricia. “The Official Concept of the Nation in the GDR: Theory versus Pragmatism,” Ph.D. Dissert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Summer 1995.
- Levy, Jack S. “Declining power and the preventive motivation for war.” *World Politics*. vol. 40, no. 1, 1987.
- Levy, Jack S. “Prospect Theory, Rational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issue 1, 1997.

Sagan, Scott D. “Armed and Dangerous: When Dictators Get the Bomb.” *Foreign Affairs*. vol. 97, 2018.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3. 북한자료

김정일. “《전시사업세칙》을 내움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 2004.4.7.

서재영·박제동·정수용.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초급선동일군들을 위한 강습제강. 평양: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2002.

조선노동당출판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혁명역사’ 제5장 제1절』. 학습제강.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22.

조선인민군출판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최근 인민군대에 주신 말씀의 중요내용에 대한 학습제강 (주체87년 6월~8월)』.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_____.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무력통일전략실현에서 적국와해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적공싸움준비를 다그칠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_____. 『남조선은 가장 반동적이고 부패한 사회이다』.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_____. 『모든 군인들은 너는 죽고 나는 산다는 혁명적 의지와 락관을 가지고 반미결사전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자』.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_____. 『미제와의 결사전에 대처할 수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철

저히 갖추자』.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_____. 『부쉬가 내놓은 새 《국가안보전략》의 위험성에 대하여』.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근로자』,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노동신문』.

4. 기타자료

『경기일보』, 『데일리NK』, 『문화일보』, 『연합뉴스』, 『월간조선』, 『월간중앙』,
『조선일보』, 『중앙SUNDAY』, 『중앙일보』, 『통일뉴스』, 『한겨레』, 『FNK자
유북한방송』, 『KBS』, 『RFA자유아시아방송』.

대한민국 대통령실 <www.president.go.kr>.

러시아 외무부 <www.mid.ru>.

연합뉴스 <www.yna.co.kr>.

열린시민뉴스 <openctz.com>.

통일부 <www.unikorea.go.kr>.

한국은행 <www.bok.or.kr>.

Chosun.com <news.chosun.com>.

Foreign Affairs <foreignaffairs.com>.

KBS <www.kbs.co.kr>.

Marxists Internet Archive <www.marxists.org>.

National Interest <nationalinterest.org>.

NK News <www.nknews.org>.

Nuclear Threat Initiative <nti.org>.

Redian <redian.org>.

TV조선 <news.tvchosun.com>.

War on the Rocks <warontherocks.com>.

38 North <38north.org>.

- 김병기. “통일 관련 헌법 개정 사항 연구: 통일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국회사 무처 정책연구 구용역 최종보고서, 2018.
- 오경섭.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 노선 전환 의도와 대응.”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24-01, 2024.
- 이규창. “북한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지속되어야 하는 평화통일 노력.”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24-06, 2024.
- 전봉근.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28, 2022.
- 제성호.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을 둘러싼 주요 쟁점: 법적 논리와 개정문제를 중심으로.” 법제처 연구보고서, 2008.
- 통일부. “선군혁명 영도 52돌 경축연회 및 김정은 연설,” 통일부 월간북한동향, 2012.8.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orth Korea: Scenarios for Leveraging Nuclear Weapons Through 2030.”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January 2023.

연구보고서

2021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 Study Series ■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Choon Geun Lee·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외식조사 2022	박주화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한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22-01	중국 20차 당 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 Study Series ■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3-04	북한 후대전환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 · 이해정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현승수 외
2023-10	KINU 통일외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문	이상신 외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 · 이우태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 · 김민성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 · 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사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 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 민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윤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 Study Series ■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KINU Insight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기 타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옹혜민 엮음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욕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흥민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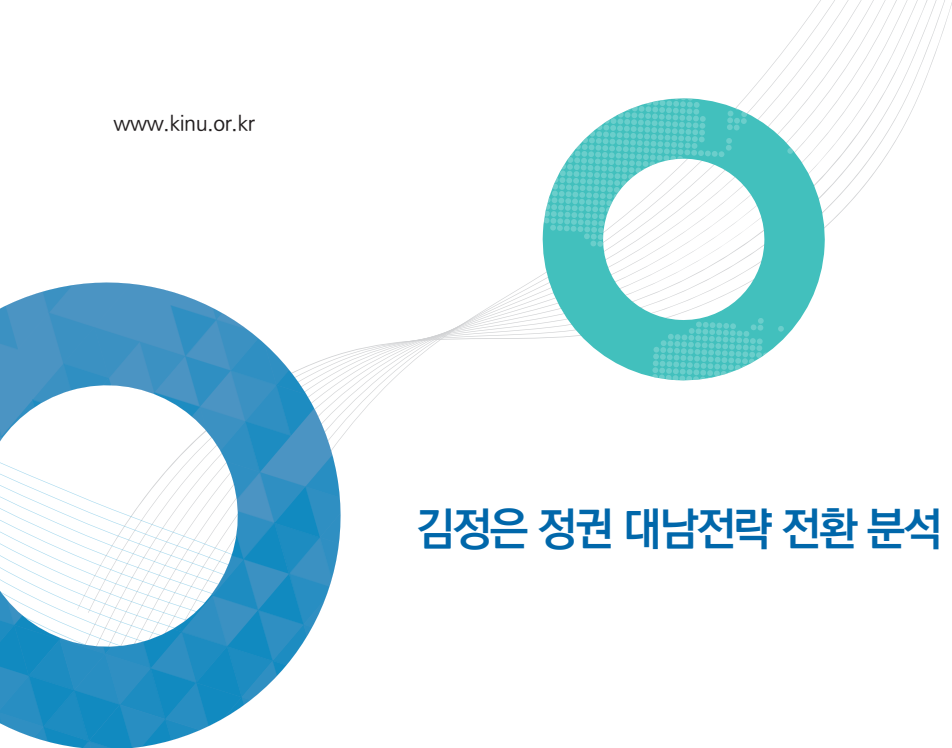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